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2021년도 시행계획



관계부처합동

차 례 CONTENTS



과 제		소관	페이지
1-1-1-①	불법촬영 현장 대응역량 및 수사 전문성 제고	경찰청	1
1-1-1-②	불법촬영물·아동성착취물 등 유통사범 엄정단속	법무부	3
		경찰청	6
1-1-2-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여가부	8
1-1-2-②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효율화	여가부	10
		과기부	12
		경찰청 방심위	14
1-1-2-③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법무부	17
1-1-2-④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보호	법무부	19
		경찰청	21
1-1-3-①	빅데이터 활용 디지털 성범죄 예방	경찰청	22
1-1-3-②	다중이용시설 수시 점검	행안부	23
		국토부	25
		복지부 지자체	26
1-2-1-①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불법 촬영기기 규제 관리	과기부	27
1-2-1-②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개인정보보호위	29
1-2-2-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음란물 차단기술 개발 및 현장 적용	과기부	30
1-2-2-②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제도 시행	방통위	32
1-2-2-③	영상물 재유포 방지(법정부 공공 DNA DB 구축)	방심위	34
1-2-3-①	약물이용 성범죄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력 강화	과기부	36
		여가부 경찰청	38
1-3-1-①	불법촬영물·아동성착취물 제작·유통사범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	법무부	39
		경찰청	41

과 제		소관	페이지
1-3-2-①	해외성매매 방지 체계 구축 및 단속 강화	외교부 여가부 경찰청	42
			43
			44
1-4-1-①	성매매 알선 정보 전달 매체 감시 강화	방통위 경찰청	45
			47
1-4-1-②	랜덤채팅앱 등 온라인 성매매 등의 불건전 정보 차단	여가부 경찰청 방심위	48
			50
			52
1-4-2-①	여성 1인가구 대상 성범죄 예방·대응체계 개선	경찰청	53
1-4-3-①	장애인 대상 학대·성범죄 피해 실태 파악 및 예방교육 강화	복지부	55
1-4-3-②	장애인 거주시설 폭력예방 강화	복지부	57
1-4-3-③	장애인 여성폭력 피해자 전문 지원기관 확대	여가부	59
1-4-3-④	장애인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종사자 역량 강화	여가부 복지부	59
1-4-4-①	사업장 대상 이주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점검	고용부 법무부	61
			63
1-4-4-②	이주여성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강화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64
			66
			68
			70
1-4-4-③	이주여성 폭력피해 예방활동 확대	여가부 고용부	72
			74
1-4-4-④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여성 폭력피해 점검	법무부 경찰청	75
			76
1-4-5-①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정보 접근성 확대	여가부 경찰청	77
			78
1-4-5-②	이주여성 폭력피해 신고 활성화	여가부 고용부 법무부	79
			81
			82
			83

과 제		소관	페이지
1-4-5-③	이주여성 보호·지원을 위한 지원기반 확충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여가부	85
1-4-5-④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 운영	고용부	87
1-4-5-⑤	폭력피해 이주여성 합법적 체류 허용	법무부	88
2-1-1-①	가정폭력 사건 대응력 강화	경찰청	90
2-1-1-②	가정폭력 재범 방지 조치 강화	경찰청	92
2-1-2-①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 현장 대응력 강화	경찰청	94
2-2-1-①	형사절차 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법무부	96
		여가부 경찰청	98
2-2-1-②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 활성화	법무부	100
2-2-1-③	2차 피해 방지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경찰청	105
2-2-1-④	신고처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및 조력자 보호강화	여가부	106
		고용부	107
2-2-2-①	형사절차 상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경찰청	108
2-2-2-②	가정폭력 피해자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여가부	109
2-2-3-①	형사절차 상 성매매 피해자 보호 강화	경찰청	111
2-2-3-②	수사 과정에서의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	여가부	112
		법무부	114
2-2-4-①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법무부	116
		여가부 경찰청	118
2-2-5-①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교육 신설		120
		법무부	125
		국방부	127
		고용부	127
		국토부	129
		대검 경찰청 해경	130
		131	

과 제		소관	페이지
2-3-1-①	재범억제를 위한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법무부 경찰청	133
			136
2-3-1-②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제도 관리 강화	여가부	139
2-3-1-③	성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법무부 여가부	140
			143
2-3-2-①	성구매자 교육(존스쿨) 효과성 분석을 통한 교육 운영 내실	법무부	145
3-1-1-①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교육부	147
3-1-1-②	교육 분야 인식개선 추진	교육부 여가부	149
			151
3-1-1-③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교육부	153
3-1-1-④	초·중·고등학교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 개선	교육부	155
3-1-1-⑤	대학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 개선	교육부	158
3-1-2-①	교원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 강화	교육부	160
3-1-2-②	재발방지 조치 강화	교육부	162
3-1-3-①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법령상 근거 마련	문체부	164
3-1-3-②	문화·예술계 여성폭력 예방조치 내실화	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166
3-1-3-③	문화·예술분야 가해자 등에 대한 제재 강화	문체부	168
3-1-3-④	문화·예술계 전담 상담센터 활성화	문체부	170
3-1-4-①	스포츠비리 조사 및 체육인 인권보호 전담기구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운영	문체부	172
3-1-4-②	폭력·성폭력 가해 체육지도자 자격제한 강화	문체부	174
3-1-4-③	체육인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및 상담 실시	여가부	175
3-2-1-①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여가부	176
3-2-1-②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 및 조치의무 이행력 제고	고용부	177
3-2-1-③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구제절차 내실화	고용부	179
3-2-1-④	사업장 대상 성희롱 예방 등 교육 지원	고용부 여가부	183
			185

과 제		소관	페이지
3-2-2-①	공공부문 사건 대응력 강화	여가부 인사처	187
			189
3-2-2-②	공공부문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문화 조성	행안부 인사처 여가부	190
			192
			194
3-2-2-③	기관의 사건 대응 및 재발방지 역량 강화	인사처 여가부	196
			198
3-2-3-①	군 성폭력 예방 강화	국방부	200
3-2-3-②	군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국방부	203
3-2-3-③	군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및 수사 역량 강화	국방부	205
3-2-3-④	징계 절차에서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국방부	207
3-3-1-①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여가부	209
3-3-1-②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여가부	213
3-3-1-③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	여가부 경찰청	215
			216
3-3-1-④	성매매피해자 탈성매매 지원체계 구축	여가부	217
3-3-1-⑤	성매매 관련 아동·청소년 지원시설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	여가부	219
3-3-1-⑥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효율화 및 지원 강화	여가부	221
3-3-2-①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강화	여가부 국토부	222
			224
3-3-2-②	성매매 집결지 폐쇄 추진 및 피해 여성 지원 확대	여가부 국토부	226
3-4-1-①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관련 법적근거의 일원화	여가부	228
3-4-1-②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 이행점검 내실화	여가부	229
3-4-1-④	폭력예방교육 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	여가부	231
3-4-1-⑤	지역 기반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강화 및 성평등 교육과 추진 체계 연계 필요성 검토	여가부	233
3-4-1-⑥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및 교육 강화	여가부	235

	과 제	소관	페이지
3-4-1-⑦	‘성 인권 교육’ 전국 확대를 통한 성인지 감수성 키우는 문화 확산	여가부	236
3-4-1-⑧	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맞춤형 콘텐츠 제공	여가부	238
3-4-2-①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여가부	240
3-4-2-②	여성폭력 추방주간 운영	여가부	242
4-1-1-①	성폭력범죄의 보호법익을 ‘성적자기결정권을 해하는 죄’로 변경	법무부	244
4-1-1-②	비동의 간음죄 신설 필요성 검토	법무부	245
4-1-1-③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 처벌 규정 개선 방안 마련	법무부	246
		여가부	247
4-1-1-④	성폭력 범죄 처벌 관련 조항 통합 검토	법무부	248
		여가부	249
4-1-1-⑤	의료기관 내 의료인 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복지부	250
4-1-2-①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규정 강화	법무부	251
4-1-2-②	가정폭력 가해자 수사 시 엄정한 조치	법무부 대검	252
4-1-2-③	가해자 격리를 통한 피해자 안전 및 신변 보호 강화	법무부	254
4-1-2-④	임시조치 집행력 제고를 통한 피해자 안전 확보	법무부	256
4-1-2-⑤	피해자보호명령 종류 및 기간 확대	법무부	257
4-1-2-⑥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필요성 분석 및 검토	법무부	258
		여가부	259
4-1-3-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법무부	261
4-1-3-②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사각지대 개선 방안 검토	법무부	262
4-1-4-①	디지털 성범죄 처벌 공백 보완	법무부	263
4-1-4-②	신종 온라인 여성폭력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검토	법무부	264
4-1-4-③	디지털 성범죄 기록물 삭제 비용 가해자 부과	여가부	266
4-1-5-①	온라인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행위 근절을 위한 법·제도 정비	여가부	267
4-1-5-②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의 피해자화	여가부	268

과 제		소관	페이지
4-1-5-③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와 형법상 의제강간죄 개정안과의 종합적 개정 방향 검토	여가부	269
4-1-5-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여가부	270
4-1-5-⑤	미성년자 성폭력피해자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성인까지 유예추진	법무부	271
4-1-6-①	성매매 전담 수사체계 구축 및 지속적 단속 추진	고용부 경찰청	273
			275
4-1-6-②	성구매자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 환경 조성	법무부	277
4-2-1-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여가부	279
4-2-2-①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처우 개선	여가부	281
4-2-3-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운영	여가부	283
4-3-1-①	여성폭력 전반에 대한 기본법 시행	여가부	285
4-3-1-②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여가부	287
4-3-2-①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운영	여가부	289
4-3-2-③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전담기구 마련	여가부	292
4-3-3-③	여성폭력 지원시설 간 네트워크 강화	여가부 지자체	295
4-3-4-①	여성폭력 통계 구축	여가부 법무부 대검 경찰청 통계청	297
			298
			300
			301
			302
4-3-4-②	여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여가부	303
4-3-4-③	여성폭력방지 정책 관련 성과지표 개발	여가부	304

□ 과제개요

-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다양화 및 탐지 전문교육 등을 통해 범죄 신고에 대한 현장 대응역량 강화,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 집중

□ 그간의 추진실적

-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다양화 및 현장경찰관 탐지 향상 교육 실시
 - 위장형·초소형 불법카메라 등 불법촬영기기를 더욱 정밀하게 탐지하기 위한 신규유형(적외선 탐지기 256대) 추가 도입 및 현장 배부
 - 개정 법률 및 불법카메라 탐지절차·기술 등을 담은 사이버 교육콘텐츠 제작
- 시기별·대상별 집중 예방·대응기간 운영
 - 신규 보급된 적외선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학교 등을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 대상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선제적 점검 실시(12,184개소)
 - 구멍, 낙서 등 위험요소 발견時 관리자에게 개선 권고(730개소) 및 지속 가능한 불법촬영 예방환경 조성을 위한 지자체 조례 제·개정 추진

□ 2021년도 시행계획

-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 전개
 - 신학기·하계기간 등 시기별·대상별 특성에 맞춰 신고 활성화·범죄 경각심 제고를 위한 예방 교육, 홍보 및 선제적 예방활동 전개
 - (신학기) △불법촬영 등 성폭력 예방 홍보 안내문 제작·배부 △SPO 특별예방 교육 실시 △학교 주변 취약요소 점검 △성폭력 예방 캠페인 등 추진
 - (하계기간) △여름경찰관서 내 「성범죄전담팀」 운영 △다중밀집장소 성범죄 발생요소 점검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점검 및 관광객 대상 홍보
- 불법촬영 범죄 현장대응 역량 강화
 - 지능화·다양화되는 불법카메라에 대한 탐지율 제고를 위해 △탐지기술 개발·도입 △범죄데이터 분석 및 탐지인력 전문교육 추진

- (무선 IP 카메라 탐지) 자체 개발한 탐지 기술(기기번호·신호감도 결합) 현장 상용화
- (협업 R&D) 국민·전문가용 불법카메라 정밀 복합탐지기 개발(행안부·경찰청, '19~'21년)

- 범죄통계 분석 및 지리적프로파일링 시스템 활용으로 지역별 대응방안 수립·시행, 협업체계 기반 교육·홍보로 대국민 불법촬영 근절 분위기 조성

○ 불법촬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성화

-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유관기관 및 여성단체와의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전개

※ 경찰청-여가부-방통위-방심위 「불법촬영물등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19.11월)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불법촬영 신규 탐지기기 보급 (무선 ip카메라 탐지장비)	-	85대	수기통계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담당자	박동아 경위	전화번호	02)3150-0938
------	----------------	-----	--------	------	--------------

□ 과제개요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19.12.25.) 및 “젠더폭력방지 추진기반 구축 및 인식 개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대검찰청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 성착취 불법영상물 유포 등 사건 엄정 대응 요구
 - 텔레그램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단체 대화방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협박, 성폭력 등 범행을 자행하는 불법촬영물·아동성착취물 유통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 요구

□ 그간의 추진실적

- '18.10. 「불법 촬영·유포 범죄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여 개정 및 시행
 - 피해자 몰래 촬영·유포한 사범뿐 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등 영상일지라도, 보복, 협박 등 수단으로 유포하는 등 죄질이 중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등
- '19.4.~12.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불법 촬영·유포 사건 공동연구
 - '18.12.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의 MOU 체결 후, 여성 폭력 범죄 관련 검찰 처리 사건 공동연구 진행, 불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의 처분 실태 등 분석
- '19.11. 불법 촬영·유포 사건 엄정 대응 지시
 - 「불법 촬영·유포 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도록 지시
- '20.3. 성착취 불법영상물 유포 등 사건 엄정 대응 지시
 -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착취 불법영상물 유포 등 사건 관련 영리 목적 유포,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제작 등 사범 원칙적 구속 등 카메라 촬영·유포 사범 사건처리기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사건처리기준 등 철저히 준수, 엄정대응 지시

- '20.3. 전국 여성아동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 개최
 - 일선 수사상황 점검,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범죄 수익 환수 방안 등 논의
- '20.3.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전국적 수사지휘·지원 체계 구축
 - 전국 18개 및 수도권 차치지청에 전담수사팀(팀장: 부장검사) 설치, 기타 청은 전담검사 지정
- '20.3. 성착취 영상물 관련 수사 참고자료 제공 등 일선 지원
 - 의율 죄명, 적용법조, 법률적 쟁점 등 법리검토 자료(형사부), 신종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죄 등 의율 검토, 형법상 범죄 단체 및 범죄집단 법리 검토 자료(반부패강력부) 등 일선 지원
- '20.4.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 엄정 대응 지시
 - 불법촬영·유포 사범과 다른 새로운 유형의 성착취 범죄에 집중 대응, 대폭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성착취 영상물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 지시
- '20.5.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 토론회
 -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유관기관 합동 토론회 개최
- '20.10~ 「성범죄 사건처리기준」 T/F 운영
 -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 제·개정 내역 반영 및 현행 성폭력범죄 사건처리기준 중 신설·개정할 내역 논의

□ 2021년도 시행계획

- 「성범죄 사건처리기준」 개정(연초)
 - 최근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 제·개정 내역 반영, 현행 성폭력범죄 사건처리 기준 중 신설·개정할 내역 논의, 주요 성폭력사건 판결문,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등 검토·반영
-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강화(연중)
 - 수사과정에서 성착취물 삭제 관련 유관기관 연계하여 삭제 지원, 그 외 법률적·경제적·심리적 지원 철저

○ 철저한 범죄수익환수로 범행 동기 차단(연중)

- 비트코인 등 인터넷상 통화 대체수단에 대한 철저한 몰수·추징 보전으로 범죄 수익 박탈, 동기 차단

○ 예산 현황

- 해당없음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음란물 소지, 제작·배포 사범 기소율(%)	29.83% ('20.01.~'20.10.)	30.0%	검찰통계시스템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법무부 형사기획과	담당자	이갑호 주무관	전화번호	02)2110-3271
------	-----------	-----	---------	------	--------------

1-1-1-②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 등 유통사범 엄정단속

□ 과제개요

-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 불법유통망과 제작·유통 사범에 대해 시도경찰청 전담팀을 중심으로 신설·처벌 강화된 법률을 적용해 엄정 단속

□ 2020년 추진실적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수사 및 피해자보호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총력 단속체제 가동
 - ※ 지방청은 수사 담당 부장이, 경찰서는 서장이 각각 수사단장을 맡아 전국 경찰관서에 총 4,283명(수사단 3,118명, 피해자보호단 1,165명) 편성
 - '20. 12월말 기준 디지털 성범죄 사범 총 2,807건 3,575명을 검거하고 245명을 구속하였으며, 3,076명을 기소 의견 등 송치하고 499명 수사 중
 - 상반기에는 '박사방', 'n번방' 등 주요사건의 주범과 공범을 대부분 검거하여 공급 근절하고, 하반기에는 무료회원을 포함한 소지자 집중 단속하여 수요 차단

<단, 수기통계로 변동 가능성 있음>

	건수	총계(구속)	제작·운영자	판매·유포자	구매·소지자	기타
총계	2,807	3,575(245)	511(166)	1,170(60)	1,875(15)	19(4)
성착취물	1,891	2,810(201)	429(154)	509(29)	1,854(14)	18(4)
불법 성영상물	916	765(44)	82(12)	661(31)	21(1)	1(0)

- (성착취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협박·강요를 통해 제작한 성영상물
- (불법 성영상물) 불법촬영물·불법합성물 등 성착취물을 제외한 불법 성영상물

- 피해자 전담 조사관(여경)을 중심으로 신고 접수부터 사후 연계까지 쏠 과정을 걸쳐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 12월말 기준 피해자 총 1,094명 대상으로 총 4,387회 보호·지원 실시

□ 2021년도 시행계획

○ 사이버성폭력 유통망 및 유통 사범 집중단속

- (단속 기간) '21.3.2.~10. 31. (8개월 간)
- (단속 추진체) 시·도 경찰청 직접수사부서 전담팀 및 경찰서 사이버팀 등
 쏘 경찰관서 수사팀 중심으로 집중단속 전개
- (중점 단속 대상) 사이버 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중점 단속

불법유통망	불법유통물	불법유통행위
① 텔레그램·디스코드 등 보안메신저(SNS)	① 성착취물	① 사이트 제작·운영
② 웹하드 카르텔	② 불법촬영물	② 촬영·제작
③ 해외 불법사이트	③ 불법합성물	③ 유통·판매
④ 신종 불법유통망	④ 불법성영상물	④ 구매·소지·시청

- (중점 추진 사항)

- (시스템 활용 단속) 신고 접수 및 수사 착수 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기반으로 수사
 단서를 활용해 엄정 단속
- (피해확산 방지) 여가부·방심위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 24시간
 상시대응체계 가동,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신속 지원
- (범죄예방·제도개선) 메신저 채널을 활용한 범죄예방 홍보 및 인터넷사업자와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협력, 제도적 미비점 발굴·개선

○ 성과지표

<사이버범죄수사과 킷스통계>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사이버성폭력 단속 검거율	85.0%	85.5%	KICS통계

담당부서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담당자	정병선 경감	전화번호	02)3150-1159
------	-----------------	-----	--------	------	--------------

□ 과제개요

- 불법촬영 및 유포 등 온라인 상 신종 성범죄 발생이 급증*하고 피해영상물 유포에 따른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 서비스 제공

*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12) 2,400건 → ('18) 5,925건

** 재유포 등 피해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피해촬영물 삭제에 드는 비용이 과다

□ 그간의 추진실적

-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18.3월)
 -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불법촬영물 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신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특화된 피해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한국여성인권진흥원 內)' 설치('18.4월)
 - 상담, 삭제지원 등 맞춤형 피해지원 서비스를 제공·연계
 - * ① 경찰 신고에 필요한 채증 및 긴급삭제지원, ② 방심위 연계 및 사후 모니터링, ③ 전문상담, 의료서비스 및 보호시설 입소,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 * ('18.4.30.~'20.9.30.) 총235,767건 지원(상담 18,228건, 삭제지원 216,309건, 수사·법률 지원 연계 1,082건, 의료지원 연계 148건)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확대하여 피해자 지원 강화
 - 불법촬영물 등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요청범위 확대('20.4월)
 - * 성폭력방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2020.4.30.시행)에 따라 지원대상 확대
- 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발표('20.4월)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전모니터링 및 24시간 상시상담체계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 강화
 - * 제3차 추경사업예산 확보 및 사전모니터링·24시간 상담 등 인력확충('20.8월)

□ 2021년도 시행계획

- 불법촬영 및 유포뿐만 아니라 사진합성·편집을 이용한 사이버 성적 괴롭힘 등으로 피해지원 대상 확대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확충 및 시스템 고도화 등 기능강화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 예산 현황 : 해당 없음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총 지원건수(건)	100,468 * 9.30.기준	171,000	'20년 운영실적 반영 및 적극적 목표치 설정(3%)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성폭력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협력으로 피해자 지원 강화

□ 기타 사항 : 해당 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담당자	신경식 서기관	전화번호	02)2100-6392
------	----------------	-----	---------	------	--------------

1-1-2-②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효율화

□ 과제개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신속한 피해 회복에 기여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음란 동영상 스트리밍 차단기술 개발 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와 협조체계 강화

□ 그간의 추진실적

[여성가족부]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심층 심리상담·수사지원(성폭력상담소), 법률(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및 의료지원(해바라기센터) 연계('18.4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강화
 - '삭제지원시스템*' 구축 : 신속 삭제지원 및 상담일지, 삭제이력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기반 마련('19)
 - * 해외사이트, SNS, P2P에 유포된 피해영상물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 피해영상물 자동수집 기능(크롤링) 연계 사이트 확대 등 삭제지원시스템 기능 개선 및 고도화('20)
 - 웹하드사이트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시스템 개선('20~'21)

[과기정통부]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동영상내 음란성 분석·검출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웹하드사이트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시스템' 개발 및 업무 적용('19.7월~)
 - * 시험 적용('19.7월~, 10개 웹하드사이트), 업무적용 본격화('19.11월~, 총 42개 웹하드사이트)
 - 업무시간 단축*, 24시간 모니터링, 검색결과 실시간 수집 등 개선
 - * 불법촬영물 이미지 추출(1건당 기존 30분→5분) 및 웹하드사이트 검색(1개 사이트당 기존 120분→20분) 시간 단축 효과('20.2월 기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2021년도 시행계획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삭제지원시스템’ 성능개선 등 고도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웹하드사이트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시스템 개선 지원('20~'21년)
- 디지털 성범죄 신속 탐지 및 자동 필터링 가능한 R&D 기술 개발 및 피해지원 현장 반영 추진(과기정통부 협력)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건강한미디어환경조성기술개발 (유해미디어차단)	1,450	1,450	1,933	483	33.3
국비					
• 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1,450	1,450	1,933	483	33.3

○ 성과 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유해미디어 검출 정확도(%)	-	95%	유해콘텐츠와 무해콘텐츠에 대해 유해성 검출엔진이 정확하게 판별하는 확률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디지털 성범죄 신속 탐지 등 피해지원 현장 수요를 반영한 R&D 기술 개발 지속 추진(과기정통부 협력)

□ 기타 사항 : 해당 없음

담당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방송정책과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담당자	어정옥 사무관 은가연주무관	전화번호	044)202-6551 02)2100-6429
------	---	-----	-------------------	------	------------------------------

1-1-2-②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효율화

□ 과제개요

- 디지털성범죄물 피해확산 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청-여가부-방통위-방심위 간 활용 가능한 ‘불법촬영물 공동대응DB’ 활용

- (경찰청) ‘불법촬영물 공동대응DB’ 구축·유관기관 연계
 - '19년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불법촬영물 공동대응DB’ 구축
 - * 경찰의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허브(Hub)로 하여 각 기관의 시스템을 연계, 수사·삭제·차단 정보를 상호공유, 입체적인 피해자 보호체계 구축
- (여가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 시스템’ 구축
 - 경찰의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과 연계, 온라인상 피해영상물 검색 등 활용
-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확대, ‘공공DNA DB’ 구축
 - 각 기관에서 제공한 불법촬영물 등을 저장, 웹하드 필터링 사업자에 제공
- (방통위) 국내 웹하드 상시 모니터링, 기술적 보호조치 등 점검
 - 경찰의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과 연계, 웹하드 모니터링 채증자료 전송 등 수사 의뢰

□ 그간의 추진실적

- (2차 피해 방지) 피해자가 여가부(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방문, 신고 과정에서 수사를 원하는 경우 경찰관서 재방문 없이 시스템을 통해 수사 착수
 - 여가부(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제출 피해진술서를 공유받아 별도 경찰조사 없이 수사 착수,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하여 재유포자 검거
- (웹하드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방통위와 시스템 연계, 웹하드 내 불법촬영물 등 유포자 발견 시 수사 의뢰
- (피해게시물 삭제·차단)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의 피해게시물 유포 현황 자동검색 기능 활용, 방심위로 삭제·차단 심의 요청
 - *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서 모니터링 중인 해외불법사이트, SNS 등에서 유통된 피해게시물·영상 발견 시 즉시 방심위로 삭제·차단(24시간 모니터링)

□ 2021년도 시행계획

○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고도화

- 각 기관에서 활용중인 ‘불법촬영물 공동대응DB’ 기능 개선
- 시스템에서 수집된 영상분석 등 관리기능 강화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방심위로 피해계시물 등 삭제·차단 요청한 건수	9,075건	9,500건	

담당부서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담당자	김문영 경사	전화번호	02)3150-0240
------	-----------------	-----	--------	------	--------------

□ 과제개요

-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24시간 상시 대응체계 운영
 - 24시간 상시 피해접수 및 심의 지원
 - 관계기관 간 상시 업무협력 체계 마련 및 업무협력 절차 구축
 - 관계기관별 상시 연락체계 공유를 통한 ‘핫라인’ 가동
 - 관계기관 간 신고 시스템 구축 등 피해 신고 절차 효율화
-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불법촬영 등 신속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 사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유통 억제
 - 모니터링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한 모니터링 역량 강화
 - 중장기적으로 이미지 검색·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해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외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
 - 해외 주요 사업자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자율규제 조치 유도

□ 그간의 추진실적

- 디지털 성범죄 신속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 확대 운영
 - 디지털 성범죄 전담 조직을 ‘디지털성범죄대응팀(1개팀)’에서 ‘디지털성범죄 심의지원단(4개팀)’으로 확대·개편<’19.9월>
 - 디지털 성범죄 전담 소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신설<’19.9월>
- 상시 심의체계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 24시간 이내 신속 처리
 - ‘전자심의’를 통한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상시 개최<’19.9월~>
 - * 원격 업무기능 개선 등 신속심의 강화를 위한 ‘전자심의지원시스템’ 고도화<’20. 11월>
 -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규정 개정 등에 따른 아동·청소년 불법촬영물 판매 정보, 피해자 신원 정보, 딥페이크 등 신속심의 대상 지속 확대

- ‘교대근무제’ 기반의 24시간 피해접수 및 긴급대응 상황실 운영<’19.10월~>
-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 ‘n번방 사건’ 관련, 텔레그램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 정보 주요 유통 경로 중점 모니터링
 - * 텔레그램(233건), 디스코드(109건) 대상 시정요구 및 자율조치 실시<’20.1. ~ 9월>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반포·판매 관련 정보 대상 선제적 모니터링
 - * 트위터, SNS 등 대상 반포등 정보 시정조치 : 221건<’20.1. ~ 9월>
 - 디지털성범죄 정보 재확산 방지를 위한 사후 모니터링 지속 강화
 - * 디지털성범죄 불법영상물 등 사후 모니터링 및 심의 : 24,041건<’20.1. ~ 9월>
- 디지털성범죄의 근원적 유통 방지를 위한 국내·외 협업 및 공조체계 강화
 - 방통위·여가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상시 협력체계 지속 강화
 - *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9.11월)에 따라 분기별 이행실적 점검 등
 - 해외 글로벌 CP 등 주요 사업자(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자율조치 점검 및 독려를 위한 ‘국제공조점검단’ 신설<’20.1월>
 - 해외 사업자·유관기관 방문·협의 및 비대면 회의(화상회의 등)를 통해 원(原) 정보 삭제 등 협력방안 논의 및 정보 공유 지속 추진

□ 2021년도 시행계획

- 디지털 성범죄 정보 삭제·차단을 위한 24시간 상시 심의 지원 : 연중
- 방통위·여가부·경찰청·방심위 등 관계기관 간 상시 협력체계 운영 : 연중
 - 공동대응 실무협의체 회의개최(분기별), 관련 대책 이행 점검(수시) 등
- 해외 디지털 성범죄 정보 삭제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 : 연중
 - 해외 사업자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실질적 협력 방안 지속 모색
- 디지털성범죄 정보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웹 크롤링 및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신체인식 등 AI 기술 등을 적용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추진
 - * 로봇S/W를 통해 해외 주요사이트 대상 키워드 검색 등 반복처리 업무자동화 기술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735		2,125	390	22.5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운영	216회(~10월)	250회	일1회이상(근무일準)
○ 사업자 및 유관기관 협력	4회	4회	분기별 운영
○ 전자심의지원시스템 고도화	1회	-	사업 완료
○ 디지털성범죄정보 해외 협력회의	-	5회	해외 기관방문 등
○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1회	-

※ 코로나-19 감염증 전세계적 유행 등으로, '20년도 해외 유관기관·사업자 방문·협의 등의 한계가 있었으며, '21년도에는 비대면 회의(화상·서면 등)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할 계획임.

담당부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확산방지팀	담당자	안기생 차장	전화번호	02)3219-5811
------	--------------------	-----	--------	------	--------------

□ 과제개요

- 불법촬영 범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아 경제적 활동이 어렵거나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생계비 등 지원
-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를 통해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 그간의 추진실적

- 불법촬영 범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아 경제적 활동 어렵거나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생계비 등 지원(상시)
 - *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 829건('20년 1~10월)
-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 기관 스마일센터를 통한 전문 심리치유 서비스, 임시주거 시설 등 지원(상시)
 - *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치유 서비스 제공 : 3,120건('20년 1~10월)
- 법률홈닥터,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서비스 제공(상시)
 - * 법률상담 8,448건('20년), 소송구조 1,330건('20년 1~10월)

□ 2021년도 시행계획

- 불법촬영 범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아 경제적 활동이 어렵거나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생계비 등 지원(연중)
- 스마일센터를 통한 전문 심리치유 서비스 제공(연중)
- 법률홈닥터,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서비스 제공(연중)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11,816	11,590	11,950	134	1.1
○ 범죄피해자 긴급생계비 및 치료비지원	3,516	3,516	3,516	-	-
• 기금(범죄기금)	3,516	3,516	3,516	-	-
○ 스마일센터 운영	7,888	7,662	8,022	134	1.7
• 기금(범죄기금)	7,888	7,662	8,022	134	1.7
○ 범죄피해자 법률구조	412	412	412	-	-
• 기금(범죄기금)	412	412	412	-	-

※ 해당 예산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만이 아닌 각 사업의 전체 예산으로 특정 사건 지원을 위한 예산만 별도로 산출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람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건)	829건	829건	- '20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21년 목표치 산정 다만,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출장업무, 면접상담을 최소화 하고 있어 '20년 대비 목표치 동결
○ 심리치유 서비스 제공(건)	3,120건	3,120건	
○ 무료법률서비스 제공(건)	9,778건	9,778건	

담당부서	법무부 인권구조과	담당자	김동섭 주무관	전화번호	02)2110-3476
------	--------------	-----	------------	------	--------------

□ 과제개요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19.12.25.) 및 “젠더폭력방지 추진기반 구축 및 인식 개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대검찰청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상황
 - * 피해자 회유 및 협박, 피해자 ‘행실’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등
- 이에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상태에 대한 배려 및 신변 보호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

□ 그간의 추진실적

- '18. 7. 피해자 재활을 위한 심리·예술 치료 적극 활용 요청
 -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 등의 피해자가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피해자 예술심리치료를 지원 독려
- '19. 8. 피해자 국선변호사 처분결과 통지 개선
 - 사건 처분 시 피해자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 사건인 경우 통지 누락 방지를 위한 알림 팝업 전시
- '20.4. 디지털성범죄의 불법동영상 관련 2차 피해 방지 매뉴얼 배포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위한 불법동영상 유포 차단 및 삭제 지원 절차 마련
- '20.5. 가명조서 작성 피해자에 대한 통지 절차 철저 지시
 - 가명조서 작성된 경우 고소사건에서도 인적사항과 주민등록상 주소지 입력 금지 등
- '20.5.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이전비 신속 지원 및 활성화 지시
- '20.6. 불법동영상 유포차단·삭제 지원 매뉴얼 배포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피해자 의사 확인 불요, 성폭범위만 불법동영상 이지만 피해자 의사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도 2차 피해가 예상된다면 피해자 의사 확인 전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매뉴얼 개선

- '20. 연중. 가명조서 작성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보장 및 지원 강화
 - 가명조서 작성 피해자 통지 및 지원절차를 개선하는 KICS 수사결정시스템 등 구축 중

□ 2021년도 시행계획

- 피해자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 등 제도 활용(연중)
 -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법정 동행 등을 통한 2차 피해 방지, 피해자에 대한 경제·의료·법률 지원, 예술·심리치료 등 적극 실시
- 피해자 조사 전용조사실 추가 설치(연중)
 - 전국 10개 청에 피해자 전용 조사실을 추가 설치하여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연중)
 - 신변보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신변보호 대상범죄 확대 방안 지속 추진
 -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재판진행상황, 재판결과 및 출소사실 등을 통지하는 정보제공 제도 지속 및 확대 실시
 - 성폭력 등 강력사건에 있어서 가명조서 및 신원관리카드 작성 실태 지속 점검
- 예산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명)	성폭력 : 17,413 ('20.01~'20.09)	성폭력 : 23,966	전국청 수기취합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법무부 형사기획과	담당자	이갑호 주무관	전화번호	02)2110-3271
------	-----------	-----	---------	------	--------------

1-1-2-④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 과제개요

- 심리적으로 불안상태가 지속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피해 진술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 그간의 추진실적

- 피해자 성별에 따라 동성(同性) 경찰관이 진술 청취, 피해자 조사 시 보호제도* 적극 안내, 가명조서 적극 활용
 - * 전담조사관, 국선변호인, 진술녹화, 신뢰관계인 동석, 전문가 참여, 진술조력인 등
- 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분야별(△수사△삭제△심리△법률△경제) 제도를 종합하여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서’로 제작·배포
- '20.12월말 기준, 수사 쏘 단계에서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활용, 피해자 1,094명 대상으로 총 4,387회 보호·지원 조치

<여성안전기획과 수기통계 (단위: 회 / 중복지원)>

동성경찰 조사·입회	신변보호 요청	국선변호사 선임 요청	가명조서 작성	신뢰관계자 동석	진술녹화	진술조력인 참여	영상삭제 지원·연계	해바라기센터 ·상담소 연계
922	176	590	598	537	426	221	469	448

□ 2021년도 시행계획

- 진술녹화실 적극 활용, 피의자와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
- 신고접수부터 사후 연계 지원까지 쏘 과정에 걸쳐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전담하도록 조사관(여경) 배치
 - ※ 전국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 102명 중 여경 25명, 25% 차지('21.3월)

담당부서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담당자	정병선 경감	전화번호	02)3150-1159
------	-----------------	-----	--------	------	--------------

□ 과제개요

- 빅데이터 분석으로 불법촬영 위험 지역을 도출하고, 해당 지역 순찰 강화 등에 활용하는 등 불법촬영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실시

□ 그간의 추진실적

- '19.3월 범죄와 유동인구 빅데이터에 기반한 지하철역 위험도 모델 개발 및 GeoPros*에 탑재하는 등 지하철 디지털성범죄 지도 제작
 - * '09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같은 범죄정보시스템을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하여, 범죄를 공간적으로 예측·분석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 2021년도 시행계획

- (지하철경찰대) 디지털 성범죄 등 성폭력 범죄 등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점 단속지역을 선정, 단속활동 전개
 - ※ GeoPros를 활용하여 성범죄 상위권 지하철역을 선정, 범죄발생 다발 시간대 및 지하철역내 주요 발생장소(지하철 내, 에스컬레이터 등)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
- 市·지하철운영사 등과도 합동으로 지하철 역사 내 주요시설에 불법촬영장비 점검, 대국민 불법촬영범죄 예방홍보활동도 전개
- (지구대·파출소) 빅데이터 분석 시 불법촬영 위험도가 높은 지하철역 관할 지구대·파출소에서는 해당 지하철역을 포함시킨 순찰노선 구성
 - 불법촬영 관련 112신고 접수 시 지하철경찰대·운영사間 신고내용·피의자 인상착의·출동상황 등 공유하는 등 협업체계 구축
 - ※ 112신고 접수 시 지하철경찰대와 최인접 지구대·파출소가 동시에 출동하여 신속대응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지하철 디지털 성범죄 감소	964건	723건	KICS 통계

담당부서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담당자	김수형 행정관	전화번호	02)3150-1317
------	-------------	-----	---------	------	--------------

□ 과제개요

- (추진배경) 불법 촬영 범죄를 막기 위해 '18년 범부처 불법 촬영 근절대책 ('18.6.15.) 발표와 함께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 점검 추진
- (추진목적) 지속적인 점검 활동을 통해 불법 촬영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 범죄 근절 도모
- (주요내용) 지자체별 상시·합동 점검반을 구성 및 정기·수시 불법 촬영 점검 활동,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한 각종 캠페인 및 홍보 활동 등
- (추진체계) 행정안전부, 17개 시·도, 기초지자체 간 협업을 통하여 추진
 ※ 행정안전부 → 시·도 → 시·군·구, 소속 행정·산하기관

□ 그간의 추진실적

-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 단속을 상시점검 체계 운영('18.6.15.~)
 - 지자체별 합동점검반 구성(3,937명) 및 상시점검* 추진
 * 누적점검건수 : ('19년) 415천개소, ('20년 9월) 310천개소
 - 주요 공공기관*은 기관별로 보유한 탐지장비와 인력으로 자체점검
 *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서울교통공사
 - 명절 및 휴가철 공중화장실 국민편의·안전 점검 실시(행안부·지자체·경찰)
-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한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 예산지원
 - 불법촬영 탐지장비 지원(7,298대, 26억) 및 안전시설 개선(24억) ('18년)
 - 국민 안심 선도사업('19년, '20년 각 20억),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19~'20년, 22.6억)
- 5개 민간협회*와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간담회 개최(매년)
 - *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숙박중앙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상영관협회
- 불법촬영 근절 매뉴얼 제작('19.4.3) 및 담당자 워크숍·교육 실시
- 불법촬영 근절 동영상 제작·배포('20.12.)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상시점검 체계* 운영 및 점검실적 총괄 관리(분기별)
 - * 시·도, 시·군·구, 소속·산하기관별 자체 점검계획 수립(연1회) 및 점검반 구성·운영
- 명절 및 휴가철 공중화장실 국민편의대책* 및 캠페인 추진
 - *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비상벨 설치·작동 여부 점검 등
- 불법 촬영 근절 활동 관련 주요 민간협회*와의 간담회 실시
 - *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상영관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 불법촬영 근절 지자체 점검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 * 점검 매뉴얼 보완 및 불법촬영 점검 교육 동영상 제작

○ 예산 현황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다중시설 내 공중·민간화장실에 대한 점검 실적(개소)	310,567 ('20.9월 기준)	414,000	코로나19 장기화로 점검 활동 등에 어려움이 있어 '20년도 예상실적과 동일 수준으로 목표 설정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체계 지속 운영 및 지자체 불법촬영 점검 업무 역량 강화 지원 등

□ 기타 사항

-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을 근절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점검 활동 및 근절 홍보 캠페인은 물론 안전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올해 사업이 종료됨
 - * 민간 남녀화장실 분리 지원 사업 등
-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과 불법촬영 점검 효율성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 확보 필요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담당자	최고야 주무관	전화번호	044)205-3546
------	------------------	-----	------------	------	--------------

1-1-3-② 다중이용시설 수시점검

□ 과제개요

- 최근 불법카메라 촬영범죄가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어, 철도분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이 필요

* 최근 5년간 철도분야 불법촬영범죄 현황 : '15년 164건 → '20년 440건(1.7배↑)

□ 그간의 추진실적

- 철도운영자가 철도·지하철 역사 및 차량 내 화장실, 수유실에 대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를 1일 1회 이상 점검 실시(국토부 고시*, '19.1.시행)

*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국토부 고시) :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 및 역구내 화장실, 수유실에 대해 카메라 등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의 설치여부를 1일 1회 이상 점검

□ 2021년도 시행계획

- 철도운영자는 일일점검을 지속 이행하고, 국철구간 주요역사에 대해서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월1회 이상 합동점검 실시

- 예산 현황 (해당없음)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철도운영자와 철도경찰대 합동점검 확대	9회	10회	점검결과 보고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해당없음)

□ 기타 사항 (해당없음)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우지훈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4617
------	------------------	-----	------------	------	--------------

1-1-3-② 다중이용시설 수시점검

□ 과제개요

- (추진목적) 불법 카메라 확인여부 수시확인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 (추진체계) 보건복지부(공중위생서비스평가 총괄 기획 및 조정) → 시·도(평가 계획 수립) → 시·군·구(평가 실시) → 공중위생영업소, 영업자단체(평가 협조)
- (주요내용)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소에는 포상 등을 실시

□ 그간의 추진실적

- 공중위생영업소 점검근거 신설(「공중위생관리법」 개정, '18.12.11)
- 숙박업소, 목욕업소, 세탁업소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실시 완료*('20.3.~12.)
* '21.3월 평가 결과 시·도별 수합 완료

□ 2021년도 시행계획

- 평가대상 2개 업종(이용업, 미용업)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점검 및 평가
- 공중위생영업단체 대상 홍보 및 업소평가 반영
 - 공중위생영업자단체에 단속협조 및 홍보활동 요청 공문 발송
 - 공중위생영업소대상 위생서비스평가(격년)에 평가 반영
- 예산 현황 : 비예산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2020년)	목표치(2021년)	산출근거
○ 공중위생서비스평가 녹색등급 부여율	'21.3월 수합 예정	'20년 실적 대비 목표치 확정 예정	녹색등급 업소수/평가 업소수×100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공중위생영업자단체 지속 홍보요청 및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실시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담당자	김현정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856
------	-------------	-----	------------	------	--------------

1-2-1-①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불법 촬영기기 규제 관리

□ 과제개요

- 변형카메라를 유통단계(취급·소지)에서 관리함으로써 불법촬영 범죄의 위법성에 대한 국민인식을 확산하고 불법촬영기기의 범죄사용을 사전 방지
 - 변형카메라 취급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변형카메라 유통이력 관리를 위한 이력 정보시스템 구축

□ 그간의 추진실적

-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진선미 의원, '18.8월) 및 과방위 상정(전체회의 및 소위**, 11월)
 - * 영상촬영기기 규제대상을 정의하고 취급·소지자 기기 등록의무 부여 및 벌칙조항 명시
 - ** 카메라 자체를 규제하는 법안으로 과잉 규제에 따른 산업발전 저해 가능성 제기(여·야)
- 변형카메라 관리법안 수정*안 마련('18.12월) 및 관계부처·국회 과방위 협의('19.1월~)
 - * 규제 대상을 특정·구체화하여 신설 규제의 카메라 관련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고, 소지 등록을 재검토하여 규제 저항을 줄이는 한편, 구매자 이력관리를 위한 보완 조치 마련

□ 2021년도 시행계획

- 예산 현황 : 해당 없음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변형카메라 취급자 등록제 도입	-	-	-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해당 없음

□ 기타 사항

-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진선미 의원, '18.8월) 되어, 국회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변형카메라 사전규제의 다양한 파급효과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입법화 되지 못한 상태로, 향후 국회 입법이 재논의 되면 적극 지원 예정임

담당부서	과기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	담당자	고현정 주무관	전화번호	044)202-4959
------	------------------	-----	------------	------	--------------

1-2-1-②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과제개요

- (주요내용)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공공장소 내 개인영상 촬영 금지의무 부과

□ 그간의 추진실적

-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 발의('17.12.)
 - 화장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장소에서 개인영상 촬영시 과태료 부과
 - * 동 법률 제정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시민단체(참여연대 등) 반대 의견 표명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후 후속 입법과제로 검토하기로 국회 협의('19.5월)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내 개인영상 촬영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제도 개선 추진
- 예산 현황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개선안 마련	제도개선 추진	

□ 기타사항 : 해당없음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담당자	정종일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3066
------	-----------------------	-----	---------	------	--------------

□ 과제개요

- 음란 동영상 스트리밍을 모니터링·관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개발 추진 ('20년~)
- 웹하드, 인터넷 방송 플랫폼 등 민간 사업자에게 기술을 이전하여 불법 음란물 등 전송 차단 및 모니터링 활동 지원

□ 그간의 추진실적

- 음란 동영상 스트리밍 다채널 모니터링 기술 개발('20년~)
 - ※ 모니터링 채널 수 확대('19년 22개 채널→'20년 30개 채널) 등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 관련 기술이전으로 민간사업자의 상용화 지원('20년~)
 - ※ '이미지 유해성(음란성) 검출을 위한 이미지 학습 및 분류엔진 생성기술' 및 '경량화 유해 미디어(음란성) 분석 기술'에 대해 민간업체 기술이전('20.11월 기준 총 6건)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음란 동영상 스트리밍 다채널 모니터링 기술 고도화 및 현장 적용을 위한 모니터링 관제 시스템 개발(계속, ~'21년)
 - ※ 모니터링 채널 수 확대('20년 30개 채널→'21년 50개 채널)를 위한 기술개발 및 일목요연한 대쉬보드 인터페이스 등 유해미디어(음란성) 모니터링 관제시스템 개발
- 관련 기술이전으로 민간사업자의 상용화 지원(계속, ~'21년)
 - ※ '이미지 유해성(음란성) 검출을 위한 이미지 학습 및 분류엔진 생성기술', '경량화 유해미디어(음란성) 분석 기술' 등 개발기술 설명회 개최 및 기술이전 추진(계속)

○ 예산 현황 : 기포함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유해미디어(음란성) 검출 정확도 (%)	96%	99%	유해콘텐츠와 무해콘텐츠에 대해 유해성 검출엔진이 정확하게 판별하는 확률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해당없음('21년 완료)

기타 사항 : 해당없음

담당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방송정책과	담당자	어정옥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6551
------	-----------------------	-----	------------	------	--------------

□ 과제개요

-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관련 제도 이행
 -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삭제·접속차단,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의 관련 제도 이행으로 디지털성범죄물의 정보통신망 상 유통방지에 기여

□ 그간의 추진실적

- 웹하드 사업자 기술적 조치 의무 이행 점검 및 위반 시 행정제재
 - 웹하드 사업자 대상 불법영상물 유통 관련 상시 점검
 - *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추정) 삭제 현황: ('18) 14,394건 → ('19) 173건 → ('20.10월) 49건
 - 불법 음란물 삭제 현황: ('18) 139,821건 → ('19) 146,263건 → ('20.10월) 178,686건
 - 기술적 조치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 후 위반 사실에 대한 시정 조치 의결
 - * ('19.4월) 시정명령 사업자(5개) 중 2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총 2,100만원)
 - * ('20.1월) 총 4개 사업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총 2,800만원)
 - 웹하드 사업자의 인터넷 사업자에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 방지 기술적 조치, 삭제 대상 영상물의 확대, 위반 시 제재 수단 강화 등 사업자 의무 강화 신설(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20.6.9.공포, '20.12.10. 시행)

< 사업자 의무강화 주요내용 >

	기 준	개 선
유통 방지 기술적 조치	• 웹하드사업자만 대상	• 인터넷 사업자 전반 대상 (웹하드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
삭제 대상영상물	• 불법음란물에 한정	• 불법음란물 및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불법촬영물 + 불법편집물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재수단	• 과태료(2천만원 이하)	• 과태료상향(2천만원→5천만원), 과징금제 도입

□ 2021년도 시행계획

- 인터넷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요청 시 삭제·접속 차단 등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해 기울인 노력 및 내부 교육 실시 등 투명성 보고서 실태 점검
- 일정기준 인터넷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에 대한 관리 실태 점검
- 웹하드 상 불법음란정보 기술적 조치 및 신고·삭제 요청된 불법촬영물 등 삭제 의무에 대한 점검 추진 등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	1,129	1,129	2,765	1,636	144.9
국비					
• 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1,129	1,129	2,765	1,636	144.9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기술적 조치 개선(차단) 건수(단위: 건)	126,555 (10월말 기준)	137,360	상시점검 등을 통한 기술적 조치 이행개선(차단) 건수의 합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 실태 점검
- 투명성 보고서 실태 점검,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웹하드 사업자의 불법음란 정보 기술적 조치 이행 여부 점검(계속)

담당부서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담당자	신동령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1566
------	-------------------	-----	------------	------	--------------

□ 과제개요

- 범정부 ‘공공 DNA DB’ 등 효율적 구축 및 활용
 -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9.11월)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범정부 ‘공공 DNA DB’ 구축 및 운영
 - * 여가부·경찰청·방통위와 불법 영상물 재유통 방지를 위한 불법촬영물 등의 특징값(DNA) 등에 대한 통합DB 공동 구축 추진
 - 범정부 ‘공공 DNA DB’의 안정적 구축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통합 관리·공조 시스템 도입

□ 그간의 추진실적

- 불법·음란 영상의 재유통 방지를 위한 DNA DB 시스템 구축
 -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19.1월)에 따라, 웹하드 등 특수유형부가통신 사업자를 통한 불법 음란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해 DNA DB 구축·배포 <'19.1월~>
- 범정부 ‘공공 DNA DB*’ 확대 구축 추진<'19.11월~>
 - 불법촬영물 등 ‘공공 DNA DB’ 공동 구축·배포<28,838건, ~'20년>
 - 정부 관계기관 간의 ‘공공 DNA DB’ 통합구축을 위한 실무협의(4회)
 - * 공공DNA DB : 불법촬영물, 이동성착취물 등 불법·음란 영상의 고유한 특징값(DNA값)을 추출하여, 방심위에서 통합 관리하고, 민간(필터링 사업자 등)에서 자사 서비스 내 차단 등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데이터 저장소

□ 2021년도 시행계획

- 「공공 DNA DB」 등 통합 관리·공조 시스템 구축
 - ‘공공 DNA DB’ 구축·배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시스템 개발
 - 공공 DNA DB와 연계하여, 피해자 관리·디지털 성범죄 정보 식별 등을 위한 디지털성범죄 정보 통합 관리 기능 탑재 검토 등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확대되는 기술적 조치 의무 사업자 대상 ‘공공 DNA DB’ 구축·배포 지원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2항 신설에 따라, DNA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 의무 대상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서 부가통신사업자까지 확대(’21.12월 시행)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방송통신발전기금)	20	20	700	680	3,400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자율규제시스템 통합 DB 서버 구축	1회	-	사업 완료
○ 공공 DNA DB 등 통합 관리·공조시스템 구축	-	1회	1차년도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공공 DNA DB 통합 관리·공조 시스템 고도화(완료)

- 표준화된 영상 DNA 추출·검출시스템 개발·적용한 ‘공공 DNA DB’ 구축·배포를 통한 부가통신사업자 지원 확대

* 현 DNA 추출 시스템은 개발사별로 작동 방식이 달라 호환이 불가하며, 라이선스 등 문제로 활용이 제한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 사업을 통해 별도의 라이선스 없이 모든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적용 가능한 DNA 추출 시스템 개발 추진

- 여가부·경찰청 등 유관기관에서 디지털 성범죄 여부를 식별하고, 신속하게 수사·피해자지원 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DNA 기반 검색기능 고도화 추진

담당부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확산방지팀	담당자	안기생 차장	전화번호	02)3219-5811
------	--------------------	-----	--------	------	--------------

□ 과제개요

- 약물이용 성범죄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력 강화(경찰청, 여가부, 과기정통부)
 - 약물 성범죄에 대한 범죄실태 파악, 신고·대응체계 개선, 부처협업을 통한 대국민 홍보 및 약물탐지 기술개발 등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 그간의 추진실적

- 휴대용 성범죄 약물 신속 탐지 기술 개발('19.07~'20.07)
 - 성범죄 약물 육안 검출용 휴대용 키트 및 모바일 App 개발
 - * 2019년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 R&D 과제 선정

□ 2021년도 시행계획

- 현장 적용 및 확산
 - 수요기관 예산 활용한 연구성과의 현장 적용, 공공조달 연계 등을 통한 상용 및 기술 공유를 통한 보급 확산 유도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 (R&D) * 세부사업 내 과제 수행 예산	3,500 (-)	3,500 (-)	5,000 (-)	1,500	42.9
국비	3,500	3,500	5,000	1,500	42.9
• 일반회계	3,500	3,500	5,000	1,500	42.9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긴급대응연구 수요자 만족도 조사(점)	60	-	2020년 종료 과제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2020년 종료함으로써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기술기반팀	담당자	김의중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4636
------	----------------------	-----	---------	------	--------------

□ 과제개요

- 약물 성범죄에 대한 선제적 예방을 위한 탐지기술 개발 및 대외협력을 통한 신고·홍보 활성화 등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 그간의 추진실적

- (협업 네트워크 강화) △여성단체 실무자 중심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운영
△홍보·신고 활성화 등을 위한 부처 합동 대응 추진
* △필요 시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실시 △정례·사례회의 통해 사례 공유
- (약물 탐지기술 개발) 빠른 인체 배출로 사후 적발이 어려운 마약류 특성을 감안, 신속한 탐지를 위한 상황별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등 개발 추진*
* △일반 국민용(주류 등에 혼합된 마약의 존재 유무 확인) △현장 경찰용(주류 등에 혼합된 마약의 종류까지 식별) △(전문수사관용) 신체·의류 등에 묻은 미량의 마약 검출(종류 확인)

□ 2021년도 시행계획

- 과기부 등 협업, 약물 탐지기술 지속 개발 및 대국민용 키트 상용화 추진
 - '20년 필로폰 등 3종류의 마약에 대한 반응물질을 개발한 데 이어, 졸피뎀·GHB·펜타닐 등 6개 마약에 대한 반응 물질 개발 지속 추진
※ 탐지기술 개발 계획 : '20년 3개 → '21년 6개 → '22년 8개 물질 개발 추진
 - 약물이 주로 성범죄 등에 악용되는 점을 감안, 주류(소주·와인 등)에 투약된 마약을 검출할 수 있는 대국민용 휴대용 키트 개발, 제품화 추진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약물 탐지기술 개발실적	3건	3건	약물탐지 가능한 반응물질 개발 건수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담당자	송수진 경감	전화번호	02)3150-0832
------	----------------	-----	--------	------	--------------

□ 과제개요

- 해외 주요사범당국과 사범공조 강화 및 범죄인인도 실무협의 개최를 통해 불법촬영물·아동성착취물 제작·유통사범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

□ 그간의 추진실적

- 해외 사범기관과의 형사사범공조 강화
 - 해외 주요사범당국과 사범공조 및 범죄인인도 화상실무협의 개최
 - * 통상 미국, 중국, 일본과는 매해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올해에는 코로나 사태로 정식 실무협의회가 개최되지 않고, 사안별로 필요시 화상실무협의회 실시간 개최
 -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범공조요청 사건 신속 처리
-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외도피 불법촬영물 사범 국내 강제송환
 - '20.7.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를 촬영한 뒤 인터넷에 영상을 업로드하여 돈을 받고 판매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사범을 덴마크에서 강제 송환
 - *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와 덴마크간 직항편이 없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환승하며 왕복 40시간 가량 소요되는 일정으로 범죄인 송환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해외 사범기관과의 형사사범공조조약 체결하는 등 공조망을 확대하고 협력 관계를 증진하여 형사사범공조 강화 지속 추진
 - 사범공조가 빈번한 국가와 양자 사범공조회의 개최 추진
 - * '20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양자 사범공조회의 개최 지연 중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해외주요사법당국과 사법공조 및 범죄인인도 실무협의 개최	4회 (화상 실무회의로 진행)	4회 (화상 실무회의 포함)	국제사법공조 강화 위한 실무협의 개최에 적극 노력 하되, COVID-19 고려하여 산출

담당부서	법무부 국제형사과	담당자	윤진희 계장	전화번호	02)2110-3296
------	-----------	-----	--------	------	--------------

1-3-1-① 아동성착취물 유통사범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

□ 과제개요

- 해외 주요사범당국과 사범공조 강화 및 범죄인인도 실무협의 개최를 통해 아동성착취물 제작·유통 사범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

□ 그간의 추진실적

- 인터폴·유로폴 공조와 함께 해외 법집행 기관(美 FBI·HSI 등)·글로벌 IT 기업(구글·페이스북 등)과 직접 공조를 통해 국제공조 체계 강화
 - 해외기업 공조 요청 현황('20.12월말 기준)

<국제공조협력계 수기 통계 >

(단위 : 건수)

구분	총계	해외 보안메신저				기타 해외 IT기업				
		텔레그램	디스코드	위커	와이어	메가	구글	페북	트위터	기타
누계	490	8	51	-	-	142	75	81	91	42

□ 2021년도 시행계획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국외 체류 및 도피 사범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및 송환 요청 등 적극 추진
- 인터폴·외국 법집행기관(美 HSI 등)과 직접 공조수사를 통해 해외에 서버를 둔 아동성착취물 유통사이트 운영자 검거 및 서버 폐쇄
- 성과지표

<국제공조협력계 수기통계>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사이버성폭력 국제공조 요청건수	421건	425건	수기통계

담당부서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담당자	정병선 경감	전화번호	02)3150-1159
------	-----------------	-----	--------	------	--------------

1-3-2-①

해외성매매 방지 체계 구축 및 단속 강화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해외 공조)

□ 과제개요

- 여권법에 의거, 해외성매매 사범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 그간의 추진실적

- 주요성과 및 평가
 - 해외성매매로 외국 법령을 위반하여 재외공관에서 국위손상자로 통보한 사람에 대해 여권발급 제한

<2015~2020.11월 성매매 관련 여권발급·재발급 제한 조치 현황>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11	계
여권발급·재발급 제한 조치 대상자(명)	54	5	12	3	6	4	84

□ 2021년도 시행계획

- 해외성매매로 인한 국위손상자로 통보된 자에 대해 현행 법령 등에 따라 여권 발급 제한 지속 시행

담당부서	외교부 여권과	담당자	김은영 외무주무관	전화번호	02)2002-0141
------	---------	-----	--------------	------	--------------

□ 과제개요

- 해외성매매 방지 체계 구축 및 단속 강화
 - 해외 성매매 실태를 파악하고, 대국민 홍보 실시

□ 그간의 추진실적

- (실태조사) 2019 성매매 실태조사內 일반성인대상 성매매 인식조사시 해외 성매매 경험·인식을 포함하여 조사('19.5~12월)후 결과발표('20.6월)

<해외성매매 경험 및 인식 조사 주요 결과(출처: '19 성매매실태조사)>

구분(단위:%)		2016	2019	증감률(%p)	조사대상('19년)
해외성매매 경험률	본인	7.1	4.7	△2.4	성인남성 1,500명
	주변인	26.4	25	△1.4	성인남녀 2,300명
해외성매매 국내처벌 인지율		44.8	52.8	8	성인남녀 2,300명

- (대국민홍보) 전국 공항 전광판을 통한 해외성매매 불법 홍보(연중)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성매매추방주간(9.19~25) 계기 성매매방지 홍보, 전국 공항 전광판을 통한 해외성매매 불법 홍보(연중)
- 예산 현황 : 기포함
 -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에 포함되어 집행되고 있음
- 성과지표 : 없음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3년주기 성매매실태조사를 통한 해외성매매 실태파악('22)
- 성매매추방주간(9.19~25) 운영 등 대국민 홍보(매년)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담당자	이경은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443
------	-------------	-----	---------	------	--------------

□ 개요

- 인터폴 전용통신망을 통해 해외성매매 공조요청을 접수하거나, 해외 경찰주재관,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등으로부터 해외성매매 첩보를 수집하여 국수본에 인계
- 국제범죄수사계에서는 위와 같은 과정으로 인계받은 첩보 및 자체 생산 첩보를 바탕으로 해외성매매 알선 인터넷 사이트 등 상시단속하여 해외성매매 방지 노력

□ 그간의 추진실적

○ '20년 해외성매매 피의자 검거 현황

※ 코로나19로 해외입출국이 제한되며 해외성매매 피의자 검거인원이 급격히 감소

구분	계	성매매알선	성매도	성매수
검거인원(명)	18	12	6	0

□ 2021년도 시행계획

○ 해외성매매 첩보 수집 강화 및 상시 단속 실시

- 해외 경찰주재관,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등을 통해 해외 성매매 첩보 수집 강화
- 국제범죄수사계를 활용, 해외성매매 알선 인터넷 사이트 상시 단속 등 실시

○ 유관기관 협업 강화

-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 참여 및 여성가족부·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제 구축하여 해외성매매 상시단속에 대해 정부부처간 긴밀히 협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해외성매매 피의자 검거인원	18	20	수기통계

담당부서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 (마약조직범죄수사과)	담당자	정재익 경위 (김태현 경감)	전화번호	02)3150-0307 02)3150-2043
------	--------------------------------	-----	--------------------	------	------------------------------

□ 과제개요

- 휴대전화를 통해 유통되는 성인 스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 * (분류기준) 스팸 신고 접수·처리 건 등에서 보이스 채팅, 유흥업소 광고에 해당
- 스팸신고 정보를 통해 성매매 알선 정보의 유통 여부 파악·대응

□ 그간의 추진실적

- 성인 스팸 발송업체* 20개 대상(과태료(12건), 검찰 송치(8건))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정보통신망법 스팸 관련 규정 위반사항이 있는 20개 사업자에 대해 행정제재 또는 검찰송치('20년)
 - * 성매매 알선 업체는 아니며, 전화채팅 서비스 제공 업체인 것으로 확인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휴대전화를 통한 성인 스팸 발송업체 상시점검 실시(15개)
 - ※ 성매매 알선이 의심되는 스팸 신고가 접수되면 점검 대상 업체로 포함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 - 불법스팸 신고접수 및 처리	1,008	1,008	865	△143	-14.2
국비					
• 일반회계	1,008	1,008	865	△143	-14.2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성인스팸 발송 업체 기획 점검 대상업체 수(개)	20개	15개	성인스팸 발송업체 점검대상 선정은 신고 접수된 자료 등을 기반으로 진행되므로 외부의 영향을 받아 20년 목표치 유지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스팸 신고를 바탕으로 성매매 알선 정보의 유통 여부를 점검하고 성매매 알선 정보 탐지 시 신속히 차단·처벌 조치

□ 기타 사항

- 해당 없음

담당부서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	담당자	권만섭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1527
------	----------------------	-----	---------	------	--------------

1-4-1-①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근절

□ 종합적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근절방안 추진

- 성매매광고차단시스템(Auto Call System)* 활용, 성매매 광고 차단
 - * 성매매 알선사이트 등 광고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를 자동전화 시스템에 등록, 3초마다 전화를 걸어 성매수자의 통화를 차단하는 시스템('18.9월 구축)
- 랜덤채팅앱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권유행위 집중 단속

□ 그간의 추진실적

- 성매매광고차단시스템 실적('20.12월) : 7,271건

총계	성매매사이트	전단지	앱	기타
7,271건	6,565건	415건	260건	31건

□ 2021년도 시행계획

- 성매매광고차단시스템 활용 및 모니터링 강화
 - 성매매알선사이트, 전단지 및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강화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집중 단속·수사 추진
 - (성매매 단속) 랜덤채팅앱 등 SNS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 및 권유행위에 대해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를 적극 활용, 피의자 검거
 - (아동·청소년 조사)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하고 조사時 보호자 등 신뢰관계인 동석, 수사절차 및 보호·지원기관 등을 상세히 안내
 - (기관 통지)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문기관의 원활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 후 지체없이 여가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 통지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검거율 {(검거건수 / 발생건수)×100}	95.2%	95.3%	수기 통계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대상범죄수사과	담당자	김재영 경감	전화번호	02)3150-2878
------	------------------	-----	--------	------	--------------

□ 과제개요

- 웹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사이버 상에서 성매매 위기에 노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긴급 상담, 구조지원 등 성매매 예방활동 추진
-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을 통해 청소년 온라인 성매매 예방을 위한 상담 및 모니터링 실시

□ 그간의 추진실적

- 채팅앱, 채팅사이트를 모니터링하여 온라인 청소년 성매매 의심 이용자 신고
-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서비스 홍보 및 온라인 상담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적절한 지원서비스(법률, 의료, 교육 등) 연계
- 사이버포래상담원(채팅앱 은어 등에 익숙한 성매매 피해청소년 중 선발)을 양성하여 온라인 상담원으로 활동 및 자립 도모
- 연도별 추진실적

구 분	'16	'17	'18	'19	'20.9
상 담(명)	3,241	3,970	4,063	4,284	2,679
지원 연계(건)	4,310	5,027	4,719	5,699	3,555
방심위 신고(건)	513	777	902	971	938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청소년 성매매 유입 예방을 위한 사이버상담 실시
-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의료지원서비스 연계
- 온라인 성매매 의심정보 신고
-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홍보 사업 등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261	261	261	-	-
국비	261	261	261	-	-
• 일반회계	261	261	261	-	-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온라인 성매매 유인 의심신고 건 수	938건 (20.9월 기준)	1,000건	○ 온라인 특성상 모니터링 및 성매매 의심 대상이 일정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목표치 설정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사이버 상에서 성매매 위기에 노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긴급 상담, 구조지원
등 성매매 예방활동 지속 추진
- 청소년 온라인 성매매 예방을 위한 사이버 또래 상담 및 모니터링 실시

□ 기타 사항 : 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담당자	이시영 사무관 박경희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404 02)2100-6406
------	-------	-----	--------------------	------	------------------------------

□ 과제개요

-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랜덤채팅앱*’이 청소년 조건만남 등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

* 불특정 상대와 채팅, 쪽지 등 가능(특정인 사이의 채팅, 쪽지가 가능한 채팅앱과 구분)

※ 청소년 조건만남의 79.5%가 채팅앱·채팅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짐(‘19년 여가부 통계)

- 여성가족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그간의 추진실적

- (운영 개선) 관계부처·운영자와 협업, 청소년 보호 방안 추진

- (기능 개선) 청소년 성매매 주요 이용 채팅앱인 앙톡·즐톡(약 88%) 업체와 협의, △대화창 내 신고기능 구축 △신고내용 저장 기간 연장(3일→7일) 등 기능 개선(‘18.7월)
- (청소년 이용 제한) 윈스토어 운영자와 협의, 지인기반의 ‘메신저’(카카오톡 등) 제외한 모든 채팅·소개팅앱을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지정(앱 다운로드 시 성인 인증)(‘19.8월)
-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 여가부와 협업, 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 이용불가)’로 지정 협의, 추진 중(‘20년 완료 목표)

- (집중 단속) 매년(1~2회) 여가부 등 관계부처 합동 집중단속 추진

구분	총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성매매처벌법위반		
	건	명	건	명	구속	건	명	구속
’20년	125	167	6	15	-	119	152	-
’19년	79	140	9	21	4	70	119	-
’18년 (2회 실시)	676	1,131	103	171	16	573	960	9
’17년	523	830	120	168	9	403	662	2

※ ’19·20년은 ‘버닝썬’, ‘코로나’ 등으로 클럽 등 유흥시설 집중단속에 집중함에 따라 실적 감소

□ 2021년도 시행계획

- (여청강력팀) 여청수사팀의 교대근무 특성으로 인한 수사 연속성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한 불특정 성폭력 수사를 위해 1급지 149개소에 여청강력팀 신설
 - SNS 이용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권유 행위를 전담하면서,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집중단속 추진, 피해자 보호 등 유기적 협조체계도 구축
 - ※ 이외 불특정 피의자 도주 강간·강제추행 ③ 소재불명 신상대상자 추적 등 전담·합동 및 인지수사 ④ 아동학대 사건(13세미만은 시·도경찰청에서 전담 / 여청강력팀은 초동 대응) 등 취급
- (선제적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단속 활동) 아동·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주요 통로인 채팅앱 등 SNS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권유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이를 홍보해 선제적·예방적 아동·청소년 성보호활동 전개

한국여성변호사회 자문결과('20.1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래 범의를 갖지 않은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 유발하게 하는 함정수사는 위법(대판 2005도1247)하므로 범의를 유발하는 거절하기 힘든 유혹 및 범행방법의 구체적 제시 등은 위법 • 법원도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 전반에 대해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의 위법성에 대한 문제를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영국·미국·일본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례 등으로 볼 때 적법수사로 볼 범위가 넓음

- <추진개요> SNS 이용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권유 행위를 대상으로 여청수사 기능(사이버 수사 지원)에서 집중적으로 단속
- <단속방법> 채팅앱이나 SNS에서 ‘아동·청소년’으로 가장한 후 성매매를 유인하는 메시지를 보낸 상대방을 검거
- <조사·통지> 해바라기센터 조사원칙, 조사時 보호자 또는 성매매 피해 상담사 등 신뢰관계인 동석, 수사절차 및 보호·지원기관 등을 안내 / 수사 후 지체 없이 여가부 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 통지

○ 성과지표

성과목표(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2021년)	산출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검거인원(명)	128명	140명	KICS 통계 시스템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대상범죄수사과	담당자	김재영 경감	전화번호	02)3150-2878
------	------------------	-----	--------	------	--------------

□ 과제개요

-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랜덤채팅앱 등 온라인 성매매 정보 대응 강화

□ 그간의 추진실적

-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성매매 정보 시정요구('20.1~12월)
 - 랜덤채팅앱 내 성매매 정보 6,816건 시정요구
 - 수사기관·신고기관의 심의요청 성매매 정보 4,801건 시정요구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온라인 불법 성매매 정보 상시 모니터링 및 심의
- 랜덤채팅앱 성매매 정보에 대한 상시 심의 강화 및 중점 모니터링 실시
- 성매매 근절을 위한 수사기관 및 관련 신고기관 업무협력 강화

○ 예산 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채팅앱 성매매 정보 심의	상시	상시	-
○ 채팅앱 성매매 정보 중점모니터링 실시(횟수)	3회	3회	-

담당부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소년보호팀	담당자	김준희 차장	전화번호	02)3219-5842
------	---------------------	-----	--------	------	--------------

□ 과제 개요

- 여성 1인가구 대상 △취약요소 개선 △예방활동 강화 △대응체계 개선 등 맞춤형 대책 추진, 범죄로부터의 불안감 해소 및 체감안전 향상 도모

□ 그간의 추진실적

- (취약환경 개선) 범죄예방진단팀을 중심으로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등 테마별 범죄 취약요인을 발굴하고,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환경 개선(3,028개소)
※ '20년 범죄예방진단 월평균 2,934건 실시('19년 월평균 2,788건 대비 5.2%↑)
-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보호) △대학 기숙사 △여성 화장실 등 취약지역 중심 집중적인 불법촬영 예방활동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전개

- (불법촬영 예방) 집중 점검기간 운영(12,184개소 점검, 730개소 개선 권고)
- (피해자 보호·지원) 피해자 835명 대상, 피해영상 삭제 등 총 3,561건 지원

□ 2021년도 시행계획

- (CPTED 확장) 경찰청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등 범죄취약지의 여성불안환경 적극 개선
- '범죄위험도 분석시스템(Pre-CAS)' 현장 운영을 통해 지역별 가구형태, 범죄 위험도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 범죄예방활동 활성화

- (주요 내용) △지역경찰·진단팀의 방법시설 입력기능 △최적의 방법시설물 설치 추천 기능 등 활용
- (향후 계획) 현장운영 후 개선방안 도출, 고도화 사업 단계적 추진('22년)

- 관련부처 및 연구기관과 협업하여, CPTED 사업 고도화·내실화 추진

- (행정안전부) 행안부 생활안전지도*에 경찰이 참여한 전국 셉테드 사업 지도를 공개
* 범죄·교통·재난 등 다양한 안전정보를 지도상에 통합하여 국민에게 공개
- (건축공간연구원) △셉테드 사업 효과성 분석 △건축도면 해석 능력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

- (성범죄 예방·대응) △시기별(신학기·하계기간 등) 집중 점검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피해자 보호·지원* 내실화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유포 모니터링 △피해자 상담·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2020년)	목표치(2021년)	산출근거
○ 범죄예방진단 월평균 실시 횟수	月 2,934건	月 3,022건	수기통계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담당자	김지윤 경사	전화번호	02)3150-0904
------	----------------	-----	--------	------	--------------

□ 과제개요

- (사업목적) 장애인 대상 학대·성범죄 피해 실태 파악 및 예방교육 강화
 - 장애인 학대 신고현황 등을 활용하여 실태 파악 및 예방 강화
- (추진체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중앙 1개, 지역 18개)
- (주요내용) 여성장애인의 학대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학대 및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 교육 강화
 - * 학대피해장애인 중 여성장애인 비율 47.5%(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 그간의 추진실적

- 장애인 학대·성범죄 피해 예방 교육 실적 작성
 - '20년도 학대·성범죄 예방교육 694회 18,351명* 지원
 - * '19년 예방교육 횟수 목표가 788회로 전년 대비 코로나 19등의 사유로 교육 취소 및 교육 이수자 감소

□ 2021년도 시행계획

- 장애인 학대·성범죄 피해 예방 교육 추진 계획
 - '21년도 학대·성범죄 예방교육 732회 19,269명*
 -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교육 추진 예정 및 전년도 대비 +5% 증가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4,835	4,835	4,902	67	1.3%
국비					
• 일반회계	4,835	4,835	4,902	67	1.3%
• 특별회계(회계명)					
• 기금(기금명)					
지방비					
기타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학대 예방 교육 목표 대비 실시율(명)	88% (당초 목표치 788회 대비 694회) * 인원 18,351명	100% (732회) * 인원 19,269명	* 장애인권익옹호 기관에서 제출 하는 학대·성범죄 예방 교육 목표치 근거(지역장애인권익 옹호 기관 추진)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지속 추진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담당자	한필훈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3303
------	-------------------	-----	---------	------	--------------

□ 과제개요

- (사업목적)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을 통해 이용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 (추진체계) 인권지킴이지원센터 및 거주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 (주요내용)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지원센터를 통해 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실시

□ 그간의 추진실적

-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 및 사무국장 인권교육 실시
 - 집합교육 및 광역 시도 주관 교육 온라인으로 실시(11회)

□ 2021년도 시행계획

- 매년 실시하는 인권지킴이지원센터의 시설장·사무국장 인권침해예방교육 및 거주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시 여성폭력 피해 예방 교육 실시
- 거주시설 자체적으로 종사자 연2회(8시간 이상) 및 이용자 연1회(4시간 이상) 인권교육 실시
-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을 구성·운영하여 모니터링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장애인단체 지원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운영)	100	100	100	-	-
국비					
• 일반회계	100	100	100	-	-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 및 사무국장 인권교육 참여자수	250	270	* 인권지킴이지원센터 교육 목표치 근거(인권지킴이 지원센터 추진)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실시 및 인권침해 여부 등 모니터링 지속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담당자	정진아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3309
------	-------------------	-----	---------	------	--------------

1-4-3-③

장애인 여성폭력 피해자 전문 지원기관 확대

1-4-3-④

장애인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종사자 역량 강화

□ 과제개요

- (사업목적) 장애인 특화 상담소·보호시설 확대 및 종사자 역량 강화를 통해 관련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 (추진체계) 여성가족부(예산 편성 및 배정) → 시·도, 시·군·구(사업추진 및 예산집행관리)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피해자 지원, 정산 보고 등)
- (주요내용)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23개소)·보호시설(8개소), 자립지원시설(2개소) 운영지원, 장애인 가정폭력 상담소(4개소)·보호시설(2개소) 운영지원, 신규 국비지원 기관 컨설팅 및 종사자 슈퍼비전 등 실시

□ 그간의 추진실적

-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지원(연중)
 - (상담소) 중증장애인 상담편의 확충*, 일반 상담소 인력(소장 1명, 상담원 3명) 외에 상담지원 인력(1명) 인건비 및 교통비 지원 확대
 - * 피해자가 원할 경우 상담원의 방문상담, 수화통역인(청각장애인) 지원 가능
 - (보호시설)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장애인용 통행로, 승강기, 화장실, 침실 등 편의시설*의 구축, 인건비**·교통비 등 추가 지원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 일반 보호시설 인력(시설장 1명, 상담원 2~3명, 보조원 1명) 외 상담원(1~2명) 추가 배치
- 신규 국비지원 기관(8개) 컨설팅, 관련 종사자(총275명) 슈퍼비전 실시('20년)

□ 2021년도 시행계획

-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지원(연중)
- 신규 국비지원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슈퍼비전 실시(연중)

○ 예산 현황 : 기 포함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에 포함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상담 지원 실적(천건)	162 (추정)	170	상담소의 성폭력 상담건수와 보호시설 심리지원 실적의 합계 (전년대비 5% 증가)
○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상담 지원 실적(천건)	160 (추정)	168	상담소의 가정폭력 상담건수와 보호시설 심리지원 실적의 합계 (전년대비 5% 증가)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 지원 지속 추진
- 장애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상담소 등에 전문인력 배치 및 지속 지원 확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담당자	장좌영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397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박윤호 주무관		02)2100-6423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조 린 서기관		02)2100-6435

1-4-4-① 사업장 대상 이주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점검

□ 과제개요

- 여성 외국인노동자의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시 직장 내 성희롱 여부 집중 점검 실시

□ 그간의 추진실적

- ('19년 상반기) 법 위반 사업장 992개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489건으로 성희롱예방교육 442건, 교육자료 미게시 47건이 적발
 - * 시정지시 485건, 과태료 4건 조치
- ('19년 하반기) 법 위반 사업장 680개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383건으로 성희롱예방교육 158건, 교육자료 미게시 233건, 모집상 남녀차별·배우자 출산휴가 미달 각 1건이 적발
 - * 시정지시 383건 조치
- ('20년 하반기)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1,502개소 대상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 지도·점검('20.9.14.~11.30.)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통역원을 활용한 외국인근로자 비대면 유선면담을 통한 실태조사 후 여성 외국인근로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및 성희롱 예방교육 취약의심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 실시
 - 점검시기 : '21년 상·하반기
 - 점검사항 : 기본적 근로조건 준수, 여성 외국인노동자의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폭행 등 집중점검
 -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가해자 징계조치 여부, 피해자 불이익조치 여부 등
- 예산 현황 : 해당 없음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비대면 실태조사 외국인노동자수(명)	- 비대면 실태조사 13,019명 - 점검 : 1,502개소*	외국인노동자 20,000명	반기별 10,000명×2회

* '20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당초 점검수행 3,000개소에서 1,502개소로 조정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담당자	김형숙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7148
------	------------------	-----	---------	------	--------------

□ 과제개요

- (목적) 외국인근로자 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해 성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고용주에 대한 외국인 초청 제한 필요
- (주요내용) 성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강제해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고용주가 초청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제한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함

□ 그간의 추진실적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 제7호 신설('18. 6. 12. 시행)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의3(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② 법무부장관은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초청 외국인을 사용하려는 사용사업주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을 초청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현행 법령과 지침 유지
- 예산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성과 지표 : 해당사항 없음(사업 대상 아님)

담당부서	법무부 체류관리과	담당자	김정옥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4065
------	-----------	-----	---------	------	--------------

□ 과제개요

- (추진배경)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한 이주여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없애고, 결혼이주여성 인권증진을 위해 국민 대상 인식 개선 및 이주여성 대상 지원 홍보 강화 필요
- (사업목적) 이주여성이 폭력피해 없이 한국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 등 수용성 제고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7(가정폭력 추방주간)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5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 (주요내용)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홍보영상 제작·송출 및 이주여성 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홍보 등

□ 그간의 추진실적

- 폭력피해이주여성 인식개선 홍보 동영상 제작 및 송출
 - * 유튜브 광고 활용 영상 송출('20.12월)
- 이주여성 폭력 예방 안내서 제작·배포(13개국어, 10만부)
 - * 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우즈베키스탄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이주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인권증진을 위해 일반국민 대상 이주여성인식 개선 홍보(연중)
 - 폭력피해이주여성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등 홍보 강화(연중)

○ 예산 현황 : 기포함

※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집행되고 있음

○ 성과지표 : 해당없음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이주여성 인식개선 및 폭력피해 예방홍보 지속 추진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담당자	양현순 서기관 최윤미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424 02)2100-6428
------	----------------	-----	--------------------	------	------------------------------

□ 과제개요

○ 목적

- 이주배경에 따른 언어적 어려움, 정보 부족 등으로 성폭력 피해 신고가 어려운 이주여성에게 예방 및 대응방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 최소화

○ 주요 내용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에 참여하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법무부 이주여성 성폭력 예방교육 동영상*을 활용하여 예방교육 강화

* '18년 법무부 연구용역으로 내·외국인 대상 유형별 이주여성 성폭력 예방교육 동영상을 언어별로 개발(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 법무부-경찰청 협업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이민자에게 성폭력 등 범죄 예방교육 특강 실시

※ 경찰청 범죄예방교육 전문강사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방문하여 실제 성폭력 등 범죄사례와 함께 예방교육 특강 실시

□ 그간의 추진실적

- '18.5월 경찰청과의 협업으로 범죄예방교육 시행(매년 실시)

※ '18년 224명, '19년 2,138명 참여

- '18.12월 이주여성 성폭력 예방교육 동영상 개발 완료

- '19.1월 전국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예방교육 동영상 배포

- '19.5월 유튜브에 예방교육 동영상 게시 및 공유

- '20.11월 이민자 대상 성폭력 등 범죄예방교육 실시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동영상을 활용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지속
- 범죄예방교육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시민교육으로 운영

○ 예산 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범죄예방교육 참여자 수(명)	200	230	결과보고서 등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통합교육 중단 등으로 교육참여자 수 감소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예방교육 지속 실시

담당부서	법무부 이민통합과	담당자	권택성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4146
------	-----------	-----	---------	------	--------------

□ 과제개요

○ 목적

-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이해를 바탕으로 결혼이민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 속성결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가정 형성 지원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 추진절차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일정에 맞게 교육일정 공지(월 2회)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을 통해 교육 신청 → 교육 참여

○ 주요 내용

-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국민과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이미 국제결혼을 한 상태에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고자 하는 사람 포함)을 대상으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실시
 - ※ 고시 국가 이외 국민과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도 교육 신청 가능
- 국제결혼 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문화 소개, 결혼이민 사증발급 절차 및 심사 기준 등 정책 안내, 사례 및 경험담 소개, 인권교육(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 해소, 가정폭력 방지 등) 등 4개 과정으로 구성

□ 그간의 추진실적

- '10.10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시범 실시
- '11.3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의무화(고시 국가)
- '18.3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과정 확대(인권교육 추가)
- '20.7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주말 교육 시범 실시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실시 :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월 2회 실시
- 만족도 조사 : 교육참여자 대상 설문실시, 교육만족도 조사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	252	150(9월 현재)	265	13	5.16
국비	252	150(9월 현재)	265	13	5.16
• 일반회계	252	150(9월 현재)	265	13	5.16
• 특별회계(회계명)					
• 기금(기금명)					
지방비					
기타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정착 및 가정 폭력 예방 - 교육참여자 만족도(%)	81.4%	75%	매우만족+만족/ 전체 응답자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사업 지속 운영

담당부서	법무부 이민통합과	담당자	서제선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4144
------	-----------	-----	---------	------	--------------

□ 과제개요

- 외국인 범죄예방교육 시 여성 대상 범죄 관련 교육 강화, 이주여성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시설을 도움센터로 지정하여 범죄피해 상담 실시
- 법무부·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여 결혼이주여성·외국인 근로자 등 체류외국인 대상별 맞춤형 범죄예방교육 실시

□ 그간의 추진실적

-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대학교·다문화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범죄예방교육 등 언택트 교육 실시
 - ※ 범죄예방교육 총 3,839회(303,938명) 실시('20.12월 기준)
- 법무부와 협업하여 체류외국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 통합프로그램 과정에 경찰관이 이주여성 대상 범죄예방교육 실시
 - ※ '20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 실시
- 언택트 범죄예방교육 기법 지속 발굴 및 우수사례 공유 등 활성화 도모,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대면 활동 제약에 따른 치안 공백 방지
- 각종 범죄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의 피해 신고를 활성화하여 암수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도움센터' 신규 위촉 기관 확대 등 재정비 실시
 -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센터 등 전국 83개 기관을 '외국인 도움센터'로 신규 위촉

□ 2021년도 시행계획

-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기존 대면·소집 방식 위주의 이주여성 대상 범죄예방 교육을 언택트 교육 방식으로 전환하여 접촉 활동과 병행 실시
 - 화상회의 프로그램(시스코 웹엑스 등)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 및 SNS 상 이주여성 커뮤니티에 동영상 교육자료* 배포 등 비대면 교육 활성화
 - * 이주여성 등 체류외국인이 쉽게 노출되는 범죄 유형(가정폭력·성폭력 등 10개) 선정, 피해 예방법 및 대응 방안 등 동영상 교육자료 제작('21.3. 限 제작·배부 예정)
 - ※ 언택트 범죄예방교육 우수사례 선발 및 쏠 경찰관서 공유

- 가정폭력·성폭력 등 이주여성 대상 범죄피해 암수화 방지 등 안전한 다문화 사회 구현을 위해 ‘외국인 도움센터’ 신규 위축·해축 등 지속 관리
- 법무부·고용노동부·여가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결혼이주여성 등 대상 맞춤형 범죄예방교육 실시
- **성과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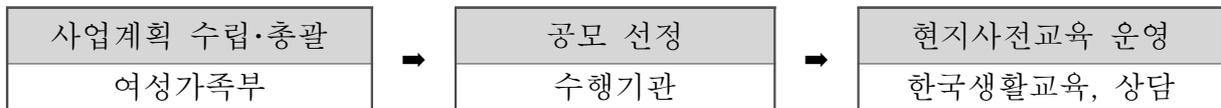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다문화 치안활동 실적(점)	0.40	0.41	다문화 치안활동 실적 DB

담당부서	경찰청 외사기획정보과	담당자	석예진 경장	전화번호	02)3150-1639
------	----------------	-----	--------	------	--------------

1-4-4-③ 이주여성 폭력피해 예방활동 확대

□ 과제개요

- (사업목적) 결혼이민자에게 한국 입국 전에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결혼생활 및 조기 정착 지원
- (주요내용) 결혼이민자가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에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전정보제공 프로그램 운영
- (추진체계)



□ 그간의 추진실적

- 결혼이민예정자 대상 현지사전교육 및 온·오프라인 상담 실시(베트남)
- 결혼이민예정자 대상 현지사전교육 제공(필리핀, 태국)

□ 2021년도 시행계획

- 필리핀 현지사전교육 온라인 콘텐츠 마련(~'21년)
- 태국 내 현지사전교육 결혼이민자가 많은 지역으로 교육 확대(~'21년)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국비					
• 기금(양성평등기금)	375	375	375	0	-

* 성별구분 없는 예산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필리핀 온라인 콘텐츠 개발	-	개발	결과보고서

* 향후 성과 점검 시, 코로나19 상황 등 고려 필요(현지정부 방침에 따른 휴강 등)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없음

기타 사항 : 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담당자	김시현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379
------	-----------------	-----	---------	------	--------------

1-4-4-③ 이주여성 폭력피해 예방활동 확대

□ 과제개요

-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외국인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성희롱 예방교육 포함) 시 부여하는 고용허가제 점수제 가점 적용**

□ 그간의 추진실적

- '18.4월 외국인 고용허가제 점수제 개편을 통해 제조업 분야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주가 사업주 교육을 참여하는 경우, 0.5점 가점을 부여하던 것을 1점으로 상향
- **신규 외국인력 고용시 적용되는 점수제 가점 항목 조정('20.1월~)**
 - 외국인 고용사업주의 인식개선 및 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주 교육 강화** 차원에서 **가점 수준 상향**
 - *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 : (변경 전) 제조 1점 / 기타 2점 → (변경 후) 2점

□ 2021년도 시행계획

- 신규 외국인력 고용 시 **외국인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성희롱 예방교육 포함) 시 부여하는 고용허가제 점수제 가점 적용**
- **예산 현황** : 해당없음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사업주 교육 이수 교육 가점받은 사업장(비율)	14.6% * (가점) 2,325개소, (신청) 15,870개소	15%	신규 고용허가 신청 사업장 대비 가점받은 비율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담당자	김형숙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7148
------	------------------	-----	---------	------	--------------

□ 과제개요

- 외국인 유흥업소에서 예술흥행(E-6)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에 대한 성매매 강요 알선, 임금착취 등 인권침해 및 불법행위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관계법령 위반 여부 확인
 - * 여성가족부(주관), 법무부, 고용노동부, 문체부, 영등위 및 지자체 참여
 - 민관 협력으로 외국인 운영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실태 파악

□ 그간의 추진실적

- '14년~'19년까지 매년 2회(상·하반기) 외국인전용유흥업소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함
 - '20년 코로나19로 미 실시

□ 2021년도 시행계획

- 여성가족부 주관 외국인전용유흥업소 관계 기관 합동 점검 참여
- 예산 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외국인전용유흥업소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	0회	2회	공문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여성가족부 주관 외국인전용유흥업소 관계 기관 합동 점검 참여

담당부서	법무부 체류관리과	담당자	이취경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4067
------	-----------	-----	---------	------	--------------

□ 과제개요

-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강요 등 점검
 - ※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205만여명, 그 중 불법체류자 39만명('20.11월 기준)

□ 2021년도 시행계획

- 풍속업소 단속 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 대상으로 성매매 강요 등 폭력피해를 점검하고 범죄행위 발견 시 수사 연계
- 신고·수사과정에서 언어 문제로 이주여성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통역 기반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제고하여 원활한 통역 지원 서비스 제공
 - (통역서비스 운영 현황) 현재 112신고·상담 등을 위한 '전화통역(3자 통화)'과 수사를 받고 있는 외국인 등을 위한 '직접통역(통역요원)' 서비스 제공

<전화통역(3자 신고통화)>

- 외국인 전화통역기관* 연계, 112 신고·민원상담 등 전화통역 서비스 제공
 - * ① 다누리콜센터(1577-1366, 여가부), ② 외국인종합안내(1345, 법무부), ③ 관광안내(1330, 관광공사), ④ BBB(1588-5644, NGO), ⑤ 피커폰(통역업체)

- (수사통역 전문화 교육 실시) '17년부터 통번역대학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민간 통역요원 대상 △법률·수사용어 △통역기법·윤리 등 교육
 - ※ '20년 교육지역·인원을 확대하고 전문화 교육 이수자 대상 심화과정 신설 예정
- 이주여성이 피의자로 입건되었거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기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안내 및 조력 방안 검토 등 피해회복 지원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점검	-	연 1회	수기통계

담당부서	경찰청 외사기획정보과	담당자	석예진 경장	전화번호	02)3150-1639
------	-------------	-----	--------	------	--------------

□ 과제개요

- 다누리콜센터와 경찰이 협력하여 다국어 전화통역 상담 실시, 112 다국어 신고 앱을 개발하여 신고불편을 개선하고 신속한 신고 체계 구축
- 이주여성들이 모국어로 언제든지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언어장벽을 해소하고 치안서비스 정보 접근성 향상

□ 그간 추진실적

- 이주여성의 치안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통합 긴급신고 앱(이하 ‘앱’) 내 외국어 지원 기능 마련 방안 협의 완료('19.9)

□ 2021년도 시행계획

- (경찰청) 최초 앱 실행 시 사용언어(중국어, 베트남어 등 12개 외국어*)를 선택 하면, 앱의 모든 콘텐츠를 선택언어로 번역해 표시하는 기능 개발 예정
 - * ① 중국어 ② 베트남어 ③ 태국어 ④ 영어 ⑤ 우즈베크어 ⑥ 일본어 ⑦ 필리핀어 ⑧ 러시아어 ⑨ 인도네시아어 ⑩ 캄보디아어 ⑪ 몽골어 ⑫ 네팔어(체류외국인 인원 順)
- 앱 내 간단한 그림·문장들을 조합하여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함으로써, 이주여성의 범죄 신고를 보다 폭넓게 지원 가능
- (여가부) 다국어 신고앱 개발과 관련하여 경찰청과 협력하여 다누리콜센터 결혼이주민 상담자원을 활용, 앱 개발에 따른 통번역 추진
 - * 다누리콜센터 : 365일, 24시간 13개 언어로 긴급 및 위기지원 상담, 한국생활 정보제공, 폭력피해여성 긴급지원 및 상담, 3자 통화 등, 서울 및 지역센터 등 7개소(99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통합 긴급신고 앱 내 다국어 번역기능 등 개발	-	개발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없음

□ 기타 사항 : 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담당자	천운찬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376
------	-----------------	-----	---------	------	--------------

1-4-5-①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정보 접근성 확대

□ 과제개요

- 이주여성의 치안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통합 긴급신고 앱(이하 앱)’내 외국어 지원 기능 마련 방안 협의
- 이주여성은 여성이자 외국인이라는 이중지위로 인해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언어 장벽’의 해소가 반드시 선행 필요

□ 2020년도 추진실적

- 최초 앱 실행 시 사용언어(중국어, 베트남어 등 13개 외국어*)를 선택하면, 앱의 모든 콘텐츠를 선택언어로 반영하여 표시하는 기능 개발
 - * ①중국어 ②베트남어 ③러시아어 ④영어 ⑤필리핀어 ⑥캄보디아어 ⑦네팔어 ⑧인도네시아어 ⑨태국어 ⑩미얀마어 ⑪몽골어 ⑫일본어 ⑬스리랑카어('19년 등록외국인 인원 順)
- 앱 내 간단한 그림·문장들을 조합하여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함으로써 이주여성의 범죄 신고를 보다 폭넓게 지원 가능

□ 2021년도 시행계획

- 최초 앱 실행 시 사용언어(중국어, 베트남어 등 13개 외국어*)를 선택하면, 앱의 모든 콘텐츠를 선택언어로 번역해 표시하는 기능 개발 완료(행안부)
 - * ① 중국어 ② 베트남어 ③ 러시아어 ④ 영어 ⑤ 필리핀어 ⑥ 캄보디아어 ⑦ 네팔어 ⑧ 인도네시아어 ⑨ 태국어 ⑩ 미얀마어 ⑪ 몽골어 ⑫ 일본어 ⑬ 스리랑카어('19년 등록외국인 인원 順)
- 행정안전부에서 사전테스트 시행 후, '21년 하반기 전국 시행 예정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통합 긴급신고 앱 개발	-	20년 과제종료	

담당부서	경찰청 외사기획정보과	담당자	이재영 경위	전화번호	02)3150-2376
------	----------------	-----	--------	------	--------------

□ 과제개요

- (사업목적)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등을 통한 피해자 인권보호
- (근거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상담소의 설치·운영) 및 제6조(상담소의 업무)
- (사업내용)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에 대해 상담지원, 의료·통·번역 지원, 고용·체류에 관한 상담, 보호시설(쉼터, 그룹홈 등) 연계 지원 등
- (추진체계)



□ 그간의 추진실적

- 이주여성 상담소 신규 개소·운영
 - * ('19년) 대구, 인천, 충북, 전남, 제주, ('20년) 충남, 전북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국비지원 상담소를 통해 상담지원, 의료·통·번역 지원, 고용·체류에 관한 상담, 보호시설(쉼터, 그룹홈 등) 연계 서비스 지원
- 예산 현황 : 기포함
 - *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집행되고 있음

○ 성과지표 : 해당없음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이주여성 상담소를 통한 이주여성 폭력피해 신고 활성화 및 피해자 지원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담당자	양현순 서기관 최윤미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424 02)2100-6428
------	----------------	-----	--------------------	------	------------------------------

1-4-5-② 이주여성 폭력피해 신고 활성화

□ 과제개요

-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외국인노동자가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외국인노동자 송출국가 언어로 된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센터 운영**

□ 그간의 추진실적

- '18.4.11, 여성 외국인노동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근절방안 마련**
* 외국인노동자도 우리부 홈페이지의 '익명신고센터'를 활용하도록 외국어 버전 운영
- '10.15, 직장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 **영어 외 동티모르 등 16개국* 외국어 버전 제공**
* 영어, 베트남, 네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동티모르, 라오스,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크, 방글라데시아, 중국, 스리랑카, 몽골, 태국, 필리핀, 미얀마

□ 2021년도 시행계획

-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 운영 홍보 강화
 - 입국 후 취업교육시 직장내 성희롱 교육과 더불어 익명신고센터 운영에 대하여 교육에 포함
 -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점검시 외국인노동자 대상으로 안내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외국인력상담센터 등에 성희롱 익명신고센터 홍보
- 폭행 및 성희롱 피해 전담 상담서비스 운영 활성화
 - 폭행 및 성희롱 피해 외국인노동자 피해구제 및 보호를 위한 **심층상담실 운영 및 전담자 지정(거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9개소)**
- 예산 현황 : 해당 없음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외국인노동자 대상 교육(인원)	교육: 3,593명*	도입인원 전체	도입인원

* 코로나19로 '20년 3월 이후 신규 외국인근로자 입국 중단으로 3,593명 입국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담당자	김형숙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7148
------	------------------	-----	---------	------	--------------

1-4-5-②

이주여성 폭력피해 신고 활성화 (출입국·외국인관서 ‘인권·고충상담관’ 운영)

□ 과제개요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별 ‘인권·고충상담관’ 지정, 운영
 - 관내 체류외국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상담 및 체류지원 실시
 - * 필요시 유관기관 등에 피해구제 지원, 행정서비스를 위한 협조 및 연계 실시

□ 그간의 추진실적

- 전국 18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인권·고충상담관 지정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전국 18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인권·고충상담관 지정, 운영
- 예산 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인권·고충상담관 지정(개소)	18	18	지정현황 통계 등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인권·고충상담관 지정, 운영
 - 관내 체류외국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상담 및 체류지원 실시

담당부서	법무부 이민통합과	담당자	정해정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4149
------	-----------	-----	---------	------	--------------

□ 외국인 권익 옴부즈만 제도 도입

○ 배경

-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인종, 피부색 등을 기준으로 한 사회적 편견, 혐오증, 폭력 등 차별현상을 방지할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 방지 및 권리 구제를 위한 방안 마련

○ 외국인 권익옴부즈만 제도 마련 및 구성

- (구성) 지방 청(사무소)별 권익옴부즈만* 지정
 - * 사회통합위원, NGO, 인권변호사 등 민간 옴부즈만 위촉
- (업무) ① 인권침해·차별·역차별 사례 수집, ② 고충 및 인권침해 상담, ③ 외국인관련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등
- (권한) 인권침해 및 차별 여부에 대한 조사 후 청(사무소)별로 지정된 인권·고충상담관을 통해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위원회」에 상정

□ 그간의 추진실적

- 외국인 권익옴부즈만 세부계획(안) 마련('18.11월)
- 지방 청(사무소) 공문 시달('18.12월)
- 외국인 권익옴부즈만 도입 및 운영에 대한 추가 공문 시달('19.3월)
- 외국인 권익옴부즈만 위촉 완료('19.3~4월)
 - 16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별로 5인 이내로 구성 : 총 67명

□ 2021년도 시행계획

- 외국인 권익옴부즈만 운영
- 예산 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외국인 권익옴부즈만 운영(개소)	16	16	지정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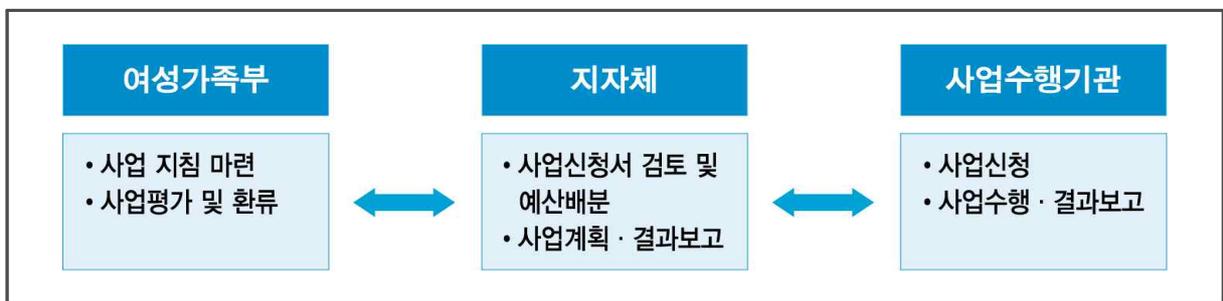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외국인 권익옴부즈만 지정·운영

담당부서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담당자	박래식 주무관	전화번호	02)2110-4107
------	------------	-----	---------	------	--------------

□ 과제개요

- (사업목적)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자녀에 대한 모국어 상담, 일시보호, 의료·법률지원, 직업훈련 등을 통한 폭력 피해이주여성의 인권보호 및 자립 지원
- (추진체계)



□ 그간의 추진실적

-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운영(28개소)
 -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에 대한 일시보호, 상담,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의료·법률지원 등
-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운영(3개소/서울2, 충남1)
 -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주거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1개소/서울)
 -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동반자녀에 대한 주거 및 기초생활 지원, 직업기술교육 훈련, 취업알선, 동반자녀 보육지원 등
- 폭력피해이주여성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응 여건조성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1인당 500만원)

□ 2021년도 시행계획

○ (보호시설운영)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확대를 통한 피해자 지원 강화

-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1개 신설 추진(인천, 예정)

* '21년 보호시설 운영계획(안) : 쉼터(28개소), 그룹홈(4개소), 자활지원센터(1개소)

○ (만족도 조사)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내실화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호시설 입소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0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양성평등기금)	6,200		6,410	210	3.4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지원실적	79,685건 (추정치)	79,985건	연도별 보호시설 실적 평균치를 기준으로 상향 조정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 및 보호시설 입소자 대상 만족도 조사 추진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담당자	양현순 서기관 최윤미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424 02)2100-6428
------	----------------	-----	--------------------	------	------------------------------

1-4-5-④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 운영

□ 과제개요

- 사용자의 성폭행을 이유로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긴급 사업장 변경 제도 운영

□ 그간의 추진실적

- 긴급 사업장 변경 대상 성폭행 범위 검토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실시 및 법률자문 등(~'18.5)
 -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경기 안산해바라기센터 관계자 등
-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 도입('19.2.1. 사업장 변경 고시 시행)
- 사업장 변경 고시안 개정 절차 진행(~'19.1.4)

□ 2021년도 시행계획

- 긴급 사업장 변경 대상 및 가해자 범위 확대('21.~)
 -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긴급 사업장 변경 신청이 가능하던 것을 가해자의 범위를 사용자, 직장동료,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확대
 -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고시 개정 예정
- 긴급 사업장 변경신청 시 신속히 검토하여 피해 노동자 적극보호
 - 사용자 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여 사업장 변경신청시 즉시 사실관계 확인 후 신속히 사업장 변경 조치
- 예산 현황 : 해당없음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3일 이내 긴급사업장 변경 조치	○ 신청 1건으로 3일 이내 사업장 변경 (100%)	○ 3일 이내 사업장 변경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우선 긴급 사업장 변경 조치 여부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담당자	김형숙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7148
------	------------------	-----	---------	------	--------------

□ 과제개요

-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은 외국인 여성에게 성폭력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등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기존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별도의 체류자격 부여 및 체류기간 연장 허용

□ 그간의 추진실적

- ('04. 5. 07.) 성매매 피해 외국인여성이 구제절차를 마련할 때 까지 기타 (G-1) 체류자격 부여(불체에 따른 통고처분 면제)
- ('07. 5. 07.) 성매매 피해 외국인여성에 대하여 특정활동(E-7)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함
- ('13. 4. 19.) 기타(G-1) 체류자격 대상을 종합하여야 별도 지침을 마련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명문화함*

* 체류외국인 중 성매매 강요, 상습폭행·학대, 심각한 범죄 피해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해 그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밟고 있는 자로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 협의회”에 의해 구제대상자로 결정된 자

- ('14. 12. 30.)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3(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칙) 신설*

* 제25조의3(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특칙)

① 법무부장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성폭력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 ('18.1.17.) 폭력피해 이주여성이 보다 신속하게 기타(G-1)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의 결정 절차 삭제*

* 체류외국인 중 성폭력범죄*, 성매매 강요, 상습폭행·학대, 심각한 범죄 피해 등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19.4. 15.) 폭력피해 이주여성은 단순노무 업종까지 취업이 가능하도록
기타(G-1) 지침 개정

《연도별 G-1(범죄피해자) 체류자격자 체류 현황(매년 12월말 기준)》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10
체류자수(명)	20	28	35	36	46	58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현행 법령과 지침 유지
- 예산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성과 지표 : 해당사항 없음(사업 대상 아님)

담당부서	법무부	담당자	이종철사무관	전화번호	02)2110-4069
------	-----	-----	--------	------	--------------

2-1-1-① 가정폭력 사건 대응력 강화

□ 과제개요

-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범죄유형별·단계별 가정폭력 사건 처리 지침」 마련·보완
- 여성폭력 사건 수사 및 피해자 보호를 전담하는 여성청소년 수사팀·학대예방경찰관 인력 확충 및 직무교육 강화

□ 그간의 추진실적

- 「가정폭력범죄 단계별 대응모델」 전국 시행('19.6월)
 - 부처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18.11月)의 일환으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유형별·단계별 표준 대응방안 수립
 - △시범운영(서울 노원·마포·혜화, '18.12月~) △권역별 순회교육 △경찰서 전수교육 등 통해 현장의견 수렴, 「단계별 대응모델」 최종안 마련

< 단계별 대응모델 주요 내용 >

① 초동조치	△ 범죄혐의와 객관적 위험성 토대로 적극적 사건처리·긴급임시조치 ※ 가정폭력 신고이력 보관기간 1→3년 확대, 재발우려가정 관리 강화 △ 피해자 응급조치, 전문기관 연계 등 피해자 보호 철저 △ 긴급임시조치 활성화를 위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기준 개선
② 엄정대응	△ 세밀한 수사로 상습성 규명, 입건 및 구속여부 검토 철저 △ 임시조치, 피해자(임시)보호명령 적극 추진 등 △ 피해자가 처벌 불원할 경우에도 가정보호사건 송치(보호처분)
③ 사후관리	△ 가해자 재발 방지 및 피해자 상담 등 경찰·지자체 중심 다기관 협업체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후관리 강화 △ 실효성 있는 현장 범집행력 확보를 위한 法 개정 추진

- 수사·예방활동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 및 직무교육 강화
 - 업무량 증가에 따라 여청수사팀·APO 정원 지속 확대
 - * △(여청수사팀) '15년 2,653명 → '21년 3,910명 △(APO) '13년 138명 → '21년 669명
 -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14개)
 - * △ 쉼 경찰관 대상 성평등 감수성 향상교육 확대(年 1회 이상) △ 최신 법률·사례 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 △ 교육과정 평가·모니터링 등 실시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현황

구분	보호·의료기관 연계	사례회의	사후지원
'19년	50,894	1,242	2,969
'20년	56,643	3,725	8,677
대비(%)	11.3 ↑	199.9 ↑	192.3 ↑

□ 2021년도 시행계획

- 「가정폭력범죄 단계별 대응모델」이 현장에 내실있게 정착되고, 경찰 소 단계에서의 책임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응체계 고도화 추진

- (초동조치) △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보완 △분기별 현장교육·간담회 등 추진
- (수사) 행위자 위험요인·피해자 취약요인을 면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마련
- (사후관리) △ 지역 특성에 맞는 다기관 협업체계 확대 △APO 시스템 개선 등

- '22년 확대예방경찰관(669 → 820명), 여청수사팀(3,910 → 4,357명) 증원 추진
- 성평등 감수성 향상 및 현장·사례 중심의 직무교육과정 운영
 - ※ △ 소 경찰관 대상 성평등 감수성 향상교육 확대(年 1회 이상) △ 최신 법률·사례 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 △ 교육과정 평가·모니터링 등 실시
-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찰·전문기관(1366·상담소) 등 협업을 통해 각 기관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살린 '가정폭력 대응 다기관 협업체계' 구축

< 가정폭력 대응 다기관 협업체계 역할(例) >

- (지자체) 인력·예산 지원을 통한 피해자 중심 보호체계 구축
- (전문기관) 경찰 연계 피해자 상담 및 사례 관리
- (경찰) 범죄예방, 피해 발굴 및 상담·지원 연계, 가해자 대응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가정폭력 사건대응률	41.8%	43.8%	수기통계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담당자	이지호 경감	전화번호	02)3150-0891
------	-------------	-----	--------	------	--------------

2-1-1-② 가정폭력 재범 방지 조치 강화

□ 과제개요

- 현장조치의 객관성·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세밀한 재범위험성조사표 (조사항목, 후속 조치기준 등) 개발·활용

□ 그간의 추진실적

- 신뢰성·타당성이 검증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초동대응단계부터 활용하고, 현장경찰의 적극적 개입과 民·官·警 다기관 협업체계* 구축으로

< * 지역별 가정폭력 협업체계 유형 >

- ① 지자체 內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마련, 사회복지공무원·경찰(APO)·상담원이 상시 합동근무하는 협업체계
- ② 경찰-전문기관(1366·가정폭력상담소 등) 間 MOU를 통해 재발우려가정 사후 모니터링은 전문기관에서 수행하고, 복지지원은 지자체에 연계하는 협업체계
- ③ 재발우려가정 사후 모니터링 時 경찰·지자체·전문기관 합동방문

- 「가정폭력범죄 단계별 대응모델」 시행 이후 1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검거 인원 23% 증가 △긴급임시조치 15% 증가 등 경찰대응 지표 개선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통과('21.1.21. 시행), 보다 적극적인 경찰의 현장대응 기반 마련

< 주요 개정내용 >

- (정의)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카메라 이용 촬영범죄’ 등 포함
- (응급조치) 응급조치 조항에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 체포’ 추가
- (임시조치) △주거지·직장 등 장소뿐 아니라 사람(피해자·가정구성원)에 대해서도 100m 內 접근금지 가능 △판사 직권으로 ‘상담위탁’도 가능
- (임시조치 불이행) 기존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서 형사처벌(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로 상향, 위반 시 처벌 강화

□ 2021년도 시행계획

○ 가정폭력범죄 단계별 대응체계 지속 고도화

-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적극적 대응기조 강화
- APO업무관리시스템 개선 등 지자체·전문기관과의 협업 인프라 확대
- 가정폭력 관련 법집행 균질화를 위한 주기적인 현장교육 실시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가정폭력 사건대응률	41.8%	43.8%	수기통계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담당자	이지호 경감	전화번호	02)3150-0891
------	-------------	-----	--------	------	--------------

□ 과제개요

-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톱킹 및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피의자 엄정 처벌·피해자 보호 강화로 국민 불안해소 및 경찰 신뢰도 제고
- 데이트폭력 근절 TF 및 스톱킹 대응 TF 구성·운영 등 체계적 대응
 - * 경찰서 형사과장(데이트폭력), 여성청소년과장(스토킹)을 중심으로 관련기능 연계. 총괄적·유기적 대응 및 역할조정(수사, 신변보호)

□ 그간 추진실적

- 「스토킹범죄 현장대응 강화지침」 내실화·고도화 노력
 - 신고·현장조치·수사·신변보호 등 단계별 지침을 보다 세밀하게 정비하여 내실 있는 행위자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도모
 - * △ 행위유형별 적용 법규 명확화 △ 기능별 담당 업무 세분화 △ 기능 합동 TF운영 등
 - 스톱킹 등 젠더폭력 전반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내부교육 강화
 - * 스톱킹·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대응 고도화 관련 현장교육('20.7~8월, 18개청) 실시

□ 2021년도 시행계획

- 스톱킹처벌법 제정 前 스톱킹범죄 현장대응 지침 지속 보완·강화
 - 현장대응 우수·미흡사례 등 수집, 매뉴얼·교육안 등에 반영·개선
 - 실효성 있는 현장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관협업 방안 등 연구
- 스톱킹처벌법 제정 時 주요 내용을 반영한 해설서·가이드라인 등 자료 제작
 - 법시행 초기 현장 연착륙을 위한 관서별 현장 교육(사이버교육) 실시
 - 스톱킹 등 젠더폭력 인식 개선을 포함한 2차피해 예방 교육 지속 강화
 - 경찰서 여청수사팀 內 「스토킹전담조사관」 지정·배치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스토킹신고 정보 연계 관련 APO시스템 고도화		고도화사업 완료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담당자	이지호 경감	전화번호	02)3150-0891
------	-------------	-----	--------	------	--------------

□ 과제개요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19.12.25.) 및 “젠더폭력방지 추진기반 구축 및 인식 개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대검찰청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무고·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시, 이러한 고소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게 되어 피해 진술을 어렵게 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 문제를 발생 시킴
- 이에 피해자가 2차 피해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

□ 그간의 추진실적

- '18. 5. 성폭력 수사매뉴얼(무고인지 시 유의사항) 개정
 - 성폭력 사건에 대한 무고,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접수되었을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종료되어 최종 처분이 가능할 때까지 원칙적으로 무고,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
- '18. 5.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 수사 시 위법성 조각사유 적용 검토 지시
 -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가 있을 경우, 피해자들이 심리적 부담으로 피해 진술 어려움 등이 있으므로 위법성 조각사유 면밀 검토
- '19.12. 성폭력 수사매뉴얼(제2판) 및 성범죄 판결분석과 수사시 유의사항 등 일선청 배포
 -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내용을 포함한 '성폭력 수사매뉴얼' 및 여성·아동범죄 전문검사 커뮤니티에서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피해자로 삼는 폭력과 각종 범법행위에 관하여 수사와 재판의 실무상 쟁점들을 연구하여 발간한 '성범죄 판결분석과 수사시 유의사항' 책자를 일선청 배포
- '20.2., 9. 여성·아동 등 전담검사 지정 및 운영 현황 파악
 - 여성·아동 대상 범죄 전담검사 지정 및 지정에 따른 사건처리지침 송부

- '20.6. 여성·아동분야 저년차 검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성폭력사건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교육 등 역량 강화 도모
- '20.11. 성폭력·아동학대 관련 사건 고소인(고발인) 통지시스템 개선
 -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 관련시스템 개선

□ 2021년도 시행계획

- 성폭력 수사매뉴얼(무고인지 시 유의사항) 이행 강화 지시(연중)
 - 무고, 명예훼손 고소사건 관련 성폭력 수사매뉴얼 이행 강화 지시 및 지속적 점검
- 피해자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 등 제도 활용(연중)
 -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법정 동행 등을 통한 2차 피해 방지, 피해자에 대한 경제·의료·법률 지원, 예술·심리치료 등 적극 실시
-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여성폭력 사건 담당 수사역량 강화(연중)
 - 전문검사교육, 유관기관과의 공동 포럼, 간담회 등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및 협업 활동 강화
- 여성폭력 전문 대응 역량강화 실질화(상·하반기)
 - 여성·아동 대상 범죄 전담검사 지정 및 지정에 따른 사건처리지침 송부
- 예산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명)	성폭력 : 17,413 ('20.01~'20.09)	성폭력 : 23,966	전국청 수기취합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법무부 형사기획과	담당자	이갑호 주무관	전화번호	02)2110-3271
------	-----------	-----	---------	------	--------------

□ 과제 개요

- 2차 피해 예방 교육 활성화를 통한 현장 경찰관 성인지 감수성 제고
- AI음성기술 활용 및 여청수사관 조사역량 강화를 통한 피해자 보호

□ 그간의 추진실적

-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2차 피해 예방 종합 계획 수립·추진
 - (예방체계 구축) 경찰관서 여청과장을 「2차 피해 책임관」으로 지정, △2차 피해 신고접수 △모니터링 △피해자 통지 △기능별 교육 등 총괄
 - (규칙·매뉴얼 정비) 경찰청 규칙 및 매뉴얼 등 정비, 2차 피해 개념 명문화
 - (예방 강화) 초동조치-수사-사후관리 등 단계별 2차 피해 예방 강화
 - (여성단체 소통) 관서별로 여성단체 등과의 교류 활성화, 제언 발굴·정비
- 성폭력 사건 악의적 댓글에 대한 사이버 수사 강화
 - 악성 댓글로 2차 피해 호소하는 경우, 내·수사 착수 등 엄정 대응

▲ 정도가 심한 욕설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성 표현을 사용한 경우, ▲ 가족 구성원까지 비하·모욕한 경우 등

- 피해자들(가족·지인 등)의 신상정보 유포 및 악의적인 게시글에 대하여 방통위·방심위·포털업체 측에 삭제·차단 요청 등 피해자 보호 강화
- 무고·명예훼손 고소사건 관련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 추진
 - 성범죄 逆 고소사건 수사 개선방안 지시·하달('18.5.)
 - 성범죄 사건 검찰송치 시까지 피해자에 대한 역고소(무고·명예훼손) 사건 수사 중지 및 부득이 수사 개시가 필요한 경우, 심사위 개최·결정
 - 현장점검 시, 지침 이행실태 확인·점검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연중)

□ 2021년도 시행계획

○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경찰관 교육 강화

- 조사과정조정관·현장 강사 등 활용, 지방청 단위 2차 피해 전문강사 양성, 현장 경찰 교육 활성화 (자치경찰 교육 포함)
- 여성단체 등으로부터 수집한 實 사례 위주의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작·배포로 현장교육 지원, 경찰관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 기존 사례형 교육자료 개선(청소년 성매매 추가) △ Q&A 형식 교육자료 신규 제작
 △ 전문강사용 2차 피해 예방 표준 강의안 배부

○ AI 음성인식 기술 활용 피해조사·지원

- 성폭력 피해자 조사 시 피해자의 풍부한 진술 유도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위해 AI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피해조사·지원
 * 수사관의 조서작성 부담 해소 및 수사관의 개방형 질문을 통해 2차 피해 예방
- AI가 조사-문답을 인식해 조서 형태로 출력하고 진술내용에 따라 매뉴얼·후속 질문 등을 실시간으로 구현하는 시스템 구축(59개서)
- 시행관서를 1급서 대상으로 확대(88개서)하여 추가·설치하고 사투리 등 음성 인식률을 지속 향상(現 90% 이상)하여 시스템 고도화 추진

○ 성폭력 피해자 조사기법 관련, 현장 중심 교육 강화

- (전문조사기법) 여청수사관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등 위해 「성폭력 피해자 표준조사 모델」을 적용한 전문조사기법 활용능력 제고
- (교육과정 신설) 인지심리학 전문 교육기관 등 학계·수사연수원·외부기관과 함께 초-중-고급 등 수준별 전문조사기법 교육과정 개설
- (외부전문가 코칭·지도) 수사관이 실제 진행한 피해자 조사사례에 대해 개별 코칭·피드백을 통해 교육 효과 제고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AI 운영 경찰관서(개서)	-	88	AI 음성인식

담당부서	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안전기획과	담당자	송수진 경감	전화번호	02)3150-0832
------	----------------------	-----	--------	------	--------------

□ 과제개요

○ 사업 목적

- 피해사실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어려운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진술조력 및 법률조력을 제공하여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참여권 및 진술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회복을 도모

○ 추진 체계

- 피해자 국선변호사 : 법무부(예산편성·배정, 업무지침 시달, 국선변호사 교육)
 - 각급 검찰청(비전담변호사 수당 예산 집행, 국선변호사 지정·보고)
 - 대한법률구조공단(국선전담변호사 운영, 예산 집행, 국선변호사 교육)
- 진술조력인 : 법무부(진술조력인 양성, 자격·명부 관리, 진술조력인 교육)
 - 경찰, 검찰, 법원 각 기관(진술조력인 선정 및 활용)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상근 진술조력인 운영, 예산 집행)

○ 주요 내용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증원 및 지방 위주 추가 배치, 권역별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 피해자 국선변호사 간담회 등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여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2차 피해 방지 및 권익보호 노력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의 적극적 법률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권익 증진 및 2차 피해 방지 노력
- 상근 진술조력인 증원, 진술조력인 대상 보수교육,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활용도를 높여 피해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움

□ 그간의 추진실적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활성화

- '12.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 '13.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전체 성폭력 피해자로 지원대상 확대
- '13.7. 피해자 지원의 전문성·신속성 제고를 위해 ‘국선전담변호사’ 도입
- '14.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 까지 지원 대상 확대
- '16.1.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2명 추가 배치(총 17명, 전주, 제주)
- '16.8. 피해자 국선변호사 업무매뉴얼 전면 개정 및 배포
- '17.4. 유관기관 및 전문가 협력 강화를 위해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개최
- '18.5.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 개정
- '18.6.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상반기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
- '18.6. 피해자 국선변호사 업무매뉴얼 재개정 및 배포
- '19.3. 국선전담변호사 4명 추가 배치(총 21명, 강원, 충남, 전남, 경남)
- '19.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원대상 확대
 - * 법률 제8조의2 신설, 궁박한 상태에서 간음·추행당한 피해 아동·청소년 포함 (아동·청소년이 궁박한 상태에 놓여 성매매를 하게 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 '20.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법률지원 조치
 - * 형사절차 법률지원 60건, 손해배상청구소송 2건, 개명신청·주민등록변경 신청 등 민사적 보호 조치 5건 등 지원
- '20.4. 국선전담변호사 2명 추가 배치(총 23명, 경기, 부산)
- '20.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원대상 확대
 -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피해자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해 예외없이 국선 변호사 지원 가능
- 매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정책간담회 및 현장점검, 권역별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전문화교육 실시
- 매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국선변호사 선정을 통해 피해자 법률 조력 강화

○ 진술조력인 지원 활성화

- '13.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 '14.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을 아동학대범죄까지 확대
- '16.1. 전국 각 지역 해바라기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10개소에 진술조력인 상근 배치(10명, 해바라기센터 등)
- '17.1. 상근 진술조력인 전국 배치 확대(11명, 해바라기센터)
- '18.1. 상근 진술조력인 전국 배치 확대(12명, 해바라기센터)
- '18.1. 수사기관의 진술조력인 활용 수당을 법무부로 통합
- '18.1. 진술조력인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진술조력인 참여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정, 경찰 및 검찰 송부
- '19.3. 장애인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진술조력 시범실시
- '19.4. 상근 진술조력인 전국 배치 확대(총 15명, 해바라기센터 등)
- '19.4. 비상근 진술조력인 전문성 강화를 위한 권역별 사례관리회의 실시 (경상도 권역)
- '19.5.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등 대상 진술조력인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 배포
- '19.6. 법원행정처를 통해 일선 법원 대상 진술조력인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 배포
- '19.10. 비상근 진술조력인 전문성 강화를 위한 권역별 사례관리회의 실시 (서울·경기 권역)
- '20.3. 상근 진술조력인 전국 배치 확대(총 16명, 경기해바라기센터)
- '20.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 안내
 - *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관련, 수사 초기 죄명에 무관하게 진술조력인 적극 지원 안내
- '20.1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시행에 따라 지원 대상 확대
 - * 아동학대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참고인, 증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도 지원
- '20.10. 비상근 진술조력인 전문성 강화를 위한 권역별 사례관리회의 실시 (전라도 권역)

- 매년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10명~15명), 상·하반기 보수교육 및 진술조력 역량 향상을 위한 슈퍼비전 실시
- 매년 진술조력인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례관리회의 매월 실시, 의견 수렴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신종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및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한 전문강의 발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강의 시스템 구축 등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전문화교육 내실화
 - * '19년 「성인지 감수성의 이해」, '20년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의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 등 전문강의 발굴
- 재정당국 및 여성가족부,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피해자 국선 변호사 수당 및 전담변호사 증원 예산 확보 추진
 - *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전담변호사의 전문성이 필요한 범죄 증가, 지역별 균형있는 전담변호사 배치 필요, 매년 지원건수 안정적 증가 등의 사유로 예산 증액 필요
- 재정당국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진술조력인 수당 및 상근 진술조력인 증원 예산 확보 추진
 - * 매년 진술조력인 수당 부족으로 인해 국회 반복 지적, 지역별 균형있는 지원을 위해 상근 진술조력인 배치 필요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6,240	6,240	6,869	629	10.1
국비	6,240	6,240	6,869	629	10.1
• 기금(범죄피해자보호기금)	6,240	6,240	6,869	629	10.1
○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1,029	1,029	1,106	77	7.5
국비	1,029	1,029	1,106	77	7.5
• 기금(범죄피해자보호기금)	1,029	1,029	1,106	77	7.5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성폭력 피해자 법률조력 지원건수	20,544 (10월 기준)	26,231	성폭력 피해자 대상 국선변호사 지원 건수 및 진술조력인 지원건수의 합계 (18년, 19년 실적 및 20년 예상치 기준 3개년 연평균 증가율 6.4% 적용)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진술조력인 확대 및 인력증원 추진
 - 국선전담변호사 증원을 통해 미배치 지역 우선 배치 및 지역별 불균형 해소
 - 지속적인 진술조력인 추가 양성 및 미배치 권역별 상급 진술조력인 배치 확대

□ 기타 사항

-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지속 및 상향된 정부 방역단계·지침 준수로 인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교육 수강인원 감소에 따라 온라인 강의 등 교육
방식 다각화 검토 필요
- 지역사회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하여 피해자 국선
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배치에 대한 여성가족부 및 기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필요

담당부서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담당자	이진선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3852
------	-------------	-----	---------	------	--------------

□ 과제개요

- 수사 시 피해자 권리고지·지원제도 상세 안내 및 매뉴얼·지침 등에 따라 불법 촬영기기 및 저장매체 등 영상물 압수처리

□ 그간의 추진실적

-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안내 및 압수물 처리 절차 반영, 매뉴얼 개정('20.3월)
- 수사관에 의한 피해 영상물 유포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단계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해자에 상세한 설명으로 2차 피해 예방 및 보호 강화(8. 20.)

□ 2021년도 시행계획

- ▲피의자와 분리, 진술녹화실 활용 ▲피해자 보호 지원관 지정·운영(성폭력 범죄의수사및피해자보호에관한규칙 제8조)
- 신고접수 및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지원 내용을 반영한 매뉴얼 개정, 성평등 감수성 강화 교육 추진
- 피해자 동의 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 피해 영상물 등록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 성과지표

<불법촬영물추적시스템 통계>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불법촬영물추적시스템 등록 건수	5,000건	7,000건	시스템 통계

담당부서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담당자	정병선 경감	전화번호	02)3150-1159
------	-----------------	-----	--------	------	--------------

□ 과제개요

-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력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 그간의 추진실적

- '20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시행
 - 예방지침 표준안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등에 대하여 고충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금지 등 적시

□ 2021년도 시행계획

- '21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개선·시행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1.1.21 시행 예정) 사항을 반영하여 불이익조치의 구체적 유형을 보완하여 표준안 시행
- 공공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마련·배포
 - *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기관 내 2차 피해 처리 절차 및 제도 마련을 위해 필요한 조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직구성원별 책무, 예방 교육 등 규정
- 예산 현황 : 해당없음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수립·시행	개정·시행	개정·시행	예방지침표준안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21년 공공기관별 자체 성희롱·성폭력예방지침 수립여부 이행점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담당자	유정주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395
------	----------------	-----	---------	------	--------------

□ 과제개요

○ 주요내용

- 직장 내 성희롱 신고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에 피해자·신고자 이외에 조력자도 포함

□ 그간의 추진실적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임기 만료 폐기)

* 김삼화의원 발의('18.6.29.)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에 피해자·신고자 이외에 조력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 지속 추진

○ 예산 현황 : 해당 없음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	-	법률 개정 여부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직장 내 성희롱 신고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에 피해자·신고자 이외에 조력자도 명시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후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박교영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7446
------	------------------	-----	---------	------	--------------

□ 과제개요

- 신고현장 및 수사·사후관리 과정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 안전조치’ 요청이 가능함을 안내, 피해자의 관련 제도 활용 제고

□ 그간의 추진실적

- 가정폭력 대응 쉼 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지원 정보제공 체계 구축 완료

- (신고출동) 모든 가정폭력 신고 출동 시 ‘피해자보호명령’·‘신변안전조치’ 등 보호·지원 체계를 담은 「권리고지서」를 피해자에게 배부(문자 전송)
- (수사)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조사 전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내서’를 KICS상 자동 연계·출력하여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배부·안내 중
- (사건관리) APO가 전일 접수된 모든 가정폭력 신고사건에 대해 콜백을 실시하여 피해자 보호·지원체도를 재차 안내

□ 2021년도 시행계획

- 피해자 보호·지원 기관 간 협업 내실화를 위한 △정보공유 방안·시스템 마련
△각 시·도별 유관기관 간담회 지원(한국여성인권진흥원 협업) 등 추진
※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등 지역별로 협업체계를 활용, 다각적인 보호·지원서비스 연계
- 기존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가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표준 가이드 라인 제작·배포 및 우수사례 발굴 등 시·도경찰청과의 협력 강화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가정폭력 사건대응률	41.8%	43.8%	수기통계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담당자	이지호 경감	전화번호	02)3150-0891
------	-------------	-----	--------	------	--------------

□ 과제개요

- 가정폭력 피해자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 가정폭력 방지대책('18.11.27.)에 일환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보호 등을 위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제작·배포
 - 가정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강사 양성과정에 개인정보 노출을 통한 2차 피해 사례 및 주의사항 포함

□ 그간의 추진실적

-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및 제도 안내를 위한 기획(자문)회의
 - * 기획(자문) 회의 6회 실시('19.2월~12월), 행정안전부·서울시 교육청 등 서면자문(수시)
- 가정폭력 피해자 2차 피해 예방 및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제도 안내를 위한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제작·배포('20.2월)
 -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비밀전학 및 비밀엄수 의무, 주민등록표 열람·교부제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공시제한 등
 - *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교육청, 주민센터 종사자,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 경찰 등 책자 배포(4,000개 기관)
-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및 타부처·민간기관이 개발한 콘텐츠를 추천 콘텐츠로 선정·배포
 - * 가정폭력 예방교육 추천콘텐츠 19종 보급 중('20.2월 기준)

□ 2021년도 시행계획

- 가정폭력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시 개인정보 노출을 통한 2차 피해 사례 및 주의사항을 포함하여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예산 현황 : 기포함
 - *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에 포함되어 집행되고 있음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제작·배포	1종 (3,865기관, 8,000부 배포)	- (사업완료)	안내서 제작·배포 계획 및 실적
○ 가정폭력 예방 관련 콘텐츠 개발	1종	1종	예산 및 콘텐츠 개발 계획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담당자	최영호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422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양승초 주무관		02)2100-6444

□ 과제개요

- 효율적인 성매매 단속·수사를 위해 지방청 단위 풍속수사팀 구성·운영
- 성매매 단속·수사 시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 교육 추진

□ 그간의 추진실적

- 지방청 풍속수사팀 확대* 및 풍속수사팀 내 여경 배치
 - * ('18년) 11개청·124명 → ('19년) 13개청·159명 → ('20년) 14개청·171명

□ 2021년도 시행계획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보호 강화
 - * 대상아동·청소년 및 보호처분 규정 삭제, 수사 후 여가부장관 및 시·도지사 통지규정 신설
 - 성매매 피해우려 등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 및 쉼터 등 전문기관 연계
 - 성매매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발견 시 '피해자'로서 권리보장 및 보호·지원

- (보호·지원) △단속·수사과정 상 피해자 권리보장(국선변호인, 신뢰관계자 동석 등)
△보호·지원내용 안내 △여가부 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 통지·연계 활성화
- (피해 회복) 유관기관 협업, 상담·긴급구조·법률지원 등 실시, 피해 회복 도모

- 현장경찰관 대상 인권보호 강화 교육 및 2차 피해 방지 추진
 - 단속·수사부서 대상 반복·집중 교육 실시, 성인지 감수성 제고
 - 여성청소년과장이 '2차 피해 책임관'으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성매매 예방 교육	80점	85점	예방교육 실적점검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담당자	송수진 경감	전화번호	02)3150-0832
------	----------------	-----	--------	------	--------------

2-2-3-② 수사 과정에서의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

□ 과제개요

- 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문 통역서비스 제공
 - 외국인피해자에게 출입국 및 국내체류 등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상담 및 통역과 귀국비용을 지원 등

□ 그간의 추진실적

- 외국인 피해여성에게 무료법률지원 등 제공하여 귀국까지 안전하게 보호
 - 외국인여성지원시설 및 기타 지원시설 등에서 여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한 피해자 구조, 법원 동행 등 법률 지원
 - '20. 6월 현재 26명의 외국인 피해여성에게 법률지원

<외국인지원시설 법률지원 현황>

(단위 : 명/건, '20.6.30.기준)

구분	인 원 (명)	합계(건)	현장긴급 구조	수사 의뢰	수사지원			동행 지원	소송 지원	소년보호 재판	법률지원 상담	기타
					소계	기소	피소					
2020 상반기	26	69	14	8	-	-	-	2	11	-	-	34
2019	43	155	13	6	4	4	·	20	35	·	3	74
2018	29	149	·	·	·	·	·	23	39	·	·	7

* 2020년 상반기 기타 : 출입국 비자 및 등록증 관련 업무, 수사기록 열람 증명 등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통역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상담원(비상근 통역사) 배치
- 성매매업소로부터 구조, 출국 및 국내체류 등 관련 문제 상담 및 지원

○ 예산 현황 : 기포함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집행되고 있음

○ 성과지표 : 해당없음

※ 성매매피해자 지원 실적에 포함됨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외국인 성매매피해자에게 무료 법률지원, 귀국지원 등 지속 지원

기타 사항

- 해당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담당자	조 린 서기관	전화번호	02)2100-6435
------	----------------	-----	---------	------	--------------

□ 과제개요

-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은 외국인 여성에게 성폭력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등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기존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별도의 체류자격 부여 및 체류기간 연장 허용

□ 그간의 추진실적

- ('04. 5. 07.) 성매매 피해 외국인여성이 구제절차를 마련할 때 까지 기타 (G-1) 체류자격 부여(불체에 따른 통고처분 면제)
- ('07. 5. 07.) 성매매 피해 외국인여성에 대하여 특정활동(E-7)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함
- ('13. 4. 19.) 기타(G-1) 체류자격 대상을 종합하여야 별도 지침을 마련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명문화함*

* 체류외국인 중 성매매 강요, 상습폭행·학대, 심각한 범죄 피해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해 그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밟고 있는 자로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 협의회”에 의해 구제대상자로 결정된 자

- ('14. 12. 30.)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3(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칙) 신설*

* 제25조의3(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특칙)

① 법무부장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성폭력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 ('18.1.17.) 폭력피해 이주여성이 보다 신속하게 기타(G-1)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의 결정 절차 삭제*

* 체류외국인 중 성폭력범죄*, 성매매 강요, 상습폭행·학대, 심각한 범죄 피해 등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19.4. 15.) 폭력피해 이주여성은 단순노무 업종까지 취업이 가능하도록
기타(G-1) 지침 개정

《연도별 G-1(범죄피해자) 체류자격자 체류 현황(매년 12월말 기준)》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10
체류자수(명)	20	28	35	36	46	58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현행 법령과 지침 유지
- 예산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성과 지표 : 해당사항 없음(사업 대상 아님)

담당부서	법무부	담당자	이종철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4069
------	-----	-----	---------	------	--------------

2-2-4-①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

□ 과제개요

- 다누리콜센터와 경찰 간 핫라인 구축 및 가정폭력 관련 경찰 조사 시 통역 및 피해자 법률서비스 지원
 - 이주여성 가정폭력 발생 시 확대예방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신속한 수사 착수와 함께 통역 지원 및 상담 내용 공유 등 경찰 수사 지원
- 다누리콜센터 상담원의 가정폭력과 관련한 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 협조를 통한 상담 전문성 함양 보수교육* 실시
 - * 가정폭력 상담기법, 가정폭력 사건 처리절차 등 교육

□ 그간의 추진실적

- 다누리콜센터-경찰 간 핫라인 구축 관련 여가부·경찰청 회의('19.12)
 - 다누리콜센터와 경찰 간 핫라인 구축 방안 및 상호 공조·수사 지원 방안 등 논의
- 다누리콜센터와 관할 경찰서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연락망 공유('20.1)
 - 다누리콜센터와 관할 경찰서(255개소) 확대예방경찰관(APO) 간 비상연락망을 구축, 가정폭력 피해사실 및 피해자 보호사항 등 공유
- 가정폭력상담 대응력 강화를 위한 다누리콜센터 종사자 교육 실시('20.4.~11.)

시기		주요 내용
'20년	1/4분기	• (1월) 가정폭력상담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문성 강화 교육계획 수립
	2/4분기	• (4~5월) 4대폭력예방교육(1회)
	3/4분기	• (7월) 민법 등 법률구조제도 이해_가정폭력범죄의 이해와 실무(3회) • (9월) 가정폭력(성폭력) 사건처리 절차(경찰청 협조, 3회)
	4/4분기	• (10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_폭력피해여성 이혼과 법률지원(2회) • (11월) 가사사건 상담사례_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2회) • (11월) 4대폭력예방교육(1회)

□ 2021년도 시행계획

- 다누리콜센터-경찰 간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운영 성과 및 개선방안 회의 ('21. 2분기)
- 가정폭력상담 대응력 강화를 위한 다누리콜센터 종사자 교육 추진('21.1.~12.)
 - * 4대폭력 예방교육(1분기), 폭력상담실무(2분기), 가정폭력 등 수사 절차교육(경찰청 협조, 2분기)
- 예산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콜센터 종사자 교육(률)	100%	80%	수기통계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운영 성과 공유
- 다누리콜센터 종사자 상담 역량강화 교육

□ 기타 사항 : 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담당자	서동섭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376
------	-----------------	-----	---------	------	--------------

2-2-4-①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

□ 과제개요

- 이주 여성 성·가정폭력 등 피해자는 불법체류 신분·국적 취득 문제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한국 여성 피해자보다 더 큰 범죄피해에 노출
- 수사과정상 언어·문화 등 차이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주여성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여성 경찰관 전담 지정 △피해자 친화 조사환경 구축 등 다양한 지원방안 적극 추진

□ 그간의 추진실적

- (여경 확대 배치) 「여성안전 종합 치안대책」('20.4월) 추진에 따라 여청수사 부서 내 여성 경찰관 확대 배치 및 지속 추진
 - ※ 여청 수사관 비율 : 지방청('20년上 35% → '20년下 37%), 경찰서('20년上 23% → '20년下 25%)
- (조사환경 개선) △가·피해자 동선 분리 △여성 경찰관 호출 시스템 설치 △사무·조사 공간 분리 △통합지원공간 마련 등 피해자 중심 환경 구축
- (피해자보호 역량 강화) 수사과정 상 2차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한 교과강화 및 성폭력 피해자 조사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 (2차피해 방지 교육) 여청수사팀 대상 전 직무교육 과정에 2~3H 교과 편성 - 수사연수원·인재개발원 등(11개 과정) / 지방청 기초교육(실무·지휘·피해자 조사기법 3개 과정)
- (성폭력 피해자 조사 전문가) 사이버(2개 강좌, 이론) → 기초(1일, 사례토의) → 심화(소규모실습, 5일) 등 성폭력 피해자 표준조사 모델 습득을 위한 수준별 교육과정 신설

- (가정폭력수사매뉴얼 제작)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의사의 진정성 판단 및 수사관의 고정관념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 제작

<목차 구성 > ① 가정폭력 이해 및 처리절차 ② 가정폭력 신고접수·현장출동 행동요령
 ③ 가정폭력 수사 단계별 유의사항 ④ 피해자 조사 ⑤ 가해자 조사 ⑥ 수사
 결과보고 사례 ⑦ 2차피해 체크리스트 및 사례분석 ⑧ 피해자 지원 등
 (100P)

□ 2021년도 시행계획

- (여경 전담조사체제 확대) 여경 비율 확대를 지속 추진하여 이주여성 피해 사건 전담 수사관을 여성 경찰관으로 지정, 피해자 심리적 안정 도모
- (AI활용 피해조사·지원) AI음성인식 기술을 활용, 수사관이 개방형 질문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풍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있는 시스템 추진

- (추진배경) 성폭력 수사에서 피해자가 곧 증거(Victim is Evidence)인 만큼 수사관의 조서 작성 부담을 없애고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 위해 시스템 추진
- (주요내용) 성폭력 피해자에게 同 시스템 안내 후 동의 받아 수사관·피해자 문답이 AI 음성인식을 통해 자동 기록·저장·출력되는 시스템 구축
 - 축적된 텍스트·음성 활용 범죄 분석 및 聲紋(목소리의 지문)을 통한 감성 분석 등으로 성폭력 예방·대응·피해자 보호 등 정책에 활용

- (내·외부 전문가 역량 강화) 성폭력 피해 전담 조사관(해바라기센터 조사관) 교육 강화 및 진술분석전문가 부적합자 해촉 등 역량 고도화 지속 추진
- (여청수사관 교육 강화) 내부 교육기관(수사연수원·경찰인재개발원 등) 및 외부기관(국과수·동국대) 통해 수사質 상향 표준화와 피해 회복 지원 강화
 - △‘여성폭력 동료전문가 양성과정’, ‘가정폭력수사과정’을 수사연수원 정규 과정 개설 △‘성폭력 피해자 조사모델 기초’, ‘가정폭력 수사매뉴얼’ 사이버 교육 제작 △전문 조사기법 및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

○ 성과지표

성과목표(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전담 여성경찰관 지원율(%)	80.5%	85.1%	수기 통계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대상범죄수사과	담당자	김재영 경감	전화번호	02)3150-2878
------	------------------	-----	--------	------	--------------

□ 과제개요

-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12.25. 시행)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 이에 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2차 피해 방지교육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성폭력 2차 피해예방 교육 시행 관련 방안 마련

□ 그간의 추진실적

- '17. 12. 젠더폭력 방지를 위한 세미나 개최
 - 전문검사 커뮤니티 회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법원)젠더법연구회,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민변여성위원회, (사)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젠더 대상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대한 대책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주제로 세미나 개최
- '18.11. 전국 여성아동 대상 범죄 전담 검사, 수사관 워크숍
 - 성폭력범죄 2차 피해 방지 방안, 불법촬영 및 성폭력 사건 실태분석 및 논의, 카메라촬영·유포 사건처리기준 전파 등 워크숍 실시
- '19.3., '19.10. 여성·아동분야 타겟형 교육 실시
 - 2차 피해 방지 교육, 성폭력 사건처리기준 철저 준수 및 성폭력·아동학대 수사시 유의사항 등 전국 여성·아동 전담검사 대상으로 타겟형 교육 실시
- '20.6. 여성·아동분야 저년차 검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성폭력사건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교육 등 역량 강화 도모
- '20.11. 성폭력·아동학대 관련 사건 고소인(고발인) 통지시스템 개선
 -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 관련시스템 개선

□ 2021년도 시행계획

- 전국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하반기)
 - 전국 일선청에서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자체 교육 (사이버, 시청각 등) 실시
- 기관별 협력체계 강화(연중)
 - 검찰청 특성에 맞는 자체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교육 자료 지원 및 공유
- 법무연수원 교육과정 신설(연중)
 - 법무연수원과 협의하여 검사 및 수사관 직무교육과정에 교육차시 반영 및 사이버교육 신설
-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여성폭력 사건 담당 수사역량 강화(연중)
 - 전문검사교육, 유관기관과의 공동 포럼, 간담회 등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및 협업 활동 강화
- 예산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전국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교육 이수 현황(%)	※연말 시행 예정	80%	전국청 수기취합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법무부 형사기획과	담당자	이갑호 주무관	전화번호	02)2110-3271
------	-----------	-----	---------	------	--------------

□ 과제개요

○ 추진배경

-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12.25. 시행)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의무화

○ 근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2차 피해 방지) 및 시행령 제10조(수사기관의 범위 등)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 여성폭력 관련 용어 정리

• 여성폭력 (법 제3조 제1호)

-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함

• 여성폭력 피해자 (법 제3조 제2호)

-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함

• 2차 피해 (법 제3조 제3호)

-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 그간의 추진실적

○ 교육대상

- 각 교정기관별 여성폭력 사건담당자(57명) 등 업무관련자 100명
- * 각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 또는 지소의 장은 해당 기관에 소속된 특별사법경찰관리 중 여성폭력 사건담당자 1명 지정(2020.4.)

○ 교육개요

- 교육명 : 여성폭력 2차 피해의 이해
- 교육일정 : 2020.11.26.(목), 16:30~17:30(1시간)
- 교육방법 : 실시간 온라인 교육

□ 2021년도 시행계획

○ 교육대상

- 각 교정기관별 여성폭력 사건담당자(57명) 등 업무관련자 100명

○ 교육시간

- 매년 1회(최소 1시간) 이상

○ 교육내용

- 여성폭력 및 2차 피해 개념, 여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관련 법·제도, 성인지 감수성, 2차 피해 사례, 업무관련자 주의사항 등을 향후 여성가족부 등에서 지원하는 교육 콘텐츠(사이버 강좌, 교재, 전문강사 지원 등)를 이용하여 기관별 자체교육 실시

○ 예산 현황 : 해당없음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교육 이수율(%)	20.11. 26. 교육(예정)	80%	교육이수자/교육대상자 × 100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해당없음

□ 기타 사항

- 교정기관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범위와 여성폭력 2차 피해 발생 가능성 검토
 - 교정기관은 남녀를 분리 수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별에 기반한 여성폭력 사건 발생 및 2차 피해 가능성은 희박함
 -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대상 인원을 최소화 함

담당부서	법무부 교정기획과	담당자	주무관 김영삼	전화번호	02)2110-3364
------	-----------	-----	---------	------	--------------

□ 개요

-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12.25. 시행)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의무화
 - * 수사기관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 근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2차 피해 방지) 및 시행령 제10조(수사기관의 범위 등)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교육대상) 소년원, 치료감호소 등 총 12개 기관 사법경찰관* 87명
 - *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 수행
 - (교육시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2차 피해 방지교육 이수
 - (교육내용) 여성폭력 및 2차 피해 개념, 2차 피해 사례 등
 - (교육방법)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교육 콘텐츠 이용, 기관별 교육 실시
 - *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교육은 온라인 교육 및 현장 교육 실시
 - (교육실적) 교육 종료 후 교육 실시 결과를 본부 주무과로 제출

□ 기타 사항

- (수용기관 특수성) 수용기관은 남녀를 분리 수용, 성별에 기반한 여성폭력 사건이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이고 더불어 2차 피해 발생가능성이 낮음
- 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공통) “사법경찰수사실무”에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내용 1차시 추가 검토 필요

담당부서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	담당자	김일곤 주무관	전화번호	02)2110-3580
------	-------------	-----	---------	------	--------------

□ 과제개요

○ 사업목적

-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12.25.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 의무화

○ 주요내용

-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2차 피해 방지 교육
 - * 관련 근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제2항(2차 피해 방지)
- 2차 피해 방지 교육 교재/자료 개발

□ 그간의 추진실적

○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교육 대상 파악(1월)

- 군사경찰, 군검찰 등 147개 기관(수사관 등 400여 명)

○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개정(3월)

- *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1시간 이상 2차 피해 방지교육 실시

○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 여가부 주관,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교육 온라인 강의 실시(69명, 11월)
- * 국방부 주관, 성폭력 전담 수사관 기본·심화과정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위탁교육 실시(2개 과정 59명, 7월)

□ 2021년도 시행계획

○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군 수사기관(군경찰·군검찰) 자체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대외기관 위탁 성폭력전담수사관 전문교육 실시
 - * '21년 계획 :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위탁교육(2개 과정 60명)

○ “2차 피해 방지 교육” 국방부 표준 메뉴얼 개발

- 군 특성을 반영한 2차 피해 방지 교재 마련

* 여성가족부 “2차 피해 방지교육 가이드라인”참고하여 “국방부 표준교안” 마련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대외 위탁교육비	35		40	5	14.2%
• 일반회계	35		40	5	14.2%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군 수사기관 2차 피해 방지교육 대외 위탁교육 실시 인원	59명	60명	전년 실적 고려
○ 2차 피해 방지 교육 표준메뉴얼 마련		1건	신규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지속)

담당부서	국방부	담당자	박한기 사무관	전화번호	02)748-5107
------	-----	-----	---------	------	-------------

□ 과제개요

- 미투 운동 이후 급증하는 성희롱 사건처리에 비해 언론·국회 등에서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부족 및 2차 피해 문제 제기
 - 아울러,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12.25. 시행)에 따라 성희롱 담당 감독관 2차 피해방지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성희롱 조사기법 등 성희롱 담당 근로감독관들이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실질적인 교육자료 개발 및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
- 주요내용
 - (교육자료) 성희롱 사건 조사기법 등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교육자료 개발
 - * 다양한 사례 및 애매하고 어려운 사례를 통해 응용력을 기르도록 하고, 실습을 통해 모범 답안을 만드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실시를 목표로 하는 교재
 - (교육과정 개설) 연수원 집합교육 및 현장방문교육을 활용
- 추진체계
 - (추진주체) 고용노동부 본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 (추진절차) 교육교재 개발('20년 완료) → 운영지원과·근로감독기획과와 교육과정 협의('20.12월~'21.2월) → 교육실시('21.3~12월)

□ 그간의 추진실적

- 교육자료 개발·제작<'20년 2월~7월>
 - (내용) 성인지 감수성 제고, 성희롱 사건의 특성을 반영한 성희롱 조사기법 및 2차 피해예방 등에 관한 교육컨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 (방법) 우리부 본부 및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주축으로 TF 구성, 개발
 - * ▲ 연구원: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여성정책연구원, ▲ 정부: 우리부 본부(양성평등담당관·여성고용정책과) - 지방관서(서울청·중부청 성희롱 업무 담당자)

□ 2021년도 시행계획

○ 집합교육 등 교육과정 확대 및 연중 지속적인 교육 실시

- (현장방문교육) 업무담당자 2차 피해예방을 위한 별도 교육과정 신설, 3개 권역(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으로 실시

* 교육의 접근성·편의성 등 감안하여 현장방문교육 활용

- (교육원 교육) 재직 근로감독관 대상 교육과정(5일이상)에 1시간 이상 「근로 감독관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 시간 배정

○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예산(a)	2021년 예산(b)	증감(b-a)
정책연구개발 (일반회계)	30(교재연구비)	-	-

* 자체 예산은 없어 '20년 교재 개발시 정책연구개발(연구용역비) 활용하였음

* '21년 교육을 위한 신규예산 미편성시 운영지원과 교육예산 활용할 예정

○ 성과 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2020)	목표치(2021년)	산출근거
○ 교육자료 개발	개발완료	-	교육시간 통계
○ 근로감독관 2차 피해예방 교육		- 5일 이상 교육과정에 성인지 교육 (1시간 이상) 포함 - 현장방문 교육 개설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교육과정 모니터링, 교육교재 업데이트 등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안성수사무관 박교영사무관	전화번호	044)202-7719 044)202-7446
------	-------------------------------	-----	------------------	------	------------------------------

과제개요

-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여성피해자 또는 여성
피의자 조사 시 여성폭력 2차 피해방지 교육 실시
* 변화관리 아카데미 및 상시학습 시 교육

그간의 추진실적

- 부서별(수사과,센터)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상시학습)
- 여성가족부 주관 ‘여성폭력 2차 피해의 이해’ 온라인 강의 시연회 참여
* 철도특별사법경찰관 10명('20.11.26.)

2021년도 시행계획

- 소속별 변화관리 아카데미 시 여성폭력 2차 피해방지 교육 실시
* 코로나-19 확산추세에 따라 시행
- 부서별(수사과,센터)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상시학습)
- 여성가족부 주관 ‘여성폭력 2차 피해의 이해’ 온라인 강의 개설 시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관련자 수강
- 예산 현황 : 해당 없음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여성폭력 2차 피해방지 교육 대상자 확대	384명	394명	서명부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해당없음)

기타 사항 (해당없음)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운영지원과	담당자	송창용 주무관	전화번호	042)615-5853
------	-----------------------------	-----	---------	------	--------------

□ 과제개요

- 수사기관의 장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교육의무 실시(「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제2항 근거)

□ 그간의 추진실적

- 2차 피해 개념 및 주요사례를 유형화한 교육자료를 제작·배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쏠 기능 현장교육에 적극 활용
- ‘젠더폭력과 2차 피해 방지’ 관련 직장교육 실시(’20.4월)
- 인재개발원에 ‘2차 피해 예방교육’ 등 교육과정 신설 확대, 경정 이하 계급별 기본 교육과정 내 2차 피해 예방 교과목 편성 완료

□ 2021년도 시행계획

- 조사과정조정관·현장 강사 등 활용, 지방청 단위 2차 피해 전문강사 양성, 현장 경찰 교육 강화(자치경찰 교육 포함)
- 實 사례 위주의 다각적인 교육자료 제작, 현장 교육 지원
 - △기존 사례형 교육자료 개선(청소년 성매매 추가) △Q&A 형식 교육자료 신규 제작 △강사용 2차 피해 예방 표준 강의안 배부
- 중앙경찰학교 협업, 신임경찰 교육과정에 2차 피해 예방 교과목 별도 편성 추진 (기존 성·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교과목 시간 활용 교육)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관서별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	273회	275회	관서별 교육 실적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담당자	박동아 경위	전화번호	02)3150-0938
------	----------------	-----	--------	------	--------------

□ 과제개요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과제가 해양경찰청이 포함 (과제명: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신설)

여성폭력 2차 피해 정의

-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것을 말함

- 수사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여성폭력 2차 피해를 사전 차단하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보호를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교육 신설

□ 그간의 추진실적

- '14년부터 단속 및 사건 관련 여성을 대상으로 수사 전 과정시 여성 인권보호 강화대책 계획수립 추진 시행중('14.12)
- 수사경찰 워크숍 시행 등을 통해, 인권 교육 주기적 실시(여성인권 포함)
- 「인권과 수사」 과정 개설로 여성 인권을 포함한 교육 시행('20.9)
-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지원 강화를 통한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시민단체)와 업무협약('20.11)
- 여성가족부 주관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방지 온라인 교육 시행('20.11)

□ 2020년도 시행계획

-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수사경찰 워크숍, 지방청 교육 센터,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 수사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시행
 - 수사 워크숍 : 수사경찰 전체 대상 교육 시행 추진
 - * 단, 코로나19 관련 정부정책 시행에 맞게 워크숍 개최 여부에 따라 시행

- 지방청 교육센터 : 해양경찰청 소속 5개 지방청 교육센터를 활용, 수사관 대상 여성폭력 2차 방지 교육 추진
- 사이버 교육 : 수사경찰관 전체 1인 1사이버 교육 수료 추진

○ 예산 현황 : 별도 예산편성 없음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수사경찰관 1인 1교육 수료	1인 1교육 수료 (수사경찰 795명)	1인 1교육 수료 (수사경찰 795명)	공문 교육결과보고 사이버교육수료증

* 단, 별도의 사이버교육 미개설시 워크숍, 지방청 교육 등 오프라인 교육으로 대체 후 결과보고(수료 명단)으로 실적 달성 추진

** 정부 국정과제 「경·검 수사권 조정」에 따라, 수사조직 및 정원 변경시 해당 정원을 목표치로 수정하여 실적 달성 추진

□ 기타 사항

- 수사 초동조치부서(합정·과출소) 수사전담요원 교육 시행
 - 최일선 대민현장 부서 합정·과출소 수사전담요원 대상,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자체 경찰서별 시행 추진

담당부서	해양경찰청 수사과	담당자	경위 박찬익	전화번호	032)835-2354
------	--------------	-----	--------	------	--------------

□ 과제개요

○ 사업 목적

-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자, 전자감독대상자 등 주요 대상자에 대한 상시 점검을 통해 등록정보 현행화 및 제도 실효성 제고
-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를 통한 성범죄자 관리 강화

○ 주요 내용

- 공개·고지대상자, 전자감독대상자, 소재불명자 및 신상정보 제출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등록정보 점검 강화
 - * 주민등록조회, 보호관찰상황 조회, 출입국조회, 수용조회 등 정보조회를 통해 등록정보 현행화
- 전체 등록대상자에 대한 주기적 일제 점검 실시
 - * 연 6회 이상 주민등록지, 거주지 등 주요 정보의 불일치 여부를 일제점검 실시
-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를 통한 성범죄자 관리 강화
 - * 일제점검 후 특이사항은 경찰에 통보하여 진위여부 확인 조치
 - * 신상정보 등록·관리에 필요한 유관기관의 보유정보를 확보, 신속성·정확성 제고(주민등록·수용·출입국 정보, 고용정보, 자동차등록정보 등)
 - * 여성가족부·경찰청과 소재불명, 공개·고지 등 특정 대상자의 통합적 관리 방안 마련 및 현안 공유를 위한 협업 강화
- 신상정보 등록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유관기관 간 등록정보 연계 강화

□ 그간의 추진실적

○ 신상정보 공개·고지자, 소재불명자 등에 대한 일제점검 강화

- 공개·고지자 전원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관리하여 주민등록 주소지·실거주지 등 등록정보 변경사항에 대해 점검 주기 단축(3개월 ▶ 2개월)
 - * 2020년 총 6회에 걸쳐 14,479명에 대해 점검 실시하였으며, 불일치자 1,198명에 대한 주민등록지, 거주지, 출입국정보, 수용정보 등 현행화 실시
- 주거부정·제출의무 불이행 등 소재불명자 등록정보 점검 결과를 경찰과 공유, 진위여부 확인을 통해 소재불명 상태 최소화

- 소재불명자, 미등록자 등 제출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매월 1회 현행화 실시
-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를 통한 성범죄자 관리 강화
 - 여성가족부·경찰청과 소재불명, 공개·고지 등 특정 대상자의 통합적 관리 방안 마련 및 현안 협의를 위한 협업 강화

- 협의체 운영주기 : 연 3회(1월, 5월, 9월), 각 부처 순회하여 주관
- 기타 : 긴급한 현안 발생시 긴급협의회 개최

- 신상정보 등록·관리에 필요한 유관기관의 보유정보(주민등록·수용·출입국 정보, 고용정보, 자동차등록정보 등)를 확보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신상정보 등록·관리
 - ※ 코로나19로 협의회 진행 불가, 핫라인을 통해 사안 발생 시 수시 협의 실시
- 신상등록시스템 고도화 및 연계 기능 강화
 - 연계 보안성 강화를 위한 연계 보안 솔루션 도입(2단계)
 - 비전자 기록물(제출서, 판결문) DB화(스캐닝) 장비 도입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신상정보 공개·고지자, 소재불명자 등에 대한 일제점검 강화
 - * 공개·고지자 등 특별관리 대상자에 대해 주민등록 주소지·실제 거주지 등 등록정보 변경 사항에 대해 상시 점검 실시
 - * 주거부정·제출의무 불이행 등 소재불명자 집중 점검 및 경찰을 통한 진위확인 조치
 - * 소재불명자, 미등록자 등 제출의무 위반자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현행화 실시
 -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를 통한 성범죄자 관리 강화
 - * 여성가족부·경찰청과 소재불명, 공개·고지 등 특정 대상자의 통합적 관리 방안 마련 및 현안 공유를 위한 협업 강화

- 협의체 운영주기 : 연 3회(1월, 5월, 9월), 각 부처 순회하여 주관
- 기타 : 긴급한 현안 발생시 긴급협의회 개최 및 핫라인을 통한 정보공유 활성화

- * 신상정보 등록·관리에 필요한 유관기관의 보유정보(주민등록·수용·출입국 정보, 고용정보, 자동차등록정보 등)를 확보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신상정보 등록·관리

- 신상등록시스템 연계 기능 강화 위해 차세대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편입 준비

* 8월 말~차세대 KICS 구축 준비 T/F 가동(3차년도(2023년) 구축 예정)

○ 예산 현황

- 82백만 원(관리용역비)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신속입력률(%)	미정	미정	(30일 이내 등록건수/신규등록건수)×100

담당부서	법무부 전자감독과	담당자	박지훈 주무관	전화번호	02)2110-3584
------	--------------	-----	---------	------	--------------

□ 과제개요

○ 사업 목적

- 성범죄 전력자인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대해 주기적인 현장 점검과 유관기관 정보공유 강화로 체계적 관리·재범억제

※ 개정 성폭력처벌법('16. 12. 20)에 따라 신상 점검주기를 기존 반기 1회에서 3개월·6개월·1년 1회 직접 대면 등 방법으로 점검토록 변경(제45조 제7항)되어 점검횟수 지속 증가추세

○ 주요 내용

- (고위험군 집중점검) 고지·공개 대상자 등 신상정보가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만큼, 반드시 현장진출 확인·점검하고, 대부분 전자감독 대상자 이므로 밀착 관리 중인 보호관찰소와 긴밀히 정보공유*

*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 방안을 논의하고,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수사 협조체계 구축 및 보호관찰소·경찰서 담당자간 핫라인 현행화를 위해 법무부·경찰청·보호관찰소·경찰서間 연 2회 실시

- (소재불명자 집중검거) 재범위험성이 높은 소재불명 등록대상자 집중검거 기간 운영(반기 2회) → 조속히 검거하여 추가 범행의지 차단

※ 연 2회 이상 고지·공개 대상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직접 추적수사

□ 그간의 추진실적

○ 신상정보 고지·공개 대상자, 전자감독 대상자 등에 대한 점검 강화

- 고지·공개 대상자(3월 1회 점검)에 대해 직접 대면 점검을 원칙으로 주거 등 신상정보 우선 확인* / 나머지 점검 대상자는 직접 확인

* '20. 12월 말 기준 전체 3개월 1회 점검 대상자에 대한 대면점검 완료

○ 소재불명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집중검거 기간 운영

- 연 2회(6월~7월 / 10월~12월) 소재불명 대상자 집중 검거기간 운영

○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를 통한 성범죄자 관리 강화**

- 여성가족부·법무부와 소재불명, 고지·공개 등 특정 성폭력 전력자에 대한 통합적 관리 방안 마련 및 현안 공유를 위한 협업 강화

- 협의체 운영주기 : 분기별로 실시(연 3회) 각 부처 순회하여 주관
- 기타 : 긴급한 현안 발생시 긴급협의회 개최 및 핫라인을 통한 정보공유 활성화

- 신상정보 등록·관리에 필요한 유관기관 보유정보(주민등록·수용·출입국 정보, 고용정보, 자동차등록정보 등)를 확보하여 신속·정확한 신상정보 등록·관리

○ **특정 성폭력 전력자 재범방지 종합 대책 수립**

- 관계부처 대책회의 등을 통해 경찰청·법무부·여가부가 특정 성폭력 전력자에 대한 출소 후 재범방지 및 관리 대책을 공동으로 수립·시행
- 출소 前·後 필요한 법률개정 및 피해자 지원, 지역주민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총력 대응체제 구축
- ※ △ 특별대응팀 운영 △ 여성안심구역 추가 △ 범죄예방진단 △ 방범초소 설치 및 순찰강화 등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고위험군(고지·공개) 대상자 집중점검>

- 신상대상자 中 고지·공개대상자는 상·하반기(3월, 9월) 현장 진출, 주거·직장 등 신상정보 진위확인 / 나머지는 지속 확인
- 주거지변경 미신고 등 신상정보 불일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반드시 입건 후 혐의점 수사, 확인된 신상정보는 여가부에 즉시 통지

<소재불명 대상자 집중검거>

- (기 간) '21.4.1~5.31.(2개월) / '21.10.1~11.30.(2개월)

<성범죄전력자 재범위험성평가 다기관 협의체 설립>

- 경찰-법무부-지자체間 정보공유 등 협업체제를 강화토록 '성범죄전력자, 다기관 협의체 설립' 법적 근거(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등) 마련
- 협의체에서 재범위험성 평가, 단순 관리부터 주거 지원까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대상자 사회복귀와 주민불안 최소화 도모

英 다기관협력 공공보호방안 (Multi-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s : MAPPA)

설립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00년 성폭력 전과자가 Sarah Payne라는 8세 소녀를 성폭행·살해하면서 당시 담당 기관간 업무 비효율 등이 지적되어 '03년부터 신설 법에 따라 경찰 관할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
다기관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 교정시설, 보호관찰소'가 主 기관으로, '사회복지부 등 기타 기관과 의료 서비스'는 관계 기관으로 참여해 정보를 공유하며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고 재범 방지 및 교화 대책을 수립·시행

관리 대상	위험성 평가	관리 수준
카테고리 1 : 신상 정보가 등록된 자 카테고리 2 : 12개월 이상 구금형을 선고 받은 자 카테고리 3 :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생각되는 자	⇒	레벨 1 (일반 관리) : 위험성이 낮은 자로, 담당 기관이 전담, 필요시 정보공유 레벨 2 (적극 관리) : 위험이 높다고 평가되는 자로, 경찰·교정·보호관찰기관이 공공보호협의회를 구성해 위험성 관리 계획 등을 수립·시행 레벨 3 (다기관 특별관리) : 위험성 또는 대중 관심이 높은 자로, 지역의 사회보장·교육·주택·의료 기관 담당자들까지 참여해 생활지원, 직업알선 등을 제공

○ 예산 현황

- 38백만원(일반수용비)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소재불명자 검거 실적(건)	136	150 (10%이상 목표치설정)	검거 건수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담당자	우준영 경감	전화번호	02)3150-0921
------	-------------------	-----	--------	------	--------------

2-3-1-②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제도 관리 강화

□ 과제개요

-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

□ 그간의 추진실적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도입·운영('06.6.30.)
- 「지방이양일괄법」 통과('20.1월)에 따라 일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대상 취업제한 점검·확인 등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로 이양('21.1월~)

□ 2021년도 시행계획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한 점검·확인 권한 등의 지자체 이양* ('21.1.1.)에 따른 차질 없는 점검·확인
 - 지자체 이양 후 첫 확인·점검임을 감안, 각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점검·확인 업무 등 지원
 -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점검·확인, 성범죄 경력자 해임요구·기관 폐쇄, 과태료 부과·징수 등 3개 업무
 - 이양에 따른 시도, 시군구 점검체계 정비
- 예산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취업제한 대상자 점검 인원 수	-	300만명	점검인원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담당자	박종구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408
------	-------	-----	---------	------	--------------

□ 과제개요

○ 근거법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 사업 목적

-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방지 도모

○ 현황

- 대상 : 모든 성폭력 수형자
- 과정 운영 : 재범 위험성 및 이수명령 시간에 따라 과정 구분 후 운영
 - 기본과정 : 전 교정기관에서 100시간 운영
 - 집중과정 : 12개 전담기관에서 200시간 운영
 - 심화과정 : 5개 심리치료센터에서 300시간 운영
 - 특별과정 : 1개 지정 전담 심리치료센터에서 150시간 운영
 - 유지과정 : 11개 전담기관에서 20시간 운영
- 내용 : 자아존중감 향상, 왜곡된 성의식 수정, 피해자 공감 등
- 강사 : 교정공무원(내부 강사), 외부 전문 강사

○ 기대 효과

-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방지 및 안전 사회 구현

□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 성폭력 수형자 재범방지 심리치료 프로그램 : 1,313명('20.10.)
-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유지과정 운영기관 확대 실시('20.12.)

○ 목표 및 실적

구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및 실적	
		성과목표	실적
○ 성폭력 수형자 재범방지 심리치료 프로그램(명)	교육인원	2,300	1,313*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부강사 출입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실적이 떨어짐

□ 2021년도 시행계획

○ 사업 개요

- 사업 대상 : 모든 성폭력 수형자
- 사업 내용 : 성폭력 수형자 재범방지 심리치료 프로그램
- 추진 일정
 - 기본과정 : 전 교정기관에서 연 2~6회 운영
 - 집중과정 : 12개 전담기관에서 연 2~3회 운영
 - 심화과정 : 5개 전담센터에서 연 2회 운영
 - 특별과정 : 지정된 심리치료센터 운영
 - * 특별과정은 가학적·변태적 성폭력사범 등 특정 성폭력사범에 대해 출소 전 실시하는 150시간의 추가 심리치료 과정임
 - 유지과정 : 11개 전담기관에서 연 1회 이상 운영
 - * 유지과정은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심화과정을 수료한 성폭력 고위험군에 대해 출소 전 실시하는 20시간의 추가 심리치료 과정임
- 추진 체계
 - 사업시행 주체 : 각 교정기관
 - 사업시행 절차 : 계획 수립 → 운영 → 결과 보고
- 기대효과 :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방지 및 안전사회 구현

○ 예산 현황

※ 비예산 사업임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10월)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성폭력 수형자 재범방지 심리치료 프로그램 수료 인원(명)	1,313	2,300*	

* 21년 목표치는 기존 목표치로 동결하였으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실적은 변동 가능

담당부서	법무부 심리치료과	담당자	송남옥 교감	전화번호	02)2110-3898
------	--------------	-----	--------	------	--------------

□ 과제개요

○ 사업목적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 교육을 통해 왜곡된 성인식 교정 및 재범방지 도모

○ 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민간단체, 공공기관

○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성폭력가해아동·청소년* 인지행동 치료프로그램 운영 및 가해아동·청소년 부모 교육
 - * 법원에서 의뢰한 수강명령 청소년, 소년원 재소자, 학교폭력위원회 위탁 청소년 등
- 교육 매뉴얼 보완, 교육 강사 양성

□ 그간의 추진실적

○ 재범방지교육 실시

<교육 인원>

구 분	2018년	2019	2020.10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성인)	88집단 (1,002명)	88집단 (1,018명)	62집단 (672명)
○ 가해 아동·청소년	1,126명	1,275명	800명
○ 가해아동 청소년부모	213가족	271가족	129가족

- 가해아동청소년 부모 교육 매뉴얼 보완('20)

□ 2021년도 시행계획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부모교육 지속 실시
- 성폭력 가해 장애 아동·청소년 교육 매뉴얼 업데이트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지원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524	524	524	-	-
국비					
• 일반회계	524	524	524	-	-
○ 가정폭력성폭력재발방지 (성폭력가해아동청소년교육)	448	448	448	-	-
국비					
• 기금(양성평등기금)	448	448	448	-	-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성폭력가해아동청소년 교육 매뉴얼 보완 여부	가해아동청소년 부모교육 매뉴얼 보완	장애가해아동 청소년 교육 매뉴얼 보완	-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부모교육 지속 실시

□ 기타 사항 : 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담당자	박종구 사무관 박은희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408 02)2100-6407
------	-------	-----	--------------------	------	------------------------------

□ 과제개요

○ 사업 목적

- 성구매자 교육을 강화하여 성매매 수요 차단
- 성구매자 교육 운영 내실화로 존스쿨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주요 내용

- 교육 효과성 분석을 통한 교육 운영 내실화
- 엄정한 교육 집행으로 불량자 제재조치

□ 그간의 추진실적

○ 주요 성과

- 사전·사후 설문지,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등 자료 관리
 - * 존스쿨 참석자를 대상으로 사전·사후 검사를 통한 만족도 평가 등을 반영하여 교육 운영의 내실화 추진
- 내실 있고, 엄정한 교육 실시
 - * 2020.10. 기준 존스쿨 미이수자 67명 검찰청 미이수 통보

○ 주요 실적

- 성구매자 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성매매 수요 차단 등 재범방지
 - * 2018. 3,051명, 2019. 2,487명, 2020.10. 기준 658명 교육 이수
- 성구매자 현황, 사전·사후 설문, 프로그램 만족도 등 자료 제공하여 성매매 실태조사 반영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전문프로그램 매뉴얼 적용 및 사전·사후 설문을 통한 효과성 분석 등 내실 있는 교육 운영으로 성구매 남성의 왜곡된 성의식 개선
-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예산 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존스쿨 프로그램(이수 인원)	758	1,500	○ 전년도 실적 대비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신속한 교육 집행, 미이수자에 대한 검찰 통보 등 엄정한 교육 운영 및 신규 업무담당자 대상 전문성 향상 등 역량 강화
- 전문프로그램 매뉴얼 적용 및 사전·사후 설문을 통한 효과성 분석 등 내실 있는 교육 운영으로 성구매 남성의 왜곡된 성의식 개선

□ 기타 사항

-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지침에 따라 집합 교육이 제한되어, 전년 대비 2020년 실적 감소

담당부서	법무부 보호관찰과	담당자	정유희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3487
------	-----------	-----	---------	------	--------------

□ 과제개요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친화적 환경 조성 및 확산
- 학교 관리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역량 강화교육 단계적 도입
- 예비교원의 양성평등,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을 강화하도록 관련 법령·제도 개편

□ 그간의 추진실적

-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평가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관련 지표 반영 ('19.4월~)
- 학교관리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직무연수과정을 운영하거나 교과목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교육연수원에 안내
 - * '2021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 수립 및 안내('20.9.28.)
- 교원양성과정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강화방안 연구*(~'20.3.말)
 - * (내용)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현황·가이드라인·표준교육안 등
- 미래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교원양성 교육과정 편성·운영 권고 사항을 교원양성기관에 안내('20.4.)
 - * 양성평등, 인권,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내용을 관련 교과 등에 포함하여 이수 권고
- 교원양성기관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자료 제공('20.12)
 - * 교원양성기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교육(안)
- 대학 내 폭력예방교육 실적을 대학 정보공시 항목으로 반영('19.10~)
 -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을 공시하여 대학의 책무성 강화

□ 2021년도 시행계획

- 대학 교원·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인식개선을 위한 연수과정 도입
 - 사학진흥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과 협의를

통해 연수과정 신설 등 추진

-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향상을 위한 안내 및 홍보
 - 전국 대학,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을 통해 각 대학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권고
- 학교관리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직무연수과정을 운영하거나 교과목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교육연수원에 안내
 - ※ '2022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 수립 및 안내
- 교원양성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점검·컨설팅 및 우수사례 공유('21.7~12)
 - ※ 성인지 교육과정 구성 현황 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 교원양성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원 자격검정령 개정 지속 추진
 - ※ 교원양성과정에서 성인지 교육 필수 이수 연 1회 이상 또는 4회 이상
- 예산 현황 : 비예산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개정(건)	추진중	1건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완료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예방교육 실행 안내 및 지원 지속 실시

기타 사항 : 해당 없음

담당부서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교원양성연수과	담당자	이선혜 사무관 정부엘 사무관 남덕호 연구사	전화번호	044)203-7115 044)203-6478 044)203-6488
------	-----------------------------	-----	-------------------------------	------	--

□ 과제개요

- 초·중등학교 양성평등 교육 강화 및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성희롱·성폭력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한 대학 내 외국인 교원·학생 맞춤형 예방 교육 자료 보급

□ 그간의 추진실적

- 초·중·고 양성평등 교육 지도서(교과에서 인성교육, 인권을 만나다) 및 범교과 교수학습자료 개발·배포('19년)
 - 초·중·고별 총 6종 개발·배포
- 초·중등 양성평등교육 목표·성취기준 개발 및 양성평등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운영가이드, 초·중등 예방교육·양성평등 수업사례집 개발 및 보급(~'20.12)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자료 개발('19년)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자료 4종(국·영문×교원·학생용) 개발
 - ※ 국문 자료에 대한 외국인 학생·교원의 내용 수정·번역을 바탕으로 맞춤형 자료 개발
- 외국인 유학생·교원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자료 개발('20년)
 - 중국(44%)·베트남(23%) 등 비영어권 유학생·교원 대상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를 위해 국가별 성인지 감수성 수준 격차 등을 반영한 교육자료 개발

□ 2021년도 시행계획

- 초중고 교원·학생·학부모 대상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양성평등 자료 개발·프로그램 운영
 - '21년도 국가시책사업(특교) 추진을 통해 단위 학교에서 상시 교육 및 연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 개발
 - 학교 현장 찾아가는 예방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 운영하여 소규모·격오지 학교 현장 지원 (단,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

- 외국인 유학생·교원 등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자료 개발 및 보완
 - 영어권 및 비영어권 유학생·교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등의 수요를 파악하여 외국어 자료 개발·보완 및 배포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예산(b) (정부안)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 지원*	340	340	340	-	-
특별교부금					
• 특별교부금	340	340	340	-	-
○ 대학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체계 구축	348	348	389	41	11
국비					
• 일반회계	348	348	389	41	11

* 성별 구분 없는 예산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	2종	2종	교육 프로그램 결과물 (단위 : 종)
○ 외국어 교육자료 개발·번역	2종	2종	교육자료 발간물 (단위 : 종)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학교 양성평등 확산을 위한 국가시책사업(특교) 지속 추진(~'22)

□ 기타 사항 : 해당 없음

담당부서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담당자	강정훈 사무관 이선혜 사무관	전화번호	044)203-7111 044)203-7115
------	------------------	-----	--------------------	------	------------------------------

3-1-1-② 교육 분야 인식개선 추진

□ 과제개요

- 교육 분야 인식개선 추진(교육부, 여가부)
 - 성희롱·성폭력 인식 개선을 위한 외국인 교원용 맞춤형 예방교육 자료 개발 보급

□ 그간의 추진실적

-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보급, 수요자 중심의 효과성 있는 교육교재 활용 지원
 - 공공기관 종사자 및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교육 사이버 콘텐츠*에 외국어 자막(영어, 중국어)을 통해 외국인 교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 공공기관 이러닝시스템 활용 온라인 상시학습 서비스 지원(직원용 4종, 고위직용 1종)
- 분야별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자체 제작 콘텐츠 및 타부처·민간 기관이 개발한 콘텐츠를 추천콘텐츠로 선정·보급

<추천콘텐츠 제공 현황>

(’20년 10월, 단위 : 종)

구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통합교육
총 250종	99	23	18	17	93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예방교육통합관리(shp.mogef.go.kr)시스템 등을 통해 보급

□ 2021년도 시행계획

- 성인지적 관점이 강화된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외국어 자막(영어, 중국어)을 통해 외국인 교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예산 현황 : 기포함
 - *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에 포함되어 집행되고 있음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외국어 자막 지원)	5종	4종	예산 및 콘텐츠 개발 계획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성희롱·성폭력 인식 개선을 위한 외국인 교원용 맞춤형 예방교육 자료 지속 개발 및 보급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담당자	양승초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444
------	----------------	-----	---------	------	--------------

□ 과제개요

-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스쿨미투 사안 신고 활성화 및 사안 대응을 강화하며, 사안의 중대성·심각성을 고려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사안처리 관련 컨설팅 제공
- 초·중등 성희롱·성폭력 피해학생 심리 상담 강화
 - 위(Wee)클래스를 통한 성희롱·성폭력 피해학생 학교 내 심리 상담 강화

□ 그간의 추진실적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구축·운영 계획 수립 및 교육부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18.3.9.~)
 - 익명신고 개설, 유선 상담, 컨설팅 신청 등 신고센터 기능 개선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사안 신고 및 처리 강화('19.4.25.~)
 - 컨설팅 신청 학교 및 중대 사안 발생 학교, 교육대학 등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여성인권진흥원)와 합동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실시('19.7월~)
- 시·도교육청별 위(Wee)클래스 설치 및 운영*
 - * 운영현황 : ('18) 6,966교 → ('19) 7,230교 → ('20) 7,631교

□ 2021년도 시행계획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및 컨설팅 지속 운영
 - 신고 접수된 사안 중 신고인이 컨설팅을 신청하였거나, 중대·심각한 사안에 대해 사안처리·예방교육·학교 규정 등 전반에 관련한 컨설팅 제공*
 - * 성 사안 관련 전문가(변호사·상담사 등)로 구성된 컨설팅단의 서면·유선·방문 컨설팅
 - 신고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예산 확보*를 통해 신고센터의 전문성 향상 및 사안 대응 역량 강화
 - * '21년 신고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40백만원 반영

-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위(Wee)클래스 설치 확대 및 피해학생 상담·치유 프로그램 등 지원 강화

※ 위(Wee)클래스 설치 확대('21년 7,800교)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예산(b) (정부안)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학교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및 학교 공동체 회복 지원	250	250	250	-	-
특별교부금	-	-			
• 특별교부금	250	250	250	-	-

※ 성별구분 없는 예산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컨설팅 운영(회)	30	30	교육청·학교 대상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운영 횟수(회)
○ Wee클래스 확대 구축(개)	7,631	7,800	Wee클래스 설치 학교 수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및 컨설팅 지속 운영
-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위(Wee)클래스 설치를 계속 확대하여 피해학생 상담·치유 지원 강화

□ 기타 사항 : 해당 없음

담당부서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학교생활문화과	담당자	강정훈 사무관 이재은 연구사	전화번호	044)203-7111 044)203-6980
------	-----------------------------	-----	--------------------	------	------------------------------

□ 과제개요

- 교육청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및 사안처리지원단 구성·운영 지원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중·고등학교 대상 컨설팅 강화
-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사안처리 역량 강화

□ 그간의 추진실적

- 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및 사안처리지원단** 구성·운영 지원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사안대응 체계 강화('20년 750백 만원 지원)
 - * '20.11. 현재 10개 교육청(서울·경기·인천·광주·울산·경남·경북·부산·대구·대전) 전담조직 운영
 - ** (전체 교육청(17개) 사안처리 지원단 구성·운영) 내부 및 외부위원(변호사, 상담사 등)으로 구성, 학교 내 중대·심각한 성 사안 발생 시 조사 및 사안처리를 통합적으로 지원
 - 교육청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설치 유도를 위해 전담조직 구성·운영 여부를 2021년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반영('20.9.)
 - 교육청 및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사안처리 자문·컨설팅 지원('20.4.~)
 - 전문가와 교육청, 학교 현장 등 의견수렴을 통해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개정 및 보급('20.9.)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지원
 - 심의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지원을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안내」 개발·보급('20.2.)
 - 시도교육청별 업무 담당자와 심의위원 대상 역량 강화 연수('20.2.~4.)
 -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개최 방법, 피·가해학생 조치 등을 중심으로 연수
- 성폭력 등 학교폭력에 대한 현장 교원의 대응 역량 강화 지원
 - 공정하고 엄정한 사안처리 실행력 제고를 위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보급('20.3)
 - 시도교육청별 학교장·책임교사 역량 강화 및 단위학교 사안처리 지원(연중)
 - 학교전담경찰관과 단위학교 책임교사 간 성폭력 등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정보공유 체계 협의('20.9)

□ 2021년도 시행계획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및 학교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 추진
 - 교육(지원)청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및 사안처리지원단 운영을 위한 인력·예산* 지원
 - * 특별교부금 지원('19.~'21.), '21년 지방공무원 국가정책수요 반영 추진
 - 교육부-시도교육청 전담조직 협의체 운영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근절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우수사례 공유, 역량 강화 워크숍 등 실시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지원 지속
 - 심의위원회 운영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안내」 수정·보완('21.2.)
 - 시도교육청별 업무 담당자와 심의위원 대상 역량 강화 연수('21.2.~4.)
- 성폭력 등 학교폭력에 대한 단위학교의 대응 역량 강화 지속 지원
 -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사안처리 방법론’ 교육자료 개발·안내('21.2.) 및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수정·보완('21.2.)
 - 시도교육청별 학교장·책임교사 대응 역량 강화 및 단위학교 사안처리 지원 (연중)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예산(b) (정부안)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학교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및 학교 공동체 회복 지원	750	750	375	△375	△50
특별교부금	-	-			
• 특별교부금	750	750	375	△375	△50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안정적 운영 지원	1,300	-	1,300	-	순증
특별교부금	-	-			
• 특별교부금	1,300	-	1,300	-	순증
○ 중앙단위 사안처리 지원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100	100	180	80	80
특별교부금	-	-			
• 특별교부금	100	100	180	80	80

* 성별구분 없는 예산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성희롱·성폭력 교육(지원)청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만족도(%)	87 ※ '20년 목표치 70	88	역량 강화 교육 이수자 만족도 설문조사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시·도교육청 사안 처리 역량 강화 지원 및 모니터링 등 지속 추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례 분석 및 검토
-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우수사례 보급 등을 통한 업무 담당자의 사안처리 역량 강화 지원

□ 기타 사항 : 해당 없음

담당부서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학교생활문화과	담당자	강정훈 사무관 팽주만 연구관	전화번호	044)203-7111 044)203-6898
------	-----------------------------	-----	--------------------	------	------------------------------

□ 과제개요

- ‘대학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체계 구축’ 사업 추진
 -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전담기구 운영 실태조사, 담당자 직무연수·컨설팅, 사건처리 매뉴얼 및 예방교육자료 개발 등 실시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법제화를 위한 법령 개정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의무화,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학칙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 대학 내 고위직 예방교육 참여율 대학 정보공시 등에 공개 의무화

□ 그간의 추진실적

-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중앙센터 선정 완료(’19.3월말,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 ‘대학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체계 구축’ 사업 추진(’20년, 348백만원)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현황 실태조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자료 제작(4종), 직무연수 실시(5회), 자문·컨설팅 실시(91회)
-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센터 설치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고등교육법 개정안(서영교 대표 발의) : ’20.9월 발의

□ 2021년도 시행계획

- 대학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체계 구축 사업 지속 추진(’21년, 389백만원)
 - 실태조사를 통한 대학 전담기구 현황 파악, 예방교육 매뉴얼 및 교육자료 개발, 우수사례 공모 및 확산, 직무연수, 자문·컨설팅 횟수 확대
-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센터 설치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추진 및 법률 개정 이후 시행령 개정 추진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예산(b) (정부안)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대학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체계 구축	348	348	389	41	11
국비					
• 일반회계	348	348	389	41	11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센터) 담당자 교육 만족도 (단위:%)	89 (추진중) ※ '20년 목표치 80	90	○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 기구 담당자 교육 참석자 대상 만족도 조사

※ 대학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체계 구축 '20년 사업기간: '20.3월~'21.2월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대학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체계 구축 사업 지속 추진

□ 기타 사항 : 해당 없음

담당부서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교육통계과	담당자	강정훈 사무관 최홍보 사무관	전화번호	044)203-7111 044)203-6320
------	---------------------------	-----	--------------------	------	------------------------------

□ 과제개요

- 성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강화를 통한 교직사회 성비위 근절 노력
- 교원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확대 등 다양성 제고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그간의 추진실적

- 교원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 강화
 - 성비위 교육공무원의 징계결과를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통보
 - ※ 국가공무원법 대상 '19.4.17부터 시행
 - 성매매 교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최소 '견책'에서 '정직'으로 상향 조정('20.7.28.)
 - 성비위 관련으로 징계받은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임보직에서 배제하도록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 완료
 - ① 징계위원 총수는 9~15명으로 확대하고,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련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② 성폭력 등을 사유로 징계 의결 시 전문가 의견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 ※ 「교육공무원 징계령」 ('19.2.26. 개정 및 '19.5.27. 시행)

□ 2021년도 시행계획

-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성비위 교원 징계결과를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20.7.14. 발의)
- 성희롱 등 성비위와 같이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 보호가 필요한 사안으로 징계 받은 교원을 일정기간 담임에서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 ※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개정('20.12.2)
 - 구체적 담임 배제 사유 및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 담임 배제 기간 내용 등을 담은 대통령령 개정 추진(~'20.6)

○ 예산 현황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개정(건)	신규	1건	대통령령 개정 완료 여부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해당 없음

□ 기타 사항 : 해당 없음

담당부서	교육부 교원정책과 고등교육정책과	담당자	정지은사무관 이항섭사무관	전화번호	044)203-6940 044)203-6927
------	-------------------------	-----	------------------	------	------------------------------

3-1-2-② 재발방지 조치 강화

□ 과제개요

- 정직 이하 처분을 받은 성희롱·성폭력 가해교원이 교단 복귀 시,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폭력예방 교육 및 상담 실시 의무화
-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갑질로 징계가 확정된 교원 및 연구자에 대해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참여 제한 조치 실시

□ 그간의 추진실적

- 시도교육청 2019년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계획 수립 시, 해당 내용 포함 하도록 권고('19.1월)
 -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성비위 교원 재발방지 교육 자체 계획 수립·추진 ('19.4월/서울 30시간, 광주 20시간, 부산 15시간 등)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 개발 완료, 시도교육청 및 학교 배포('19.2.28)
 -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이 교단 복귀 시 재발방지교육 이수율 의무화하는 내용 포함
-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시 성 비위 등으로 징계가 확정된 교원에 대한 과제 즉시 중단 및 참여제한(1년) 조치 반영('19~)
 - ※ 2020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2020 인문사회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 ※ 대학중점연구소 지원대상인 가톨릭대 시과학연구소 연구책임자 주모 교수의 성비위 관련 징계조치에 따라 연구책임자 직위해제 및 책임자 변경, 연구비 감액 조치('19)
- 전문가와 교육청, 학교 현장 등 의견수렴을 통해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개정 및 보급('20.9.)

□ 2021년도 시행계획

-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 및 재발방지 교육 교수법 등 직무연수 실시
- 시·도교육청별 가해교원 대상 재발방지 교육·상담 이행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21년~)

- 연구과제 선정시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과제 중단 및 향후 1년간 학술 지원대상자에서 선정 제외됨을 협약서에 명시하여 관리

[예시] '20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 표준협약서

제15조 (부가조건)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학술지원대상자(주관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가 대학 자체감사 또는 교육부 감사 등을 통해 성희롱, 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로 교육 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징계가 확정된 경우, 이를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①항에 의해 징계가 확정된 학술지원대상자(주관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를 즉시 과제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1년간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예산(b) (정부안)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대학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체계 구축	348	348	389	41	11
국비					
• 일반회계	348	348	389	41	11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담당자 대상 예방교육 및 재발방지교육 교수법 직무연수(회)	1회 (추진중)	2회	직무연수 실시 결과 보고서

※ 대학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체계 구축 '20년 사업기간: '20.3월~'21.2월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시·도교육청별 가해교원 대상 재발방지 교육·상담 이행여부 등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 추진

□ 기타 사항 : 해당 없음

담당부서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학술진흥과	담당자	강정훈 사무관 연수진 사무관 오정창 사무관	전화번호	044)203-7111 044)203-6854 044)203-6871
------	---------------------------	-----	-------------------------------	------	--

□ 과제개요

○ 추진 목적

- 예술계 성희롱·성폭력을 체계적으로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도모하여
공정한 예술창작환경 조성
-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 고충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 해소**

* 전업 예술인 중 자유활동가(프리랜서) 비율 : 76.0%

** (강제추행) 형사법 적용, (성희롱) △ 근로자인 예술인 : 남녀고용평등법, △ 공공기관 종사자 : 국가인권위원회법, △ 자유계약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 적용

○ 주요 내용

- 예술활동 중 예술인에게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신고 접수 및 시정조치, 심리
및 법률상담 등 지원

□ 그간의 추진실적 (추진 완료)

○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 개설 및 운영('18.6.20.~)

- 피해신고 접수, 심리·법률상담 및 소송·의료비 지원
- 예술인(예비예술인 포함)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구분	'18년	'19년	'20년(11월 기준)
○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 및 피해지원	41건	50건	50건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929명	1,493명	2,299명
○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43명 수강 / 19명 위촉	32명 수강 / 17명 위촉	28명 수강 / 교육중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20년)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행위 해당 여부 및 조치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 전문가의 자문 요청
 -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운영규정) 위원회에 성희롱·성폭력 전문가 추가
 - (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심사지침 세분화
 - * '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및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운영규정'은 현재 규제심사 중으로 12월 중 개정 완료 예정

□ 2021년도 시행계획

-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 활성화
 - 모바일 기반 신고·상담센터 운영으로 신고 편의성 제고
 - * 상담의 경우 익명으로 신청 가능토록 하여 심리적 장벽 해소
 - 관련 법령 내용 및 센터 역할 홍보를 통해 예술인의 신고·상담을 활성화하고 업계에 경각심 제고
- 예산 현황 : 해당 없음
- 성과지표 : 해당 없음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해당 없음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담당자	김태훈 사무관, 한송희 주무관	전화번호	044)203- 2715, 2716
------	------------------	-----	---------------------	------	------------------------

□ 과제개요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체계 확립
 - 문화예술 분야의 정부지원·공모사업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 전문 강사 양성 및 성평등 인식 제고 교육 과정 운영
 - 문화·예술 분야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맞춤형 성폭력 예방콘텐츠 개발·보급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문화·예술인 맞춤형 교육 지원

□ 그간의 추진실적

- **(예방교육 의무화)**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예방교육 의무화('20.6., 대중문화 예술산업발전법 개정), 정부지원·공모사업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예술)** 예술 지원기관의 공모사업 등에서 성폭력 교육 실시(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 **(영화)** 영화발전기금 지원 사업 대상자에 대해 ① 성범죄 예방 서약서 제출 ② 제작자, 연출감독, 프로듀서 등 주요 참여자 대상 성범죄 관련 확인서 제출 ③ 제작 참여자 전원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 **(대중문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기업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 **(출판)** 출판진흥원 지원 사업 및 창업지원, 인력양성 사업 참가자 대상 예방 교육

- **(문화분야 특화교육)** 문화예술계 특수성을 반영한 현장 맞춤형 예방교육 도입
 - 문화예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위촉('18~'20년 총 50여 명)
 - 문화예술인 및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성평등 인식제고 교육 운영
- **(맞춤형 콘텐츠)** 문화분야 강사용·현장 교육용 콘텐츠 및 행동강령 개발
 - 공통·분야별, 대상별 맞춤형 교재 및 교안, 미술·음악 등 행동강령 8종

- (찾아가는 교육) 현업 예술인, 예술대학 등 예비예술인 대상 교육현장 연계
 - 문화 분야(예술, 콘텐츠) 및 영화계 전문강사를 활용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20.11.30.기준 277회 6,722명)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문화예술분야 정부지원·공모사업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추진(계속)
- 문화예술 현장 특수성을 반영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행동강령 개발·확산 (계속)
 - * 문화예술인 특화 및 성인지 감수성 기반 행동강령 개발·보급 등
- 문화분야 예방교육 전문강사 등을 활용 문화예술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평등인력 교육 운영(계속)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200	200	200	-	-
국비	200	200	200	-	-
• 일반회계	200	200	200	-	-

※ 예방교육 등 일부 예산은 3-1-3-④ 과제 예산에 포함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	예비예술인 대상 교육콘텐츠 개발	예방교육 실적 (7,000명)	('20) 교육콘텐츠 개발 ('21) 예방교육 실적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상별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실시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평등인력 교육 운영
 - * 현장 예술인 및 기관·단체 종사자 등 맞춤형 성평등 교육 실시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담당자	권향연 사무관	전화번호	044)203-2366
------	----------------------	-----	---------	------	--------------

3-1-3-③ 문화·예술분야 가해자 등에 대한 제재 강화

□ 과제개요

- 표준계약서에 성폭력 예방 및 문제 발생 시 계약 해지 등 명문화 추진, 표준 계약서 활용 시 정부지원 우대 적용

□ 그간의 추진실적

- 표준계약서 개정 관련 분야별 현장 의견수렴 등 협의
- 표준계약서에 성폭력 예방 및 계약해지 등 조항 명문화(7개분야)
 - 대중, 만화, 출판, 공연예술, 미술, 애니메이션, 이스포츠
 - * (조문 예시) 성범죄 발생 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출판, 미술, 만화, 예술, 애니, 이스포츠 등), 성범죄 관련 업무배제 요청(만화), 성범죄 예방교육 등 관리책임(애니) 등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정부지원·공모사업 시 가해자 제재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 매뉴얼 마련
 - 표준계약서에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분쟁 해결을 할 수 있는 조항 추가

※ 표준계약서 성희롱 피해구제 조치 조문(안)

□ 00 분야 <00 연재계약서> 제0조(성희롱 피해 구제)

계약자(계약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기획위원 등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행위로 정상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 「예술인복지법」 및 「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에 따라 문화예술공정위원회 내에 '성희롱·성폭력 분과'를 설치하고, 성희롱 행위 심의 및 피해구제 연계 예정

-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 작성 의무 이행 점검 추진

○ 예산 현황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표준계약서 내 성폭력 방지 관련 조문 명문화(분야)	성폭력 방지 조문 명문화(7개)	성희롱 피해구제 조치 명문화(5개)	분야별 표준계약서에 해당 조문 반영 (총 8개 분야)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문화분야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 표준계약서에 성폭력 예방 관련 조문 개정(업계 및 관계자) 지속 협의
- 정부 지원사업 대상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종류, 규모 등) 검토 등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담당자	권향연 사무관	전화번호	044)203-2366
------	----------------------	-----	---------	------	--------------

3-1-3-④ 문화·예술계 전담 상담센터 활성화

□ 과제개요

- 산재되어 있는 관련 분야 상담센터의 연계를 강화하고,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시스템 구축

□ 그간의 추진실적

- **(홍보)**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에 문화예술계 분야별 상담센터 안내 및 활용 협조 요청('19.5.13.)
- **(연계강화)** 각 장르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피해자 지원의 효율성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연계 추진(계속)
 - 정책포럼 '미투 이후,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과 향후과제' 논의('19.8.20.)
 - 상담센터 정례회의('19.6.24, 10.25, '20.4.28) 및 담당자 워크숍('20.2.20.~21.)
 - * 센터별 업무계획 공유, 운영관리 개선방안 논의, 통일적 지원기준 마련 등
 - 문화예술체육계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 안내 통합페이지 제작 및 여가부 '직장 내 성희롱 신고센터' 페이지와 연계('19.12~)

<문체부 통합 신고·상담센터>

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센터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 	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스포츠윤리센터 
예술인	예술인(문화용역관계)	콘텐츠산업계 종사자	영화인	체육인

<여가부 신고센터>



- **(정책연구)**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방안 연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20.4~12)
 - * 상담 사례 조사·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피해지원 방안 연구
- **(모바일웹)** 예술인복지재단 성폭력 피해지원센터 모바일웹 제작(~'20.12 예정)
 - * 익명 신고 기능 신설 등 이용자 편의성 제고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협의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와 분야별 상담센터 간 연계 강화 및 사례 공유를 위한 정례협의체 운영
- (교육·컨설팅) 성희롱·성폭력 상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연계) 지원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합 계	1,157	666	1,313	156	13.5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예술인 성폭력 피해지원센터)	700	268	700	-	-
○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	163	163	163	-	-
○ 영화정책지원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294	235	450	156	53.1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문화예술계 전담 상담센터 활성화	모바일 상담 시스템 확대 (3개소)	정례 협의체 운영 (2회)	(’20) 신규 모바일 상담 시스템 마련 (’21) 정례 협의체 운영 실적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 운영 지속

- 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참여 지원
- 센터 인건비, 운영비 등 관련 필요 예산 확보 노력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콘텐츠 등 확산 지원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담당자	권향연 사무관	전화번호	044)203-2366
------	----------------------	-----	---------	------	--------------

□ 과제개요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법정법인인 '스포츠윤리센터' 운영을 통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체육계 인권침해·스포츠비리 조사 및 체계적인 스포츠인권교육 추진

□ 그간의 추진실적

- (상담신고/조사 업무 체계 확립) 신고상담 업무개시(9.2.) 및 규정정비*, 전문가 활용**으로 현재 신고사건 76건(인권 30, 비리 46건) 조사 실시 중
* 심의위원회규정, 조사규정, 조사 매뉴얼 / ** 경찰 3명, 퇴직경찰 14명

<유형별 신고·상담 접수 현황>

(단위 : 건, 11.17. 기준)

접수	유형	인권침해				비리					총계	
		성폭력	폭력	기타	합계	조직 사유화	횡령· 배임	승부 조작	입시 비리	기타		합계
신고		3	18	9	30	13	10	1	1	21	46	76
상담		8	27	150	185	-	4	1	-	8	13	198

- (피해자 보호조치/지원) 공간분리 요청 4건, 심리치유 유관기관 연계 2건, 법률지원 연계 1건, 심리안정을 위한 정기상담 10명
- (인권 교육)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인권교육 실시 도모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 대상 성폭력 예방/인권 교육 실시 MOU 체결 (9.29.)
 - (교육부) 학생운동선수 인권교육 공동운영 협의 (3개학교 시범운영)
 -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 인권 교육가 역량 향상 과정 운영 (40명)
 -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KUSF 회원대학 학생선수 인권교육 실시 협의
- (체육인과 소통 활성화) 센터-체육인간의 정보 및 소식공유를 위해 홍보 강화
 - 카카오톡 채널 운영(10월), 학생선수 대상 브로슈어 배포(10만부), 체육단체 등 40개 유관기관에 배너 게재

□ 2021년도 시행계획

-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강화 및 예방 교육 활성화
 - 성희롱·성폭력 등 체육계 인권침해 신고사건 엄정·공정 조사 실시 및 사후 관리 강화
 - 성폭력, 폭력 등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심리치료, 의료,법률 지원 등) 강화 및 긴급보호조치(공간분리, 기관과 연계하여 임시보호 등) 강화
 -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LMS 시스템을 활용한 스포츠 인권 교육 활성화
 - 정기·부정기적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
- (징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성)폭력 등 가해 지도자 이력관리 및 재계약 방지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 내 징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징계시스템 연계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3,191	-	4,502	1,311	41
국비	3,191	-	4,502	1,311	41
• 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	3,191	-	4,502	1,311	41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스포츠 윤리센터 개소	예방 교육 실시 (연 10,000명)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교육 포함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담당자	김구환 사무관	전화번호	044)203-3117
------	------------------	-----	---------	------	--------------

□ 과제개요

- 폭력·성폭력 체육지도자 자격박탈* 또는 자격취소·정지** 근거규정을 신설한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 (성범죄) 금고형 이상 20년간, 벌금형 10년간 / (상해·폭행) 금고형 이상 10년간

** 선수에게 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한 경우

□ 그간의 추진실적 (추진 완료)

-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시행('20.8.5.)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4(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개정

* 주요 개정 사항

- (지도자 결격사유 강화)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20년, 벌금형을 확정받은 자는 10년간 체육지도자 자격취득 불가(법 제11조의5제4호·제5호)
- (지도자 자격취소·정지 대상 확대) 선수에게 성희롱·성폭력을 한 경우 자격취소·정지 대상(법 제12조제1항제6호)
- (예방교육 실시)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법 제11조제2항·제3항)
- (범죄경력조회 근거 마련) 체육지도자의 범죄경력조회 근거 마련(법 제45조의3)

- 선수와 체육지도자 대상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 개발

□ 2021년도 시행계획 : 해당 없음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해당 없음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담당자	박선린 사무관	전화번호	044)203-3130
------	------------------	-----	---------	------	--------------

3-1-4-③ 체육인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및 상담 실시

□ 과제개요

- 체육계 내 성폭력에 대한 민감성 제고 및 인식 개선 확산을 위해 전문강사 파견을 통한 체육인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연계상담’ 실시

□ 그간의 추진실적

- 체육인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19년~)
 - 학교, 선수촌, 협회·연맹·단체 등 소속 운동선수, 지도자, 대회인력 등 대상
 - ※ ('19년) 중앙 특화교육 → ('20년~) 17개 시·도(18개 권역) 교육으로 확대(200회 목표)

<체육인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추진 현황>

(단위 : 회, 명)

구분	'19년	'20.11월
교육횟수	32	404
교육인원	942	8,599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체육인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예산 현황 : 기 포함
 - *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 예산의 일부를 체육인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에 집행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참여자 인식개선도(점)	83.6	83.7	사업결과보고서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체육인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확대 추진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담당자	이세민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447
------	-------------	-----	---------	------	--------------

□ 과제개요

-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 고용, 교육, 재화·용역 등 영역별 성차별과 성희롱을 금지하고 실질적 구제를 위한 시정명령 및 제재 규정 등 마련

□ 그간의 추진실적

- 20대 국회 법률안 4건 의원 발의
 - ※ 임기만료 폐기 3건, 철회 1건
-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입법 지원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관련 법안 발의 시 입법 지원 지속
- 예산 현황 : 해당없음
- 성과지표 : 해당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담당자	김성준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394
------	----------------	-----	---------	------	--------------

3-2-1-②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 및 조치의무 이행력 제고

□ 과제개요

○ 주요내용

- 취업규칙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발생 시 조치사항 반영
-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관련 조치의무 미이행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추진

□ 그간의 추진실적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발생 시 조치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토록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 20대 국회 「근로기준법」 개정안*('18.3월 의원발의) 임기만료 폐기
* 권미혁의원 발의안('18.3월), 8.28. 환노위 전체회의 상정

○ 법인 대표이사가 직장 내 성희롱의 직접 가해자가 된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 포함 검토

- 20대 국회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임기만료 폐기
* 임이자의원 발의안('18.5월)

-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 가능 여부 연구용역 실시 ('18.12월)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발생 시 조치사항을 취업규칙 내용에 포함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 지속 추진
- 법인 대표이사가 직장 내 성희롱을 직접 가해한 경우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지속 추진

○ 예산 현황 : 해당 없음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발생 시 조치사항 반영(근로기준법 개정)	-		법률 개정 여부
○ 법인 대표이사 성희롱 시 처벌대상 포함(남녀고용평등법 개정)	-		법률 개정 여부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발생 시 조치사항을 취업규칙 내용에 포함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 후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 법인 대표이사가 직장 내 성희롱을 직접 가해한 경우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후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박교영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7446
------	------------------	-----	---------	------	--------------

□ 과제개요

○ 사업목적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구제절차를 내실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 건전한 고용환경 조성을 위한 고용평등 근로감독 강화
- 성희롱사건 해결 이후 2차 피해 등에 대한 사후 행정지도 추진
- 성희롱 사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조직문화 개선 전문가 컨설팅 활성화
- 남녀고용평등 전담근로감독관 전문성 강화 추진
-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전문 상담기능 보장 등 피해자 권리구제 기능 강화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범위를 사외 전문가까지 확대 추진* 검토하고 여성 위원 위촉 비율 제고 지도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용득의원 발의, '19.1.31) 국회 상정 후 임기만료 폐기

○ 추진체계

- (추진주체) 고용노동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 (추진절차) 고용노동부 계획 수립 및 시행(지방고용노동관서 포함)

□ 그간의 추진실적

○ '18년부터 모든 근로감독* 유형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분야 점검

* '18년 26,182개소, '19년 25,415개소 시행

-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개정 완료('19.9.1 시행)

*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근거 마련

- 건강·고용보험 연계 데이터를 활용한 고용평등(스마트) 근로감독 실시

* 감독건수(개소): '17년 555 → '18년 659 → '19년 700 → '20.10월 400 목표 중 210 실시

- 익명신고시스템 개편* 운영('20.3월)으로 사업장 지도·감독 등 활용도 제고
 - * 익명신고센터 사용자 범위 확대(기능업무 담당자 외에 사건처리 담당자 추가)
사업장 규모 세분화(상시 근로자수 기준으로 5개 구간을 7개 구간으로 확대)
 - 익명신고 접수 시 행정지도·근로감독 등을 실시하여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2차 피해 확인 등을 통해 사후관리 강화
- 성희롱 사건 발생사업장에 조직문화 컨설팅을 활용토록 안내
- 전국 지방관서에 고용평등업무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18.9.1)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실시
 - * 2018년도(18회), 2019년도(7회), 2020년도(4회, 코로나19로 인한 서면교육 1회 포함)
- 고용평등상담실 상담기능 강화로 피해자 상담·구제 등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장 교육을 통해 분쟁 사전예방 등 고용평등의식 확산 제고
 - * 상담건수(건): ('15) 6,783 → ('17) 8,024 → ('19) 10,829 → ('20.10) 9,260
 - * 사업장 교육(개소, 명): ('15) 114 / 8,009 → ('17) 329 / 18,744 → ('19) 571 / 23,186 → ('20.10) 217 / 5,674
 - 또한,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18~)하여 2차 피해 예방 등 심리치유를 통해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
 - *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명, 횟수): ('18) 42 / 331 → ('19) 118 / 831 → ('20.10) 94 / 549
 -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운영 우수사례집 제작 및 보도자료 배포('20.3), 전담 인력 대상 교육 실시('20.5~6, 2회), 현장 방문·지도('20.7~8) 등 내실을 도모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대상 확대 및 여성 위촉 비율 저조 사업장 대상 위촉 지도
 - * ('20.9월 기준) 4,914개소 위촉<여성: 26.6%>
 - ** '16년~'18년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 지도 및 확대 계획」 시달 및 '19년도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워크숍 시 여성 비율 제고하도록 지도
 -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위촉범위 확대 법안 통과 추진
 -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용득의원 발의, '19.1.31) 환노위 계류 중 임기만료 폐기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건강·고용보험 연계 데이터를 활용한 고용평등(스마트) 근로감독 실시(900개소)
-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사업장은 차년도 고용평등점검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 근로감독 강화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효과성 분석」을 토대로 제도개선 등 시스템을 보완* 하고, 인프라 확충**을 위한 관계부처와의 지속 협의로 상담실 기능 강화
 - * 운영 규정 개정(상담일지 등 서식 보완)으로 성과관리 효율화,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등
 - **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인력 확충(개소당 1→2명, 증 1명), 운영비 현실화 등
- 전담인력 대상 교육 및 수시 간담회 개최, 정책자료 공유 등을 통한 상담실 운영의 내실을 도모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여성 비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위촉 확대 지도 공문 시달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b)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고용평등환경개선 지원	2,076		2,257	181	8.7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일반회계)	866		966	100	11.5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상담실적:건)	9,260건 (’20.10월말기준)	11,912건	’19년 상담실적 (10,829건)에 최근 3년간 상담실적 상승률 (10%)을 반영하여 ’21년 목표치 (11,912건) 설정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건강·고용보험 연계 데이터를 활용한 고용평등(스마트) 근로감독 실시(1,000개소)

-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사업장에 대해 차년도 고용평등점검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근로감독 실시
 - *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지침 개정을 통해 근로감독 대상 선정 범위 확대
- 성희롱 사건 발생사업장에 조직문화 컨설팅을 활용토록 적극 안내
-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직무교육 및 근로감독관 등 업무전담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 지속 실시
- 고용평등상담실(상담기능) - 지방관서(사건조사·감독 기능) 간 연계 강화로 피해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
 - 전담인력 대상 교육* 및 수시 간담회 개최, 정책자료 공유 등을 통해 상담실 운영의 내실을 도모
 - * 법령·지침 등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교육, 상담사례에 대한 슈퍼비전, 컨설팅 지원 등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여성 비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위촉 확대 지도 공문 시달

□ 기타 사항

- 미투 등 사회 전반의 관심 증대에 따른 상담수요 증가*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인력 확충과 운영비 인상 시급
 - * 상담건수(건): ('15) 6,783 → ('17) 8,024 → ('19) 10,829 → ('20.9) 9,260
 - * 사업장 교육(개소, 명): ('15) 114 / 8,009 → ('17) 329 / 18,744 → ('19) 571 / 23,186 → ('20.10) 217 / 5,674
 - *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명, 횟수): ('18) 42 / 331 → ('19) 118 / 831 → ('20.10) 94 / 549
 - 유사 사업과 비교*하더라도 상담인력 충원 및 운영비 현실화는 긴급
 - * 상담인력 / 지원단가: (고용부 고용평등상담실) 21개소, 개소당 1.5명 / 33.4백만원 vs (여가부 성폭력상담소) 168개소, 개소당 4명 / 120백만원 vs (고용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8개소, 개소당 3명 / 69백만원
 - 최소 인프라 확보를 통해 상담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2차 피해 예방지원 등 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담당자	박교영사무관 장순남사무관	전화번호	044)202-7446 044)202-7721
------	-------------------------------	-----	------------------	------	------------------------------

□ 과제개요

○ 주요내용

- 사업장이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표준 교육 동영상 제작('20년~)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양성과정 기준 마련 추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고용노동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 (추진절차) 고용노동부 계획 수립·시행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도·점검

□ 그간의 추진실적

-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 동영상 제작 ('19.12월)
- 인사 담당자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동영상 제작 추진 ('20.10월~)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양성과정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 동영상 제작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양성과정 기준(안) 마련 추진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 사업장 교육자료 제작 (일반회계)	79	58	79	-	-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성희롱 예방 교육 동영상 제작	1	1	교육영상 제작 여부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 제작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양성과정 기준 마련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박교영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7446
------	------------------	-----	---------	------	--------------

□ 과제개요

- 사업장 대상 성희롱 예방 등 교육 지원(고용부, 여가부)
 - 소규모 사업장 등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실시 및 교육 콘텐츠 제공·전문 강사 연계(여가부)

□ 그간의 추진실적

- 교육 기회 및 접근성 취약 민간기업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 중앙(1개소) 및 지역(17개 시·도 18개소)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교육 추진

<최근 3년 간 민간기업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추진 현황>

(단위 : 회, 명)

구분	'17년	'18년	'19년	'20.11월
교육횟수	293	377	337	179
교육인원	19,823	31,323	31,471	4,679

- 사회초년생을 위한 ‘찾아가는 폭력예방 특화교육’ 실시('20년)
 - 소규모 사업장,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등 대상 7회 실시(교육인원 274명)
-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보급, 수요자 중심의 효과성 있는 교육교재 활용 지원
 - 사회초년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콘텐츠 안내('20.7월)
 - 일반국민 누구나 여성폭력 감수성을 확인·제고할 수 있도록 ‘폭력예방 감수성 체크리스트’ 개발·보급('20.12월)
- 분야별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자체 제작 콘텐츠 및 타부처·민간 기관이 개발한 콘텐츠를 추천콘텐츠로 선정·보급

<추천콘텐츠 제공 현황>

(’20년 10월, 단위 : 종)

구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통합교육
총 250종	99	23	18	17	93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예방교육통합관리(shp.mogef.go.kr)시스템 등을 통해 보급

□ 2021년도 시행계획

- 소규모 사업장 등 대상 사회초년생을 위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확대 (100회 목표)
- 성인지적 관점이 강화된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예산 현황 : 기포함

※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에 포함되어 집행되고 있음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참여자 인식개선도(점)	83.6	83.7	사업결과보고서
○ 폭력예방 감수성 체크리스트 제작 및 보급	1종 (사업완료)	-	예산 및 콘텐츠 개발 계획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소규모 사업장 등 민간기업 종사자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성희롱 등 예방 콘텐츠 제공 및 전문 강사 연계 등 교육 지원 강화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담당자	이세민 주무관 양승초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447 02)2100-6444
------	-------------	-----	--------------------	------	------------------------------

□ 과제개요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수사기관 신고 및 여가부 3개월 내 재발방지 대책 제출 의무화
- 성희롱 등 사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추진 등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법적 근거 마련
- 공공부문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 요청 시 조사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제도화
- 성폭력 피해자의 해고 외 불이익 처분에 대한 규정 구체화

□ 그간의 추진실적

- 수사기관 신고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국회 계류중) 노력
- 성희롱 등 사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추진 등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관련 양성평등기본법 개정(국회 계류중) 노력
- 공공부문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 요청 시 조사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성희롱 예방지침 표준안’(지침) 명시 및 각급 기관 통보·시행('20.1)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방지법 개정 ('20.10.20) 완료

□ 2021년도 시행계획

- 계류법안 관련 법안심사 및 국회통과 지원
- '21년 성희롱 예방지침 표준안 시행
- 예산 현황 : 해당없음(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21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마련	-	'21년 표준안 마련	표준안 마련여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담당자	유정주 사무관 김성준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395 02)2100-6394
------	-------------	-----	--------------------	------	------------------------------

□ 과제개요

- 소청심사 민간위원에 성범죄 전문가 참여 등 성범죄 관련심사 실효성 강화
 - 공무원 성범죄 관련 소청사건 심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청사건에 대한 감경 결정의 엄정성 강화 등 추진

□ 그간의 추진실적

- 비상임 민간위원에 성 비위 관련 전문가* 임명('20.5.4.)
 - * 이OO 변호사(지자체 성희롱 및 성폭력 고충심의위원 역임)
 - ※ 성 비위 사건 인용률 : ('18년) 17.0% → ('19년) 14.7% → ('20년 11월말) 8.5%
- 소청심사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소청 결정문 공개 확대 추진
 - ※ 연도별 공개율 : ('18년) 66.1% → ('19년) 87.5% → ('20년 1~3분기) 91%
- 징계처분의 실효성 확보,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해 성 비위를 포함한 중징계 소청사건에 대한 의결정족수 강화 추진 (출석 1/2 합의 → 출석 2/3 합의)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20.9.7.), 국회 제출('20.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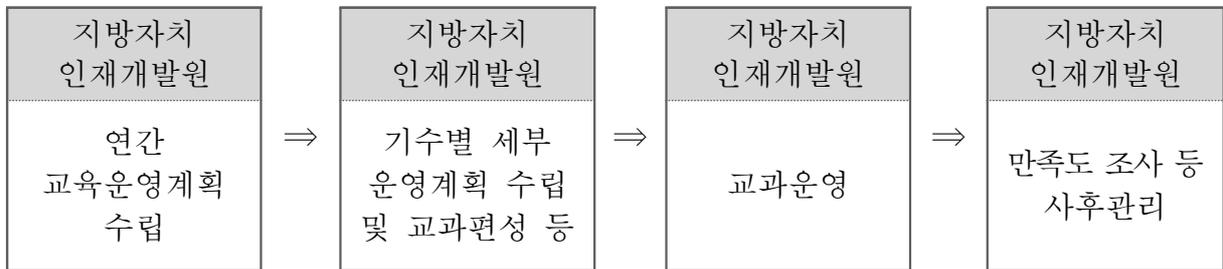
□ 2021년도 시행계획

- 중징계 소청사건 의결정족수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노력(계속)
- 비상임 민간위원 교체 시 여성(성 비위 전문가) 우선 추천 고려
- 소청 결정문 공개 지속 확대 추진(계속)

담당부서	인사혁신처	담당자	박병준 서기관	전화번호	044)201-8647
------	-------	-----	---------	------	--------------

□ 과제개요

- (추진목적) 지자체 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양성평등 의식의 내재화를 통해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
- (주요내용) 지자체 신입(지방세무직 9급) 및 승진(5급)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시 폭력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과목 편성·운영
- (추진체계)



□ 그간의 추진실적

- ‘5급승진리더과정’ 운영 시 모든 기수(2기 제외*)에 폭력예방 교육 편성·실시
 -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4대 폭력 예방(기수별 2H/12개 기수 총 4,244명 예정**)
 -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기 과정 조기 수료로 인하여 기편성되었던 강의 미실시
 - ** 1기, 3기~11기 3,943명 교육 실시 완료(11.25.기준)
- ‘지방세무직 9급 신규자과정’ 운영 시 폭력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 편성·실시
 - 성인지 감수성 및 성평등(2H/ 제3기 22명)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5급승진리더과정*’ 및 ‘행정안전부 신규임용자과정**’ 운영 시 4대 폭력 예방 교육 포함 성인지 교육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과 지속적 편성·운영
 - * 기수별 2H, 15개 기수 총 4,500명 교육 예정
 - ** 기수별 2H, 1개 기수 90명 교육 예정

- 장기교육과정 운영 시 4대 폭력 예방 교육 포함 성인지 교육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과 신규 확대 편성·운영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수입대체경비(국비, 일반회계)	7,238	3,328	7,238	-	-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여성폭력 예방 관련 교과목 만족도(점)	93.7	94	최근 3년간 여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 평균 만족도로 산정

※ 3년간 여성폭력 예방관련 교과목 만족도 : ('18년) 95 ('19년) 93.3점 ('20년) 93.7점(11.25.기준)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지방5급승진의결자 대상 폭력예방 교육 지속 운영 및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 교과 발굴·운영 등

□ 기타 사항

- '21년에는 「지방세무직 9급 신규자과정」이 폐강, 전문교육과정으로 전환하여 운영되고 「행정안전부 신규임용자과정」이 신설됨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총괄과	담당자	최혜림 주무관	전화번호	063)907-5154
------	-----------------------------	-----	---------	------	--------------

□ 과제개요

- 공공부문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문화 조성
 - 신입·승진 공무원 대상 성희롱 사건 대응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 그간의 추진실적

- 그간 성폭력예방법 등에 따라 직장교육 등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쏠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계속)
- 인권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양성평등·성인지 감수성 교육 모듈 개발·전파('18~'19년)
 - 최근 미투운동 등 젠더 이슈가 크게 부각되는 등 공직사회에 근본적인 성인지 감수성 함양이 요구됨에 따라,
 - 기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탈피하여 성평등·성인지 감수성 교육으로 개념을 확장한 수용성·효과성 높은 신규 교육과정 개발·운영
 - * '18년 고위공무원단, 과장급 대상으로 시범 교육 실시 → '19년 각 부처 전파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통해 신규자·승진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교육 차질 없이 이수
 - * 실시간 교육 이수자 : 5·7·9급 신규자 교육과정 895명 / 5급 승진자 576명

□ 2021년도 시행계획

- 2021년 공무원 인재개발 종합계획에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한 양성평등·성인지 교육을 주요 시책교육으로 명시
 - 국가인재원 신입·승진 공무원 대상 기본교육과정*에 2~3시간 관련 교과목을 필수 편성하여 교육 실시
 - * 5급 승진자과정(1,700여명), 5급 신입관리자과정(400여명), 7급 신규자과정(300여명) 등 연간 2,400여명 대상

- 각 부처 소속 교육훈련기관(26개) 신입·승진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에도 부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편성될 수 있도록 권장·독려

○ 예산 현황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국가인재원 신입·승진 공무원 대상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한 양성평등·성인지 교육 실시	1,730명	2,400명	연간 예상 교육인원

□ 기타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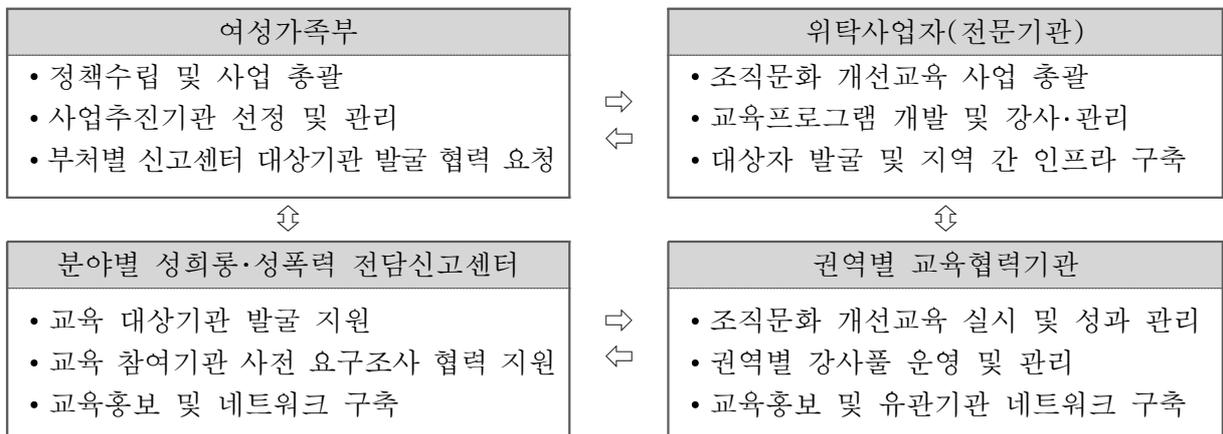
-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을 고려하여 실시간 온라인 교육 등 추진 검토

담당부서	인사혁신처	담당자	김두환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8224
------	-------	-----	---------	------	--------------

□ 과제개요

-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재발방지 교육 및 조직문화 개선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 여성가족부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전문적인 교육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권역별 교육기관 및 행위자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추진

<추진체계>



□ '20년 추진실적

- 성희롱 재발방지 조직문화 개선 교육
 - 교육기관 선정(6개지역 9개 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강사 워크숍(4회)등을 통해 41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개선 교육 88회 실시
-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 상담
 - 행위자 교육 전문기관을 선정(한국비폭력대화센터)하고 행위자 개선교육 실시(40명)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교육의 저변확대, 접근성 제고 등 안정적인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권역별 교육운영기관 발굴·운영

- 교육(상당) 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인력풀 구축
- 조직 내 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맞춤형 행위자 재발방지 및 조직문화개선 교육 지원

※ 세부 추진내용 및 운영목표

구분	세부내용	운영목표
권역별 교육운영 기관 발굴 및 운영	권역별 운영기관 발굴	9개 기관
	행위자 대상 인식개선 교육 시행	40명
교육(상당)인력 전문 역량 강화	강사 대상 역량강화 교육 시행	교육(20H) 4회
		워크숍(4H) 3회
조직문화 개선 교육 실시	강사 대상 역량강화 워크숍 시행	워크숍(4H) 1회
	사건발생기관 대상 교육 실시	10개 기관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년		2021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성희롱 등 직장내 여성폭력 방지 및 지원(양성평등기금)	600	600	500	△100	△16.7
- 조직문화 개선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200	200	200	-	-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조직문화 개선 교육 만족도(점)	-	82.5	과거 실적치가 없는 신규 지표, 양호 수준인 80%를 목표치로 설정

※ '20년 실적 취합 중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점검총괄팀	담당자	윤영선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164
------	----------------	-----	---------	------	--------------

□ 과제개요

- 공직사회 내 성비위 사건 발생 시 기관 차원에서 신속·엄정 대응하도록 하여 성비위 근절 토대 확립 및 국민 신뢰 제고
 - 성비위 공무원에 대한 엄정 징계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등이 원스톱(one-stop)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사건 대응 역량 강화
 - * 주요내용 : 성비위 엄중 징계, 징계위원회 심의 절차 강화, 징계절차에서 피해자 알권리·진술권 등 권익 보호

□ 그간의 추진실적

- 성비위 사건 징계의결 요구 시 전문가 의견서 첨부 의무화('15.11.)
 - * 「공무원 징계령」 개정
-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발생 시 엄중 징계 방침 통보('17.10.)
 - *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 통보
-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강화('18.5.)
 -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 성폭력·성희롱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 통보 및 중징계 요구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징계위원회 진술권 보장('19.4.)
 -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개정
- 성비위 사실을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및 징계감경 금지('19.4.)
 -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 성비위 사건 징계위원 성별 고려 의무화('20.7.)
 - * 「공무원 징계령」 개정

□ 2021년도 시행계획

○ 조직 내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징계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 법령 등에 2차 가해 관련 징계양정 기준 등 근거 마련 추진

- 2차 가해에 대한 징계기준안 마련(~'21.3.)

* 성비위 2차 가해 특성별 비위유형 정의, 전문가 및 유관기관 자문·협의 등 실시

- 개정계획 수립,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21.4.~'21.6.)

- 공포·시행('21.7.~)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관계 법령 개정 추진	공무원 징계령 개정('20.7.)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별표] 징계기준에 2차 가해에 대한 기준 신설

담당부서	인사혁신처 복무과	담당자	남상민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8433
------	--------------	-----	---------	------	--------------

3-2-2-③ 기관의 사건 대응 및 재발방지 역량 강화

□ 과제개요

-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 피해자, 제보자의 신고사건 접수 및 상담, 관계기관 이송, 접수사건 분석, 처리결과 모니터링 등

□ 그간의 추진실적

-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설치·운영('18. 3.)
- 추진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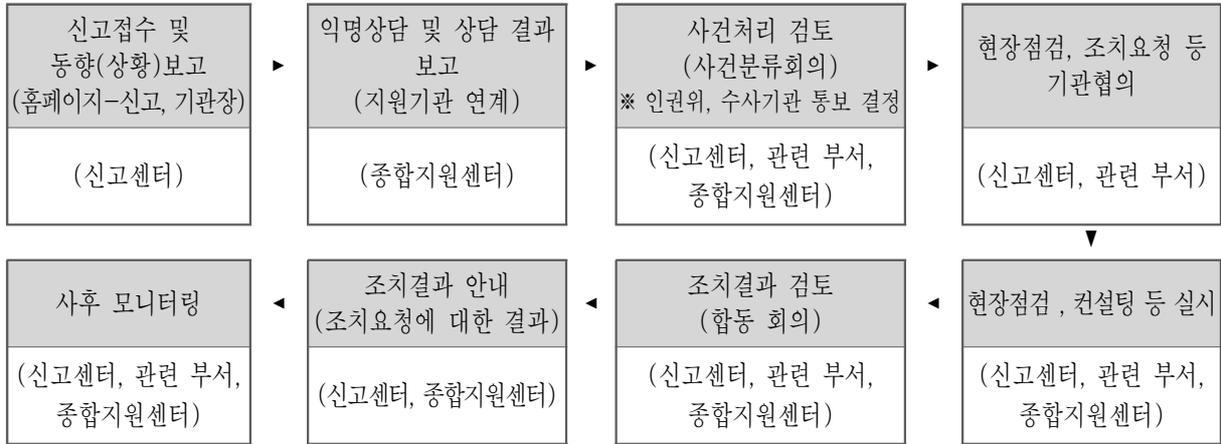
(단위 : 건수, '18.3.8.~'20.9.30.기준)

구 분	신고사건					상담	컨설팅		
	소계	성희롱	성폭력*	2차피해**	기타		소계	신고건	기관신청
합 계	598	267	285	30	16	3,896	405	185	220
'20년(9.30.)	88	48	31	4	5	1,925	78	28	50
'19년	150	95	28	16	11	1,018	152	44	108
'18년	360	124	226	10	-	953	175	113	62

□ 2021년도 시행계획

- (일반 신고사건) '20년도와 동일하게 접수 및 처리
- (기관장 신고사건) 자치단체장 또는 공공기관장으로 구분하여 접수하고, 동향(상황) 및 상담결과 보고, 사건분류회의 확대 등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 예산 현황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 해당 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점검관리팀	담당자	유재민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162
------	----------------	-----	---------	------	--------------

3-2-3-① 군 성폭력 예방 강화

□ 과제개요

○ 사업목적

- 군내 성폭력 실태 진단을 통해 실효성 있는 예방·대응계획 수립 및 맞춤형 교육 강화

○ 주요내용

- 성폭력 예방활동 지침 수립 및 추진
-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기능 확대 및 실효성 제고
- 전 장병 맞춤형 성인지 교육 강화
- 주기적 성폭력 실태조사(3년 주기)

□ 그간의 추진실적

○ 성폭력 예방활동 지침 수립 및 추진

- '20년 성폭력 예방활동 지침 수립·시달
 - * 주요내용 : 맞춤형 성인지 교육강화, 현장중심의 성폭력 예방활동, 피해자 보호 및 지원강화, 가해자 처벌 등
- 전군 성폭력 예방 특별 강조기간 운영(2회) : 하절기 및 연말연시
 - * 지휘관 특별 정신교육,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활동 추진
 - * 성고충 처리체계 및 성폭력 관련 법규교육, 특별 신고기간 운영 등

○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책 추진

- 군내 성인지 교육과정에 '디지털 성폭력 예방' 내용 강화(4월)
- 전군 디지털 성폭력 특별 강조 기간 운영(4월)
 - * n번방 사건 관련, 지휘관 주관 특별 정신교육, 군법교육 등 실시
- 군인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 마련(8월)

○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기능 확대 및 실효성 제고

- 성폭력근절정책 전담인력(사무관) 증원(1월) 및 양성평등정책과장 민간 전문가 채용(5월)

- 각 군 양성평등센터 및 예하부대 전문인력 보강
 - * 해병대 양성평등센터장 전문인력 보직(해병 대령→전문경력관 가군) : 5월
 - * 각 군 양성평등센터 인력 보강 : 7명(육군 2, 공군 1, 해군 2, 해병 2)
 - * 해군 양성평등담당관 '현역 겸직 → 전담직위(7급)'로 전환 보충 : 8개 직위

○ 전 장병 맞춤형 성인지 교육 강화

- 코로나19 고려 성인지 의무교육 방법 변경*, 실시
 - * 소집교육 : 일시 중단(2월) → 영관장교 이상 재개(7. 2.) → 전면 중단, 원격평가로 대체(8.21.)
- 사관학교 성인지교육* 표준교안 개발(4~8월)
 - * 정규과정 반영(교양 2학점) : '19년 육군·3사관학교(1학년 1학기) 및 해·공군사관학교(1학년 2학기), '20년 간호사관학교(1학년 1학기)
- 전문강사 및 군 전담교관 역량 강화
 - * 전문강사 직무역량강화 교육(3회), 전담교관 양성교육(7~11월) 실시
- 성인지 원격교육 동영상 콘텐츠 개발(8~12월)
 - * 4대폭력예방, 성인지력 향상, 양성평등 등 7종 개발, '21년 활용 예정

□ 2021년도 시행계획

○ 성폭력 예방활동 지침 수립 및 추진

- '21년 성폭력 예방활동 지침 수립·시달
 - * 성인지교육, 현장중심 성폭력예방, 피해자 지원, 가해자 처벌 강화 등 포함
- 국방부 및 각 군 주관 예하부대 현장점검시 이행실태 점검
- 하절기 및 연말연시 성폭력 특별 강조기간 운영
- 성폭력 사건 분석 연구용역 추진(전반기)
 - * 군 성폭력(형사 및 징계)과 민간 성폭력 사건 처분결과를 비교·분석하여 가해자 엄중 처벌의 근거 마련

○ 전 장병 맞춤형 성인지 교육 강화

- 연간 성인지 교육 지침 수립 및 성인지 원격교육 의무시행
 - * 교육 미이수 간부 대상 진급·지휘관 보직 심사 시 제외
 - * 부대별 상황고려 교육방법 선택 : 화상/소집교육, 영화/연극/독서, 자체토론 등
- 전문강사·전담교관 역량강화 및 강사 모니터링 지속
 - * 병사 대상 성인지 교육 전담교관 양성·보수과정 위탁개설

-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활용(정기·수시)
- 주기적 성폭력 실태조사
 - 「'21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 사전 준비
 - * 예산반영 및 '19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 미흡 사항 보완 등
 - 성폭력 예방 현장점검 및 성폭력 피해실태 분석평가회의(정기·수시)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성인지 교육	1,172		1,187	15	1.3%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성인지 교육 이수율	95%	95%	교육 참석 인원 / 전 간부 인원
○ 군 성폭력 사건 분석 연구 용역 추진 (전반기)	신규	1건	연구용역 추진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전문강사·전담교관 역량강화 및 강사 모니터링 : 지속
- 국방부 성인지교육 콘텐츠 개발 : 지속
- '21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담당부서	국방부	담당자	박한기 사무관	전화번호	02)748-5107
------	-----	-----	---------	------	-------------

□ 과제개요

○ 사업목적

- 효과적인 군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 법규·제도·인력 등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을 조성함

○ 주요내용

- 피해자 지원 인력확대 및 역량강화
- 성폭력 피해는 양성평등계선 및 군사경찰·법무 등에서 접수하며, 수사 기관은 형사법절차에 따라 피해자 보호
 - * 피·가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가 희망하는 시간·장소에서 조사
 - * 가해자 대면으로 인한 2차피해 방지,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 회유, 소문유포 등 행위 차단
- 피해자 조사는 피해자와 동성인 수사관이 실시, 국선변호사 지원제도 운영
 - * 영관급 이상 주요 성폭력은 국방부 및 각 군 본부 군사경찰·검찰에서 전담
- 피해자 신상 및 사건 관련 비밀보장 엄수
- 가해자·피해자 분리(공간적) 및 신속·엄정한 후속조치
 - * 성폭력 관련 보직조정 시 가해자 조정 원칙
- 피해자 중심의 인사관리 등 적극적 보호조치
 - * 피해자 희망시 휴직 및 청원휴가 조치(휴직기간 : 최대 2년 / 청원휴가 : 60일)
 - * 신고접수와 동시 성고충전문상담관/양성평등담당관 지정 후 조력
- 성폭력 예방 통합시스템 운영으로 피해자 지원·보호 강화
 - * 군내·외 상담 및 신고, 의료·법률지원 시스템 적극 활용
- 성폭력 징계 시 외부전문가(제한 시 성고충전문상담관) 참여 의무화
 - * 민간인 성폭력 예방·피해자 지원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 그간의 추진실적

○ 성고충전문상담관 확대 운용

- *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고충전문상담관 충원 : 현원 48명(정원 48명)

○ 성고충전문상담관 역량강화 위탁교육 실시(연 1회)

- * 성폭력 피해사례 연구, 디지털 성범죄 이해 및 피해자 지원 등

- 성폭력 근절을 위한 민·관·군 통합 워크숍(연 1회)
 - *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효율성 제고
- 성고충전문상담관 역량강화 워크숍(연1회)
 - * 초빙강연·동료 슈퍼비전·토론 등을 통해 업무경험 공유
- 국방허브內 성폭력(예방·상담·신고) 홈페이지 구축
- 「軍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2021년도 시행계획

- 성고충전문상담관 확대 운용 : '20년: 48명 → '21년: 50명
- 성고충전문상담관 직무역량강화 워크숍 실시
- 피해자지원 연계강화를 위한 민·관·군 통합 워크숍 개최
-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연구용역
- '21년 「軍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성폭력 상담에 따른 상담관 심리상태 유지를 위한 '심리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	2,264	2,064	2,459	195	8.6%
• 일반회계	2,264	2,064	2,459	195	8.6%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성고충전문상담관 인력 증원	48명	50명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 2022년도 이후 추진계획

- 성고충전문상담관 증원 : 50명('21년) → 60명('22년)

담당부서	양성평등정책과	담당자	조누리 전문경력관	전화번호	02)748-5104
------	---------	-----	--------------	------	-------------

□ 과제개요

○ 사업목적

- 군 성희롱·성폭력 사건 담당 인력 확충 및 업무 전문성 제고

○ 주요내용

- 성폭력 사건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인력 확충 및 직무교육 실시
-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 그간의 추진실적

○ 성폭력 전문인력 확충 및 직무교육 실시

-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근거 마련(‘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정)
-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고충전문상담관 충원 : 現 48명
- 성고충전문상담관 역량강화 위탁교육(양성평등교육진흥원)
 - * 성폭력 피해사례 연구, 디지털 성범죄 이해 및 피해자 지원 등

○ 성폭력 피해는 양성평등계선, 군사경찰·법무 등에서 접수하며, 수사기관은 형사법절차에 따라 피해자 보호

- 피·가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가 희망하는 시간·장소에서 조사
- 여성 피해자는 여성수사관 조사가 원칙이며, 국선변호사 지원
 - * 영관급 이상 주요 성폭력은 국방부 및 각 군 본부 군사경찰·검찰에서 전담

□ 2021년도 시행계획

○ 상담 및 전담 수사인력 보강(여성 위주 편성)

- 성고충전문상담관 : '20년 48명 → '21년 50명 → '22년 60명
- 전담 수사인력(국.조사본부) : '19년 3명 → '20년 8명 → '21년 12명

○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전문 수사인력 양성

- 성폭력 사건 처리 관계자 민간 전문기관(양성평등교육원) 교육 강화
 - * 신규 임용 법무관(수사관) 대상 교육 편성, 임무 고려 맞춤형 교육

- 국내·외 유관기관(대검찰청, 경찰청 등) 수시교류 및 직무교육
- 성폭력 징계시 외부전문가(제한시 성고충전문상담관) 참여 의무화
 - 민간인 성폭력 예방·피해자 지원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전담 수사인력 확대(국 조사본부)	8	12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방안 지속 마련

담당부서	국방부	담당자	박한기 사무관	전화번호	02)748-5107
------	-----	-----	---------	------	-------------

□ 과제개요

○ 사업목적

- 징계절차에서 피해자 진술권 보장 및 징계처분 결과 통지를 통하여 피해자의 참여권 및 알권리를 보장하여 투명성 제고

○ 주요내용

- 징계위원회 개최 전 위원회 일정 안내하여 참여권 보장
- 징계위원회 참석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 동석 가능
- 징계처분 결과 피해자 통지 제도 마련

□ 그간의 추진실적

○ 징계위원회에서 피해자 진술권 보장

-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피해자에게 개최일시 안내
- 피해자를 참고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신뢰관계인 동석 가능
 -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7조·제28조

○ 징계처분 결과 피해자 통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개정
 - * 징계처분결과는 개인정보 해당, 타인공개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 필요
- 20대 국회임기만료 폐기/국방위 통과(2020.11.19.)
 - * 군인사법 국방위 소위 계류 중

□ 2021년도 시행계획

○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개정 추진

- 국회 본회의 통과 추진

○ 하위법령 정비(군인 징계령,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개정 완료	국회 제출	개정 완료 및 하위법령 정비	국회 임기만료에 따른 재추진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제도 시행 강조 공문 하달 및 관리·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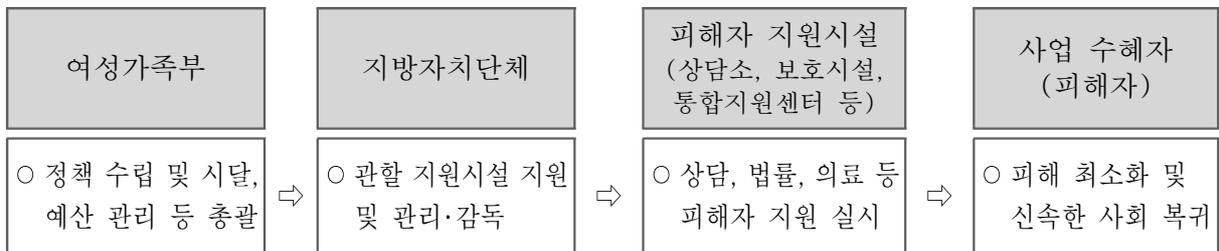
담당부서	국방부	담당자	박수정 소령	전화번호	02)748-6818
------	-----	-----	--------	------	-------------

3-3-1-①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 과제개요

- (목적) 성폭력피해자 및 그 가족 대상 상담·의료·수사·법률·보호·숙식 제공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및 자립지원
- 추진체계

<지원 체계>



○ 주요내용

(’21.1월 기준, 단위 : 개)

구분		주요 기능	지원개소수	
성폭력 상담소	일반	성폭력피해자 대상 상담,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 연계, 의료·법률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성폭력예방 및 홍보 등	103	80
	장애			23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일반	성폭력피해자 대상 상담, 보호 및 숙식제공, 의료·법률지원, 학업·자립지원 등	34	18
	장애	장애인 피해자 대상 보호시설		8
	특별 지원	19세 미만 친족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보호 및 숙식제공, 의료·법률 지원, 학업 및 자립 지원		4
	자립 지원	보호시설 퇴소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공동생활시설		4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위기 지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상담, 의료, 수사·법률 서비스 등 지원	40	15
	아동	성폭력 피해 19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대상 상담, 의료, 법률, 심리치료 서비스 등 지원		7
	통합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대상 상담, 의료, 수사·법률, 심리치료 서비스 등 지원		18

□ 그간의 추진실적

- (성폭력상담소 운영) 성폭력피해의 상담, 보호,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및 수사·재판 등 동행 지원 등

<상담소 운영 실적>

(단위 : 개소, 건, 명)

연도	개소수	상근 종사자수(명)	상담실적			개소당 평균 상담실적
			계	성폭상담	기타상담	
'16년	167	549	158,029	101,028	57,001	946
'17년	167	577	180,572	111,123	69,449	1,081
'18년	170	622	241,343	154,378	86,965	1,420
'19년	168	628	276,122	148,311	127,811	1,644

- (성폭력 보호시설 운영)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상담 및 치료, 피해자 의료·법률 지원 등

<보호시설 지원 실적>

(단위 : 건, %)

연도	총계	심리· 정서 지원	수사 법률 지원	의료 지원	학교 문제 지원	자립 지원	기 타
	비율						
'16년	97,566	49,942	1,018	8,807	7,204	10,661	19,934
	100%	51.2	1.1	9.0	7.4	10.9	20.4
'17년	98,954	48,237	1,201	8,844	8,259	10,930	21,483
	100%	48.7	1.2	8.9	8.3	11.0	21.7
'18년	120,675	62,831	1,314	8,911	10,813	17,005	19,801
	100%	52.1	1.1	7.4	9.0	14.1	16.4
'19년	141,719	66,514	1,284	13,898	11,907	20,928	27,188
	100%	46.9	0.9	9.8	8.4	14.8	19.2

- (해바라기센터 운영)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 등을 통합 제공

<서비스 지원 현황>

(단위 : 건)

연도	합계	의료지원	심리지원	상담지원	수사 법률지원	동행 서비스	기타*
2017	361,457	87,213	34,619	114,927	56,380	5,119	63,199
2018	398,690	100,929	35,866	125,347	58,227	5,902	72,419
2019	413,177	112,659	34,787	125,459	62,120	5,221	72,931
2020	380,141	101,193	32,712	116,758	57,734	4,557	67,187

* 기타 : 정보제공, 사회적 지원(기관연계, 자조모임, 적응훈련), 가족개입 등

□ 2021년도 시행계획

○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 성폭력 피해 특성을 고려한 상담·의료·법률·수사·동행지원 등 피해자 중심의 종합형 서비스 지원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성폭력피해자지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31,382	31,270	32,366	984	3.1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성폭력피해자 지원실적(건)	288,000건 (추정)	296,000건	성폭력 관련 기관(상담소, 해바라기센터)의 성폭력 상담 지원 건수의 총계 (전년대비 3% 증가)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운영, 의료비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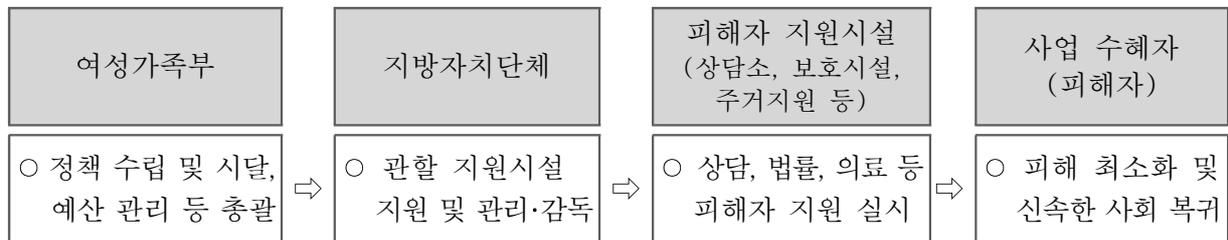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담당자	서진희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396
------	-------------	-----	---------	------	--------------

3-3-1-②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 과제개요

- (사업목적)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소, 보호시설 등의 설치·운영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상담·의료·보호 등을 지원하고, 무료법률지원으로 스스로 방어·보호능력이 부족한 피해자 권익보호
- (추진체계)

<지원 체계>



- (주요내용)
 - 1366센터,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 등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 가정폭력피해자 대상 민사·가사·형사사건 무료법률지원

□ 그간의 추진실적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를 통한 피해자 초기상담, 보호, 전문기관 연계 등 초기지원
- 가정폭력상담소 운영(국비지원 128개소) 및 상담원 추가 배치(43명)를 통한 피해자 상담지원 확대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65개소) 및 입소 피해자 숙식제공 등 보호,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 가정폭력피해자 가족보호시설(1개소) 확충
 - ※ 가족보호시설 : 10세 이상 남아 동반 피해자 가족단위 입소 가능
- 피해자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지원사업 운영(4개 기관)

□ 2021년도 시행계획

○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보호 서비스 강화

- 피해발생 초기대응 및 상담 강화를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 경찰 등 피해자 지원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회의 실시(연중)
- 가정폭력 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인력 추가 배치(상담소 43명, 보호시설 65명)하여 폭력피해 상담 및 피해자 지원 내실 강화

○ 가정폭력 예방 및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가정폭력피해자지원 (양성평등기금)	31,508	31,341	33,145	1,637	5.2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실적 (천건)	취합중	780	가정폭력 상담소 상담실적, 1366 연계(지원) 실적, 가정폭력피해자 (이주여성 포함) 보호시설 지원 합산 (1~9월 실적 합산)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년과 동일하게 목표치 설정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및 지원사업 지속 운영
-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 추가 배치(~22년)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담당자	양현순 서기관 김윤경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424 02)2100-6425
------	-------------	-----	--------------------	------	------------------------------

□ 과제개요

- 스톡킹·데이트폭력 없는 국민 안심사회 실현을 위한 스톡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및 인식개선 추진

□ 그간의 추진실적

-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소를 통한 피해자 상담 및 일시보호 서비스 지원
 - * 1366 전체 상담건수 '19년 353,937건, '20년 10월말 현재 269,282건 지원
-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실시
 - * '19년 총5,489회 246,545명 교육 실시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상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18개소) 및 '여성폭력 사이버상담'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긴급 상담 및 인근 지역 전문 상담소 연계
- (일시보호) 전국 18개 긴급피난처를 통해 최장 1달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일시보호 서비스 제공
- 스톡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대상 법률 상담 및 치료회복 서비스 제공
- 스톡킹·데이트폭력 관련 예방 교육 확대

○ 예산 현황 : 기포함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포함되어 집행되고 있음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1366 상담 건수	9,478건 ('20.10월말 현재)	11,372건	'20년도 대비 '21년도 예상 실적증가율(0.5%) 수준을 고려, 목표로 설정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담당자	박윤호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423
------	----------------	-----	---------	------	--------------

□ 과제개요

- 신고접수 즉시 적극적으로 초동조치를 실시하고,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권리 고지서’(관련절차, 지원기관 등 수록) 서면교부, 필요정보 적시 제공
- 피해자와의 핫라인 구축 등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 제공 및 사후관리

□ 그간의 추진실적

- 스톱킹 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 문자 발송 시스템 구축 완료
- 「스토킹범죄 현장대응 강화지침」 내실화·고도화 노력
 - 신고·현장조치·수사·신변보호 등 단계별 지침을 보다 세밀하게 정비하여 내실 있는 행위자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도모
 - ※ △ 행위유형별 적용 법규 명확화 △ 기능별 담당 업무 세분화 △ 기능 합동 TF운영 등

□ 2021년도 시행계획

- 기존 수립한 「스토킹범죄 현장대응 강화지침」 이행실태 점검·교육* 및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民·官·警 협업 강화
 - * 피해자 보호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신고대응 時 가해자 대상 경고 확행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안내 및 신변보호·보호기관 연계 등 조치 철저 등
- 「스토킹처벌법」 제정 時 초동조치 단계에서의 행위자 접근금지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장대응 가이드라인 마련·교육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스톱킹대응지침 시행 점검·교육 실시		쑤 관서 교육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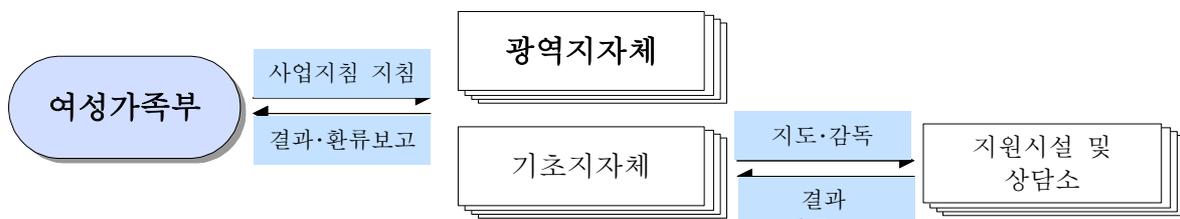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담당자	이지호 경감	전화번호	02)3150-0891
------	-------------	-----	--------	------	--------------

3-3-1-④

성매매피해자 탈성매매 지원체계 구축

□ 과제개요

- (목적)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구조에서 자활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하여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
- (근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추진체계)



□ 그간의 추진실적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등 운영(96개소)
 - 상담, 의료·법률·직업훈련(진학교육),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제공

<성매매피해자 지원 현황>

(단위 : 개소)

시설별	상담소	일반·청소년 지원시설	외국인 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 센터	대안교육 위탁기관
시설 수	30	39	1	12	12	2

<성매매피해자 지원 현황>

(단위 : 명)

연도	합계	상담소	일반·청소년 지원시설	외국인 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 센터	대안교육 위탁기관
'20년 상반기	4,258	2,693	666	58	52	739	50
'19년	6,924	4,635	1,088	115	71	920	95
'18년	6,887	4,636	1,107	66	80	883	115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성매매피해자 자립·자활을 위한 종합적 지원서비스 제공 (연중)
 - ※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한 상담, 의료·법률, 치료·회복을 통한 자립·자활 등

-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현장점검(4~6월)
- 사업 운영지침 개정을 위한 현장 의견조회(11월)
-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만족도 조사(2~10월) 및 결과 통보(12월)

○ 예산 현황

(국비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양성평등기금)	15,245	15,245	15,702	457	3.0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성매매피해자 지원실적(건)	128,000 (추정)	13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4년간('16~19) 추진실적 평균 (127,183건) 대비 약 1.4% 증가한 130,000건으로 목표 설정 * ('16) 129,092건, ('17) 122,837건 ('18) 128,871건, ('19) 127,553건
○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이용자 만족도(점)	90.84	9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4년간('16~19) 추진실적 평균 (89.8점) 대비 약 0.6점 증가한 90.4점으로 목표 설정 * ('16) 89.3점, ('17) 89.6점, ('18) 90.1점, ('19) 90.2점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자활 지원 확대
 - 장애인 및 외국인 피해여성 증가에 따른 지원시설 지속 확충

□ 기타 사항

- 해당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담당자	조 린 서기관	전화번호	02)2100-6435
------	----------------	-----	---------	------	--------------

□ 과제개요

- 랜덤채팅앱 등 성매매로 유인된 청소년들이 피해 발생시부터 안정적인 생활과 심리적·정서적 치유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구축·운영

□ 그간의 추진실적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 따라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법적 근거 마련
 -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청소년성보호법」 제47조의2 신설('20.11.20. 시행)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사업과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사업의 기능을 통합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개편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성매매로 유입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발견, 긴급구조, 상담, 자립 자활 등 성인이 될 때까지 종합지원하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 * 중앙지원센터 및 지역전담지원센터(17개소) 설치
- 예산 현황 : 기포함
 - * 세부사업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치료재활”에 포함되어 집행되고 있음
- 성과지표 : 해당없음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종합서비스 지속 지원
 - (중앙지원센터) 지역센터 연계 및 총괄관리, 교육·상담 프로그램 개발, 유관 기관 협력 강화, 종사자 직무 역량강화 등

- (지역전담지원센터) 조기발견에서 긴급구조, 상담 및 치료·회복, 일시보호 등 사회복귀까지 맞춤형 지원

기타 사항

- 해당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담당자	이승철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446
------	-------------	-----	---------	------	--------------

3-3-1-⑥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효율화 및 지원 강화

□ 과제개요

-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기술개발 협력 강화

□ 그간의 추진실적

-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운영
 - (여성가족부-과기정통부) 인공지능(AI) 활용 ‘웹하드 사이트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시스템’ 개발 및 적용('19.7월)
 - * 국내 웹하드 사이트 대상 피해영상물 유포 모니터링
 - (여성가족부-경찰청) 경찰청에서 개발한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공동 활용 협력('19.7월)
 - * 피해영상물의 특징값(DNA 등) 추출하여 해외사이트, SNS, P2P 등 유포 모니터링
 - (여성가족부-방통위-경찰청-방심위) 디지털 성범죄 유통 방지 공동 대응체계 구축('19.11월) 및 협력상황 점검('20.2월, 5월, 9월, 11월)
 - * 공공 DNA DB 구축·활용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의 온라인 확산방지 공동 대응

□ 2021년도 시행계획

- 공공 DNA DB 활용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확산방지 지속 추진
- 예산 현황 : 해당없음
- 성과 지표 : 해당없음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 방심위 간 연계하여 불법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및 차단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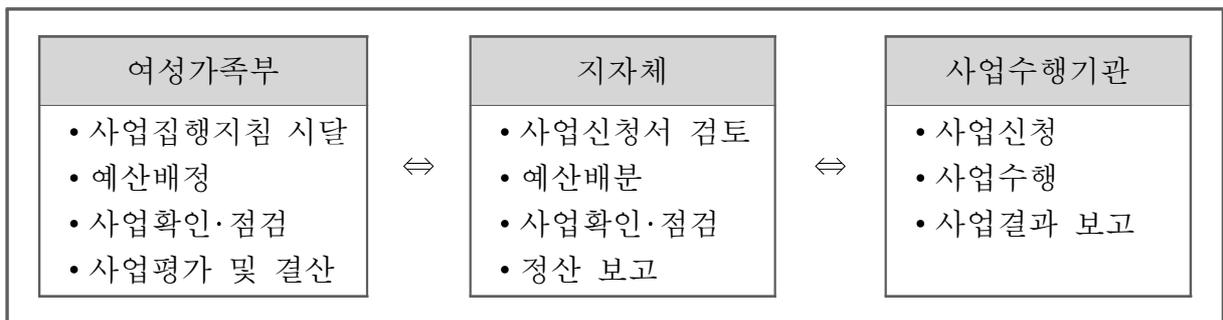
□ 기타 사항 : 해당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담당자	신경식 서기관	전화번호	02)2100-6392
------	----------------	-----	---------	------	--------------

3-3-2-①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강화

□ 과제개요

- (사업목적) 가정구성원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피해자 인권 보호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 지원
- (추진체계) 중앙-지자체-사업수행기관을 통한 지원 추진



- (주요내용)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및 임대주택 지원을 통한 주거지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지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자립지원금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 자립역량 강화

□ 그간의 추진실적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1인당 5백만원)
-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임대주택) 확대(10호 증)
- 자립역량강화 시범사업(2개소) 운영
 -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취업지원 전문기관을 연계하여 피해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보호·주거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보호시설 입소 지원 및 퇴소 시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
 - * 보호시설 65개소 운영('20년), 임대주택 지원 확대('20.6월 345호, '21년 10호 내외 증)

- (자립지원금 지원) 보호시설 퇴소자 등을 대상으로 주거 등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1인당 500만원)을 심사를 통해 지원

* 주거마련(월세, 보증금), 학자금, 자격취득 및 취업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

○ 예산 현황 : 기 반영(3-3-1②) 과제 예산현황에 포함)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자립역량강화사업 시범운영(개소)	2개소	-	사업종료
○ 주거지원 임대주택 운영기관 확대 (개소)	+1	+1	신규 운영기관 선정 결과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및 주거지원(임대주택 지원), 자립지원금지원 사업 지속 운영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담당자	김윤경 사무관 이윤희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425 02)2100-6426
------	----------------	-----	--------------------	------	------------------------------

□ 과제개요

○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강화

- 가정폭력 피해자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 그간의 추진실적

○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근거 마련('19.7월) 및 우선공급 운영

- 쪽방·고시원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대상에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포함·확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 (근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지원대상) 쪽방·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노숙인시설·컨테이너 등 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행정기관의 장·지자체 장·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추천한 사람 등
 - (자격요건) ①무주택세대구성원,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③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
- (지원내용)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우선 입주 및 보증금 감면
- (선정절차)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시·군·구에서 입주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계약체결(상시신청, 즉시지원)

□ 2021년도 시행계획

○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지침」 제도를 지속 운영하여, 긴급한 주거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예산서상 세부사업명	해	당	없	음	
국비					
• 일반회계					
• 특별회계(회계명)					
• 기금(기금명)					
지방비					
기타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가정폭력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제도 운영	제도 운영	제도 운영	제도 운영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지속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지침」 제도를 지속 운영하여, 긴급한 주거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 기타 사항 (해당없음)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담당자	박승연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4868
------	------------------	-----	---------	------	--------------

□ 과제개요

- 집결지 내 성매매 피해여성에게 현장 접근성을 높인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와 집결지 정비 기반 마련

□ 그간의 추진실적

- 집결지 성매매여성의 인권유린 방지 및 탈성매매를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의료·법률·직업훈련 등 지원(15개소)
- 심층상담 및 집결지 특성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간이쉼터를 제공(열린터 운영, 10개소)

<성매매 집결지 지원 실적>

(단위 : 회, 건)

연도	운영 개소	아웃 리치(회)	개별 상담(건)	집단 상담(회)	의료 지원(건)	법률 지원(건)	직업 훈련(건)
'20년 상반기	15	223	12,535	41	683	628	415
'19년	15	336	13,628	97	1,127	1,772	1,893
'18년	15	584	18,616	105	1,829	2,073	2,155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 사업 추진
 - * 성매매여성에 대한 현장상담,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서비스 제공
- 성매매집결지 '열린터' 운영
 - * 심리·위기 상담, 긴급피난처 및 단기쉼터, 집결지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실시 등
- 지자체별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현황 및 추진실적 조사(5월)

○ 예산 현황 : 기포함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집행되고 있음

○ 성과지표 : 해당없음

※ 성매매피해자 지원 실적에 포함됨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및 집결지 폐쇄 조치를 위한 관계부처 지속 협의

□ 기타 사항

○ 해당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담당자	조 린 서기관	전화번호	02)2100-6435
------	----------------	-----	---------	------	--------------

□ 과제개요

-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관련 법적근거의 일원화
 - 양성평등기본법 등 각 개별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의 근거규정 마련 등
 - *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그간의 추진실적

- 폭력예방교육 근거규정 마련(1999년~)
 - * 성희롱 예방교육(1999년, (구)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성매매 예방교육(2004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예방교육(2010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예방교육(2013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통합 폭력예방교육 근거규정 마련(2013년~)
 -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 실시
 - * 같은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14.7.2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14.9.28.)
-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법적근거의 일원화를 위한 연구 추진(~12월)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법적근거의 일원화 관련 사항 검토
- 예산현황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 해당사항 없음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법적근거의 일원화 관련 사항 검토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담당자	김대선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445
------	-------------	-----	---------	------	--------------

□ 과제개요

-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 이행점검 내실화
 -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 결과 모니터링 등을 통한 사후 관리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 (추진절차)
 - 여성가족부 : 예방교육 운영지침 수립, 예방교육 점검(서면, 현장점검), 강사 양성,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부진기관 특별교육 및 언론공표 등
 - 각 기관 : 폭력예방교육 실시, 예방교육 추진실적 제출

□ 그간의 추진실적

-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의 예방교육 실적 점검 체계화(’14년~)
-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15년~)
 -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관별 맞춤형 개선책 제시
 - * (’18년) 여가부 364개, 주무부처 특별점검 1,942개 → (’19년) 500개 → (’20년) 480개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예방교육 취약기관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400여 개 기관)
 - 컨설팅 후 모니터링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현장점검 및 컨설팅)	329	299	329	-	-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현장점검 대상 기관	480개	400개	현장점검 결과 보고서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공공기관 예방교육 실적에 대한 이행점검 내실화 지속 추진
 - 제출실적에 대한 서면점검, 기관 방문을 통한 현장점검 및 기관별 맞춤형 개선책 제시, 사후관리 강화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담당자	김대선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445
------	----------------	-----	---------	------	--------------

□ 과제개요

- 폭력예방교육 전문인력 확대 및 질 제고를 위한 전문강사 양성과정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그간의 추진실적

○ 폭력예방교육 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

- 성평등 관점을 바탕으로 젠더에 기반한 여성폭력 예방교육의 전문적 수행이 가능한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 확대
 - * 활동인원 : ('17) 78명 → ('18) 166명 → ('19) 416명 → ('20.8월) 715명
- 젠더기반 여성폭력 예방교육 전문 수행인력 양성과정 운영 (91회, '20.10월 기준)
- 지역·특수직군 연계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9회, '20.10월 기준)
 - * 문화예술계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재위촉 보수과정
- 전문강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181회, '20.10월 기준)
 - * 강의 모니터링(168회), 맞춤형 전문강사 보수과정(12회), 전문가 이슈포럼 개최(1회)
-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DB(전문강사뱅크 사이트) 구축·운영
- 국가자격 신설 등 강사 자격요건 강화 검토
 - * 폭력예방교육 등 강사 국가자격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20.5월~) 추진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 (강사양성) 폭력예방교육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 (역량강화) 강의 모니터링, 맞춤형 전문강사 보수과정, 전문가 이슈포럼 등
-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DB(전문강사뱅크 사이트) 구축·운영

○ 예산 현황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자체예산으로 운영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명)	715	850	사업결과보고서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다양한 분야의 역량 있는 폭력예방교육 강사 양성 확대 및 관리 강화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담당자	이세민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447
------	-------------	-----	---------	------	--------------

□ 과제개요

- 지역 현실과 이슈를 반영한 폭력예방교육의 지원을 위한 지역 기반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강화 및 성평등 교육과 추진 체계 연계 필요성 검토

□ 그간의 추진실적

- 17개 시·도별 학교, 직장 등에서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교육 소외계층과 집단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5,092회(교육인원 108,093명) 실시('20.11월 기준)
 - * 최근 3년 간 추진실적 : ('17년) 5,458회 → ('18년) 5,363회 → ('19년) 5,489회
- 지역 강사 관리체계 운영을 통한 지역 기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 강화 및 강의 품질 제고
 - * 17개 시·도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강사 DB 구축(총 908명) 및 역량강화 워크숍(137회) 실시
- 현장·대상 수요 반영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 보급
 - *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등을 위한 성인지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8월), 일반국민 대상 폭력예방 감수성 체크리스트 등 개발(~12월)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지역 수요·특성 반영 강화 및 성평등 교육과 추진 체계 연계 도모*
 - * 지역 양성평등센터 실시 교육과 연계 도모 등을 통한 교육 추진력 제고
- 예산 현황 : 기포함
 - *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 예산의 일부를 지역 기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에 집행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참여자 인식개선도(점)	83.6	83.7	사업결과보고서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지역 기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강화 및 성평등 교육과 추진 체계 연계 강화

□ 기타 사항

- 해당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담당자	이세민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447
------	-------------	-----	---------	------	--------------

3-4-1-⑥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및 교육 강화

□ 과제개요

- (사업목적)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아동·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체험 중심의 성교육으로 올바른 성지식 및 정보제공
- (주요내용) 체험관 및 이동형 교육장을 활용한 청소년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그간의 추진실적

- 아동·청소년 대상 성인지적 성교육 실시
 - * 청소년성문화센터 58개소(고정형47, 이동형11) : '20년 1,031천명 교육
- 청소년성문화센터 노후 교재·교구 교체 지원('20년, 20개소)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아동·청소년 특성에 맞춘 청소년성교육 실시 및 노후 교구 교체 지원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치료재활(청소년육성기금)	5,568	5,568	5,669	101	1.8
국비					
• 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4,532	4,532	4,570	38	0.8

○ 성과 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아동·청소년 성교육 참여인원	1,031천명	2,268건	○ 최근 5년간 실적치의 베타분포 방식 표준치에서 0.5% 상향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담당자	최호정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403
------	--------------------	-----	---------	------	--------------

□ 과제개요

-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올바른 성 가치관 정립하고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성 인권 교육’ 확대 추진

□ 그간의 추진실적

- 학교 아동·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성 인적 관점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통합한 교육 실시
 - * 최근 3년간 실적 : 8개시도, ('18) 15,198명 → ('19) 15,365명 → ('20.10월) 9,684명
- 자기 보호 및 인지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성 인권 교육 실시
 - * 최근 3년 간 실적 : 17개시도, ('18년) 2,824명 → ('19년) 2,859명 → ('20.10월) 1,518명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학교 아동·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성 인적 관점의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함양 및 성폭력 예방
 - * 실시지역 : 8개시도, 초·중·고 전 학년 대상, (목표) 14,400명
 -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성 인권 교육 실시
 - * 실시지역 : 17개시도, 특수학교 및 장애·비장애 통합학급, 유형별 확대, (목표) 2,700명
- 예산 현황 : 기포함
 - * 세부사업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에 포함되어 집행되고 있음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10월)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성 인권 교육 실적(명)	11,202	17,100	사업결과보고서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학교 및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내실화 및 지속 실시
 -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확대 지속 추진
 - 장애 유형 확대 통한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활성화 추진

□ 기타 사항

- 해당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담당자	이승철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446
------	-------------	-----	---------	------	--------------

□ 과제개요

- 교육내실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맞춤형 콘텐츠 제공
 -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 * 웹드라마, 1인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 활용 및 모바일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 등
 - 대상별 눈높이에 맞춰 기본·심화 등 단계별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디지털 성범죄, 미투 운동 등 최신 정보를 반영한 핵심 콘텐츠 제공
 - 경찰, 검찰 등 법 집행 과정에서의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지원
 - * 표준 강의안(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용), 예방교육 동영상 제작

□ 그간의 추진실적

- 성인지적 관점이 강화된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및 대상 맞춤형 교육자료 지원
 - *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등을 위한 성인지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8월), 폭력예방교육 표준 콘텐츠 및 일반국민 대상 폭력예방 감수성 체크리스트 등 개발(~12월)
- 수사기관 대상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 강의안 및 교재 등 개발(12월)
- 분야별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자체 제작 콘텐츠 및 타부처·민간 기관이 개발한 콘텐츠를 추천콘텐츠로 선정·보급

<추천콘텐츠 제공 현황>

(’20년 10월, 단위 : 종)

구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통합교육
총 250종	99	23	18	17	93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예방교육통합관리(shp.mogef.go.kr)시스템 등을 통해 보급

□ 2021년도 시행계획

○ 대상별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 기관장 등 고위직을 대상으로 위계·위력에 의한 인식차 및 성인지 감수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 소규모 토론 및 상황별 문제해결 프로그램, 2차 피해 방지 등

- 초·중·고 대상 디지털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및 보급

○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차 피해 감수성 제고를 위한 콘텐츠 개발 추진

- 성인지 감수성 제고, 2차 피해 개념 및 사례, 2차 피해 방지조치 등

○ 예산 현황 : 기반영

※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과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에 포함되어 집행되고 있음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여성 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관련 맞춤형 콘텐츠 개발	20종	20종	예산 및 콘텐츠 개발 계획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생애주기별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지속 개발 및 보급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담당자	양승초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444
------	----------------	-----	---------	------	--------------

□ 과제개요

- 여성폭력 예방·홍보 강화(여가부)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신규 실시('19년~)
 - 폭력 유형별 예방 홍보 영상 제작 및 방송사업자 등 송출 요청
 -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 이주여성 인식개선 및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20년~)
 -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홍보·캠페인 전개

□ 그간의 추진실적

-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
 - 성희롱·성폭력 근절 인식개선 콘텐츠 제작 및 확산
 - * 웹포스터(5월~12월), 전광판 메시지(5월,11월~12월), 퀴즈 및 공유 이벤트 개최(6월, 10월, 11월), 웹툰(7월~12월), 홍보 동영상 및 MBC TV 광고 송출(6월~12월), 인식개선 공모전 개최(6~10월), 공모전 스토리보드 영상(10월~12월), 공모전 수상작 전시(10~11월) 및 페이스북, 유튜브 광고 게시(11월~12월), 디지털 성범죄 체계적 지원 방안 및 국제협력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11.15.)
- 여성폭력 추방주간 계기 다양한 행사와 언론 홍보 등을 통해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 전개
 - 여성긴급전화 1366 홍보 영상 송출(유튜브, 버스 등) 및 가정폭력 근절 셀럽(연예인 등) 캠페인 홍보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정책 홍보 동영상 제작·송출(유튜브) 및 이주여성 폭력예방 안내서 제작·배포(13개 국어)
 - * 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우즈베키스탄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성희롱·성폭력·디지털 성범죄 근절 인식개선 콘텐츠 제작 및 확산
 - * 홍보물·동영상 제작, 캠페인, 이벤트 등 추진
-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 협업 홍보 추진
 - *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관련 부처별 정책 홍보, 홍보물 제작 및 확산, 캠페인 전개
-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홍보·캠페인 전개
- 여성폭력 추방주간 계기 다양한 행사와 언론 홍보 등을 통해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 지속 전개
- 이주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인권증진을 위해 일반국민 대상 이주여성 인식 개선 홍보, 폭력피해 이주여성 피해자 대상 지원 등 홍보 강화

○ 예산 현황 : 기반영

※ ‘성희롱 등 직장내 여성폭력 방지 및 지원’,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 및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집행되고 있음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참여자 인식개선도(점)	(신규)	70	사업결과보고서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담당자	신경식 서기관	전화번호	02)2100-6392
			유선혜 주무관		02)2100-6393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양현순 서기관		02)2100-6424
		최윤미 주무관	02)2100-6428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이세민 주무관		02)2100-6447

□ 과제개요

-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예방 및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하여 1년 중 1주간 여성폭력 추방주간(11.25.~12.1.) 운영

□ 그간의 추진실적

- 2020년부터 ‘제1회 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기존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과 통합하여 운영(11.25~12.1)
- 여성폭력 추방주간계기 온오프라인 여성폭력방지 캠페인 전개(11월~12월)
 - 대국민 슬로건 공모(10.16~25.), 기념식 및 토론회(11.25), 온라인 홍보관* 운영(11월~12월), 기념영상 및 포스터 대중교통 홍보(KTX, 지하철 등)
 - * 여성폭력 관련 정보 및 예방 영상 자료, 온라인 캠페인 운영 등
- 여성폭력 근절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여성폭력 예방 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식 개최 및 대국민 참여 강화를 위한 여성폭력방지 콘텐츠 공모전 실시
 - 여성폭력 추방주간(11.25~12.1.) 계기 광고 등 캠페인 실시
- 예산 현황 : 기반영
 -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사업’에 포함되어 집행되고 있음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여성폭력 추방주간 및 예방홍보 사업	1회	1회	사업결과보고서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여성폭력추방주간(11.25~12.1.) 전후로 여성폭력방지 홍보캠페인 추진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담당자	황별이 서기관	전화번호	02)2100-6306
			조정우 주무관		02)2100-6307

4-1-1-①

성폭력범죄의 보호법익을 ‘성적자기결정권을 해하는 죄’로 변경

□ 과제개요

- 성차별적 인식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젠더폭력을 방지
 - 「형법」 상 ‘강간과 추행의 죄’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변경

□ 그간의 추진실적

- ‘강간과 추행의 죄’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죄’ 또는 ‘성적 침해의 죄’로 변경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지원
 - * 박광온 의원안('17.7. 발의) 등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 폐기 / 현재 류호정 의원안('20.8. 발의) 국회 법사위 계류 중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형법」 상 ‘강간과 추행의 죄’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변경	관련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	관련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	검토 자료, 법률 개정

담당부서	법무부 형사법제과	담당자	이경화 검사	전화번호	02)2110-3564
------	-----------	-----	--------	------	--------------

4-1-1-② 비동의 간음죄 신설 필요성 검토

□ 과제개요

- 비동의 간음죄 신설에 관한 학계 등 전문가 의견 수렴, 해외 입법례 및 성폭력 범죄 처벌 법체계 연구 등 추진

□ 그간의 추진실적

-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검토 및 국회 논의 지원
 - * 홍철호('18.3. 발의) 등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 폐기 / 백혜련 의원안('20.7. 발의), 류호정 의원안('20.8. 발의) 국회 법사위 계류 중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및 해외 입법례, 논문 등 검토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비동의 간음죄 신설 필요성 검토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해외 입법례, 논문 등 검토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해외 입법례, 논문 등 검토	검토 자료

담당부서	법무부 형사법제과	담당자	이경화 검사	전화번호	02)2110-3564
------	-----------	-----	--------	------	--------------

4-1-1-③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 처벌 규정 개선 방안 마련

□ 과제개요

- 아동·청소년 성범죄 자료·해외 입법례 분석 등을 통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방안 마련
 - 법정형 강화, 처벌대상 확대, 공소시효 정지·폐지 등

□ 그간의 추진실적

- 입법완료 실적
 - '19. 8.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
- '20.5. ▲의제강간 연령 상향,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간음·추행죄 공소시효 폐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법정형 상향(벌금형 삭제하여 징역형만 가능) 등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성폭력처벌법」 개정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과제 완료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의제강간 연령 상향 입법 완료	관련 법안 검토, 국회 논의 지원, 입법 완료	(과제완료)	(과제완료)

담당부서	법무부 형사법제과	담당자	이경화 검사(형법) 김진우 검사(성폭법)	전화번호	02)2110-3564 02)2110-3695
------	-----------	-----	---------------------------	------	------------------------------

□ 과제개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서 ‘공박한 상태’에 관한 입증 실효성과 관련하여,
 - 형법상 의제강간죄가 현재 만 13세로 규정되어 있는 바, 해당 연령 상향과 관련한 형법상 개정 방향을 고려한 청소년성보호법의 종합적 검토 필요성 제기

□ 그간의 추진실적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제8조의2 신설('19.1월)
 - *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공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한 경우 처벌
- 형법 개정을 통해 의제강간 보호 연령 확대 완료('20.5월)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형법상 의제강간죄 보호 연령 상향 완료됨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개정 실익 검토
- 예산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담당자	차효인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405
------	-------	-----	---------	------	--------------

□ 과제개요

- 지나치게 복잡한 성폭력범죄 처벌규정을 통합, 정비하여 국민 입장에서 처벌 대상을 알기 쉽게 하면서 처벌의 공백이 없도록 하는 방안 검토
 - * 형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에 규정 분산

□ 2021년도 시행계획

- 「형법」, 「성폭법」상 성폭력범죄 처벌규정 통합안 마련 후, 사회적 여론, 국회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 개정 추진
 - * 현재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다양한 성폭력범죄 처벌 규정에 대한 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바, 성폭력범죄 처벌규정 통합 과제는 관련 개정 절차와 함께 구체적 논의를 진행함이 상당
 - * 여가부 및 국회 여가위는 「아청법」 내 처벌 규정 폐지에 강하게 반대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성폭력범죄 처벌규정 통합안 검토	관계부처(여가부 등)와 추진 방안 협의	관계부처(여가부 등)와 추진 방안 협의	검토 자료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관계부처(여가부, 국회 여가위) 의견, 해외입법례 등 확인 후 개정 입법 추진 검토
 - * 법무부 소관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상 처벌규정 통합안을 마련하되, 「청소년성보호법」까지 통합하는 방안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담당부서	법무부 형사법제과	담당자	김진우 검사	전화번호	02)2110-3695
------	-----------	-----	--------	------	--------------

□ 과제개요

- 성폭력 범죄의 행위 태양, 피·가해자 특성 등을 기준으로 각 법률(형법·성폭력 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등)에 구분되어 있는 처벌 규정 통합 검토

□ 그간의 추진실적

- 형법에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 관련 조문들을 삭제하고 형법으로 통합하는 개정안 발의(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18.8월, 20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 대한 논의 계속
- 예산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담당자	차효인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405
------	-------	-----	---------	------	--------------

□ 과제개요

- 의료기관 내 의료인 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복지부)
 -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개정 및 병원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교육 확대

□ 그간의 추진실적

- 의료인 성폭력 예방·관리를 위한 매뉴얼 마련
 -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복지부·병협 공동 발간) 하여 전국 병원에 배포('18.12월)
-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교육 실시
 -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의료기관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별 병원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실시('19.6월)
- 보건의료기관의 인권침해 대응지침 수립 및 사건 발생 시 조치 규정 신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19.10.24. 시행)

□ 2021년도 시행계획

-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개정 및 배포
 - 의료기관 내 폭행 관련 의료법 벌칙사항,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등 관련 법 변경사항 반영
- 예산 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개정 및 배포	-	매뉴얼 개정	해당없음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간호정책TF)	담당자	박성희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447
------	------------------------------	-----	------------	------	--------------

4-1-2-①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규정 강화

□ 과제개요

-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 대상 범위 확대
- 가정폭력 범죄 유죄 판결선고자에 대한 수강·이수명령 병과 규정 신설 및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

□ 그간의 추진실적

-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등 추가하고, 가정폭력 범죄 유죄 판결선고자에 대한 수강·이수명령 병과 규정 신설 및 불이행자에 대해 제재하는 내용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입법 완료('20.10.20. 공포, '21.1.21. 시행 예정)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과제 완료)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입법 완료	관련 법안 검토, 국회 논의 지원, 입법 완료	(과제완료)	(과제완료)

담당부서	법무부 형사법제과	담당자	김진우 검사	전화번호	02)2110-3695
------	-----------	-----	--------	------	--------------

4-1-2-② 가정폭력 가해자 수사 시 엄정한 조치

□ 과제개요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19.12.25.) 및 “젠더폭력방지 추진기반 구축 및 인식 개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대검찰청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 그간의 추진실적

- '19.3., '19.10. 여성·아동분야 타겟형 교육 실시
 - 2차 피해 방지 교육, 성폭력 사건처리기준 철저 준수 및 성폭력·아동학대 수사 시 유의사항 등 전국 여성·아동 전담검사 대상으로 타겟형 교육 실시
- '19.11. 대검찰청·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정폭력 공동연구 결과 발표
 -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8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초부터 전문연구검사와 실무협약을 통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분실태를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및 성별로 재구성하여 연구결과 발표
- '20.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건의
 - 가정폭력 사건의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검사 결정전조사 제도 도입
- '20.6.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개정
 - 가정폭력 상담(교육)위탁서 서식 개정

□ 2021년도 시행계획

- 가정폭력사범 처벌 강화
 - 가정폭력사범 사건처리기준 이행 강화 및 지속적 점검·개선하여 가정폭력 사범 엄정 대응
- 예산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가정폭력사범 기소율(%)	9.85% (‘20.01.~’20.10.)	9.9%	검찰통계시스템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법무부 형사기획과	담당자	이갑호 주무관	전화번호	02)2110-3271
------	-----------	-----	---------	------	--------------

□ 과제개요

- 가해자의 신속한 격리를 위해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 추가’
- 임시조치 유형에 ‘상담소 등에서의 상담’ 추가
- 임시조치 중 접근금지 조치의 내용을 특정장소(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에서 특정사람(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추가
- 임시조치 요청주체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에서 ‘가정구성원’까지 확대

□ 그간의 추진실적

- 응급조치 사항에 현행범인의 체포를 명시하고, 임시조치에 ‘상담소등에서의 상담 위탁’을 추가하며, 임시조치 중 접근금지 조치의 내용을 특정장소(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에서 특정사람(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추가하는 내용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입법 완료(’20.10.20. 공포, ’21.1. 21. 시행 예정)
-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의 신청자에 ‘가정구성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
 - 송기헌 의원 등 대표발의(’19.11. 및 ’20.9.)
 - * ’19.11. 발의법안은 20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후 ’20. 9. 재발의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과제완료)

- *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의 신청자에 ‘가정구성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경우 ’20. 9.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되었으나, ‘신청권자의 범위를 가정구성원까지 확대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실제적 필요성과 무관하게 절차가 남용되어 가정의 해체를 부추길 염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입법 내용에서 제외됨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입법 완료	관련 법안 검토, 국회 논의 지원, 입법 완료	(과제완료)	(과제완료)

담당부서	법무부 형사법제과	담당자	김진우 검사	전화번호	02)2110-3695
------	-----------	-----	--------	------	--------------

□ 과제개요

-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 부과로 처벌 강화
- 긴급임시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그간의 추진실적

-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 부과로 처벌 강화, 접근금지 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입법 완료('20.10.20. 공포, '21.1. 21. 시행 예정)
- 긴급임시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는 내용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
 - 송기헌 의원 등 대표발의('19.11. 및 '20.9.)
 - * '19.11. 발의법안은 20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후 '20. 9. 재발의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과제완료)

- * 긴급임시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의 경우 '20.9.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되었으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체포에 이르고, 긴급임시조치는 사법경찰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현행법인 체포나 긴급체포를 잠탈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입법 내용에서 제외됨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입법 완료	관련 법안 검토, 국회 논의 지원, 입법 완료	(과제완료)	(과제완료)

담당부서	법무부 형사법제과	담당자	김진우 검사	전화번호	02)2110-3695
------	-----------	-----	--------	------	--------------

4-1-2-⑤ 피해자보호명령 종류 및 기간 확대

□ 과제개요

- 자녀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자녀면접교섭권 제한’ 추가
- 피해자보호명령 기간(6개월 → 1년) 및 총 처분기간(2년 → 3년) 연장

□ 그간의 추진실적

- 피해자보호명령에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을 추가하고, 피해자 보호명령의 기간 및 합산 처분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입법 완료('20.10.20. 공포, '21.1.21. 시행 예정)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과제완료)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입법 완료	관련 법안 검토, 국회 논의 지원, 입법 완료	(과제완료)	(과제완료)

담당부서	법무부 형사법제과	담당자	김진우 검사	전화번호	02)2110-3695
------	-----------	-----	--------	------	--------------

□ 과제개요

-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재범 방지를 위해 가정폭력 범죄(폭행, 존속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여부 검토

□ 그간의 추진실적

- 가정폭력 범죄(폭행, 존속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검토 및 국회 논의 지원
 - 이태규('17.12.), 고용진('19.3.), 채이배('19.5.), 송희경('19.7.) 의원 등 대표 발의
 - * '18. 5. 이태규 의원안의 경우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 *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각 법안은 폐기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입법 추진 필요성 검토를 위한 연구·검토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할 필요성 검토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해외 입법례, 논문 등 검토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해외 입법례, 논문 등 검토	검토 자료

담당부서	법무부 형사법제과	담당자	김진우 검사	전화번호	02)2110-3695
------	-----------	-----	--------	------	--------------

□ 논의배경

-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 의사 존중 원칙*이 규정되어 있고, 「형법」에 폭행 등에 대한 반의사불벌죄**가 존재하여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수사 후 입건, 기소 등이 이루어지지 않음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가정보호 사건 처리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존속)폭행, (존속)협박, 명예 훼손

□ 필요성

- 피해자는 부부관계, 가족 문제, 경제적 문제, 보복 우려 등으로 가해자 처벌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기 어렵고, 폭력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학습된 무기력 증후군 등이 있을 수 있음
-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강력한 처벌을 통해 가정폭력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21년도 시행계획

-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수사 시 가정폭력 피해자 관점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강화(경찰청 협조)
 - 심각한 피해의 경우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 분리 조치
 - * 훈령 또는 내부 지침 시달 등을 통해 조서 작성 후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재차 묻지 않고 가해자 입건, 기소 등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도록 개선
- 법무부*와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배제 필요성 등 지속 협의
 - * 법무부는 일반 폭행·협박 등 범죄에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입장
- 예산 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가정폭력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건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건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건의)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법무부 등 가정폭력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필요성에 대한 분석·검토 등 지속 협의(계속)

□ 기타 사항 : 해당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담당자	최영호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422
------	-------------	-----	---------	------	--------------

□ 과제개요

- 스톱킹 죄목 신설 및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가해자를 처벌 하도록 규정
-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긴급잠정조치·잠정조치 규정 마련
- 스톱킹범죄 전담 경찰관·검사 지정 및 피해자 조사

□ 그간의 추진실적

- 스톱킹처벌법안 제정 추진
 - '18.5.10. 「스토킹 처벌법」 정부안 입법예고 실시
 - '18.6. 입법예고기간 중 제시된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 등 의견 반영·협의 진행
 - '19.9. 스톱킹 처벌법 법제처 심사 의뢰
 - '20.6. 법제처 심사 완료
 - '20.9. 차관회의 의결
 - '20.11.27. 재입법예고
 - * 차관회의 의결되었으나, 관련부처 이견 해소를 위해 추가 의견조율 진행
 - '20.12.24. 차관회의 의결('20년 연내 법안 제출 예정)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제출된 정부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 지원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2020년)	목표치(2021년)	산출근거
○ 스톱킹범죄에 대한 처벌법 제정	스토킹처벌법 제정 완료	스토킹처벌법 제정 완료	법률 제정

담당부서	법무부 형사법제과	담당자	김진우 검사	전화번호	02)2110-3695
------	-----------	-----	--------	------	--------------

□ 과제개요

-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를 “혼인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까지 적용 방안 검토

□ 그간의 추진실적

- 가정폭력의 정의에 데이트 관계를 포함하는 내용의 「가정폭력처벌법」 등 개정안 검토 및 국회 논의 지원
 - 박광온('17.8.), 표창원('17.8. ※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표창원('17.9. ※ 폭력행위처벌법), 신보라('17.11. ※ 「데이트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원 등 대표발의
 - * 박광온 의원안의 경우 '17.11.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 * 20대 국회 임기만으로 각 법안은 폐기
 - 윤영석('20.11. ※ 「데이트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원 대표발의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데이트 관계의 정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해외입법례 등을 토대로 21대 국회에 발의된 데이트 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가정폭력처벌법 적용범위를 동거관계까지 확대하는 방안 에 대한 검토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해외 입법례, 논문 등 검토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해외 입법례, 논문 등 검토	검토 자료

담당부서	법무부 형사법제과	담당자	김진우 검사	전화번호	02)2110-3695
------	-----------	-----	--------	------	--------------

□ 과제개요

- 합성사진(지인능욕), 딥페이크 영상물 등 개인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성적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검토

□ 그간의 추진실적

- 입법 완료
 - '20.3.5.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3.17. 개정 「성폭력처벌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20.3.24. 개정 「성폭력처벌법」 공포
 - * '20.6. 25. 시행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과제 완료)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관련 법안 검토, 국회 논의 지원, 입법 완료	(과제완료)	(과제완료)

담당부서	법무부 형사법제과	담당자	김진우 검사	전화번호	02)2110-3695
------	-----------	-----	--------	------	--------------

4-1-4-② 신중 온라인 여성폭력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검토

□ 과제개요

- 영상·사진外 온라인을 통한 문자 형태의 성폭력 등도 규제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초기 단계에서의 온라인 여성폭력 방지 강화

□ 그간의 추진실적

- '18.12. 불법촬영물 처벌 관련 「성폭력처벌법」 개정
 -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 처벌 규정을 신설
 -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여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되는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
 - 그와 같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벌금형 상한을 상향
 - 유포의 객체에 복제물을 추가
- '20.5. 중대 성폭력범죄에 대한 예비·음모 규정 신설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 완료
- 온라인그루밍을 처벌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토 및 국회 논의(여성가족위, 여성가족부) 지원
 - 권인숙('20.6.), 진선미('20.8.) 의원 등 대표발의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현재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 다각적인 성폭력범죄 처벌 규정에 대한 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으로서, 문자 형태의 성폭력이나 이를 포괄하는 '온라인그루밍' 등 신중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개정 법안에 관하여 국회 논의 지원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문자 형태의 성폭력 등 신종 온라인 여성폭력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검토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논문 등 검토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논문 등 검토	검토 자료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사회적 여론, 국회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추가 검토 사항 확인 및 검토

담당부서	법무부 형사법제과	담당자	김진우 검사	전화번호	02)2110-3695
------	-----------	-----	--------	------	--------------

4-1-4-③ 디지털 성범죄 기록물 삭제 비용 가해자 부과

□ 과제개요

-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게 불법영상물 삭제지원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 추진
 - * 관련 근거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 그간의 추진실적

- 불법촬영 및 유포 범죄 가해자에게 삭제지원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구상권 요청 근거 마련('18.9월)
- 구상권 청구시 필요한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근거 마련을 위한 '성폭력방지법' 개정 추진('19.11월)
 - * 20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 2021년도 시행계획

-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구형 및 선고현황 모니터링 추진
- 예산 현황 : 해당없음
- 성과 지표 : 해당없음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구형 및 선고현황 모니터링 추진

□ 기타 사항 : 해당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담당자	신경식 서기관	전화번호	02)2100-6392
------	----------------	-----	---------	------	--------------

4-1-5-①

온라인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행위 근절을 위한 법·제도 정비

□ 과제개요

- ‘온라인 그루밍’ 관련 정의·구성요건 등 종합적 검토 및 실제사례 등을 통한 범죄특성 현황 분석 등 추진

□ 그간의 추진실적

- 신종 온라인 성범죄 대응 관련 연구 2건 추진 등 ‘온라인 그루밍(성적 목적의 유인·길들이기)’에 대한 논의 추진
-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발의(권인숙('20.6월)·진선미의원('20.8월) 대표발의)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신설 추진(청소년성보호법 개정)
- 예산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담당자	차효인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405
------	-------	-----	---------	------	--------------

4-1-5-②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의 피해자화

□ 과제개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보호처분 폐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 등 지원·보호 강화

□ 그간의 추진실적

-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완료 ('20.6월 공포, 11월 시행)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성매매로 유입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발견, 긴급구조, 상담, 자립·자활 등 성인이 될 때까지 종합 지원하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구축·운영

* 중앙지원센터 및 지역전담지원센터(17개소) 설치

○ 예산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개정 완료	-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 여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담당자	차효인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405
------	-------	-----	---------	------	--------------

□ 과제개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서 ‘궁박한 상태’에 관한 입증 실효성과 관련하여,
 - 형법상 의제강간죄가 현재 만 13세로 규정되어 있는 바, 해당 연령 상향과 관련한 형법상 개정 방향을 고려한 청소년성보호법의 종합적 검토 필요성 제기

□ 그간의 추진실적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제8조의2 신설('19.1월)
 - *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한 경우 처벌
- 형법 개정을 통해 의제강간 보호 연령 확대 완료('20.5월)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형법상 의제강간죄 보호 연령 상향 완료됨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개정 실익 검토
- 예산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담당자	차효인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405
------	-------	-----	---------	------	--------------

□ 과제개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 그간의 추진실적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법적 용어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하고, 해당 범죄의 법정형 강화('20.6월) 등 추진 완료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검토(대법원 양형위원회, ~'20)

□ 2021년도 시행계획

- 해당사항 없음
- 예산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설정 완료	-	대법원 양형기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담당자	차효인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405
------	-------	-----	---------	------	--------------

□ 과제개요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특례 마련

-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민법 제766조 제3항 신설)
-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권리 행사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되어 미성년 피해자의 권리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 그간의 추진실적 : 과제 완결

- '18.3. 법무부, 범정부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중 하나로 미성년자 성적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유예 특례 도입 추진 결정
- '18.3.~5. 학계 의견 수렴 등 개정안 마련
- '18.6. 입법예고(6. 11.~7. 23.) 및 관계부처 협의(6. 11.~7. 9.)
- '18.8.31. 법률안 국회 제출(11. 9. 법사위 소위 회부)
- '18.11.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실, 법원행정처 법안 설명
- '19.3.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실, 주요 당 간사실 법안 설명
- '20.5. 21대 국회에서 법률 개정 재추진
- '20.5.~6. 입법예고(5.19.~6.8.) 및 관계부처 협의(5.19.~5.29.)
- '20.7.3. 법률안 국회 제출
- '20.9.24. 국회 본회의 통과
- '20.10.20. 개정 법률 조항(민법 제766조 제3항) 시행

□ 2021년도 시행계획

- 과제 완결(법률안 통과 및 시행)
- 예산 현황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국회 법안 통과(100점)	법률 개정	과제 완결	법률안 통과 및 시행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과제 완결. 이후 추진계획 없음.

□ 기타 사항

- 과제 완결

담당부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담당자	박상록 법무관	전화번호	02)2110-3733
------	---------------	-----	---------	------	--------------

□ 성매매 수요차단으로의 정책 전환

- 성매매 전담 수사체계 구축 및 지속적 단속 추진
 - 성매매 관련 국내외 유료직업소개소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지도·단속 (사업정지, 경고·시정조치) 강화

□ 그간의 추진실적

- 국내외 유료직업소개소,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직업안정법 위반사항 적발, 공익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 '20년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법 위반 120건 적발 (등록취소 18, 사업정지 16, 경고·시정 81, 과태료 5건)
 - '20년 직업정보제공사업 법 위반 50건 적발 (사업정지 35 경고·시정 15)
 - '20년 신고포상금 3건 지급 (거짓구인광고 신고포상 3건)
- * 성매매 관련 위반사례는 없음

□ 2021년도 시행계획

- 성매매 등 불법 근절을 위해 직업소개사업소 등에 대한 단속 및 자치단체 협력 강화
 - 자치단체 및 지방고용노동청 지도단속 강화 협조 지속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유흥업소 불법 구인광고 지도단속 강화 지속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취약계층취업촉진 (포상금)	10	1	5	△5	△50.0

* 예산은 직업안정법 위반 신고포상금에 대한 사업예산으로 순수 성매매방지 대책을 위한 예산은 아님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직업안정법 위반 적발(건수)	170	180	전년 실적 대비 5.9% 상향 조정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사항

○ 성매매 단속은 수사권이 없는 자치단체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추진함에는 한계가 있음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담당자	황현태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7333
------	-------------------	-----	---------	------	--------------

4-1-6-① 성매매 전담 수사체계 구축 및 지속적 단속 추진

□ 시·도경찰청 풍속수사팀 확대 운영 및 성매매 단속 강화

- (풍속수사팀 확대운영) △실업주 추적 △건물주 입건 △범죄수익금 환수 등 재영업 차단을 위한 사후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풍속수사팀 운영 확대

- 풍속수사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중 15개청 166명 운영 중, 단계적 확대추진
- 단속·수사체계를 일원화한 풍속수사팀 확대 운영으로 단속, 수사 부서에서의 반복 조사 등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침해 방지 추진

- 풍속수사팀 사이버수사 및 범죄수익금 추적수사 기법 등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강화

- (성매매 단속 강화) 온라인 이용 성매매 등 접근 경로 변화에 맞춰 테마별 (온·오프라인 성매매) 단속 및 범죄수익금 환수 등 근원적 차단 활동 추진
※ 청소년 대상 성매매 단속·수사는 국가수사본부로 업무 이관('20.11.19.)

□ 그간의 추진실적 ('20년)

- 시·도경찰청 풍속수사팀 확대 운영('19년 13개청 → '20년 14개청) 및 성매매 사범 집중단속으로 3,402건 단속, 9,738명 검거(구속 206명)
- 범죄수익금 환수 등 재영업 행위 억제 등 근원적 차단 활동 추진
※ 기소 전 몰수보전(452건, 238억), 과세자료 통보(528건, 2,335억)

□ 2021년도 시행계획

- (성매매 단속 강화) 성매매 플랫폼 변화에 맞춰 온라인 성매매 연중 상시 단속 및 관계기능·부처(여가부, 지자체 등) 합동단속으로 실효성 제고

온라인 성매매	① 성매매알선사이트 연계 오피스텔·성매매업소 단속, 채팅앱 성매매 단속(4~5월)
	② 성매매알선사이트 운영진 추적수사 및 사이트 폐쇄(연중)
	③ 성매매광고차단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성매매알선 광고 차단(연중)
오프라인 성매매	① 지역협의체(여가부·지자체·교육부 등) 합동 성매매집결지 등 점검·단속(연중)
	② 교육청·지자체와 협업, 학교주변 유해업소 철거·폐쇄조치(3월·9월)

- (근원적 차단 활동) △알선자 추적 △건물주 입건 △기소 전 몰수보전(추징보전 포함) △과세자료 통보(국세청) 등 불법 성매매업소 재영업 억제
- (풍속수사팀 역량 강화) △범죄수익금 환수 △성매매사이트 운영진 검거 등 성매매 단속 후 근원적 차단 활동과 사이버 수사역량 강화
 - ※ 풍속단속·수사 역량강화 교육과정 등 확대 (경찰인재개발원, 연 12회 180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성매매 사범 단속(건)	3,402	3,742	KICS 통계

담당부서	경찰청 생활질서과	담당자	송두한 경위	전화번호	02)3150-1396
------	--------------	-----	--------	------	--------------

□ 과제개요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19.12.25.) 및 “젠더폭력방지 추진기반 구축 및 인식 개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대검찰청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 최근 다양해지고 있는 성매매 범죄 유형에 적극 대응하고, 성매매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성구매자들의 처벌 환경 조성 필요

□ 그간의 추진실적

- '19.7. 대검찰청·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주최 포럼 개최
 - 전문연구검사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공동 연구진행하여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 모색 및 검찰 사건 처리 통계로 본 성폭력 무고 사건의 현황 등의 주제로 연구결과 발표

□ 2021년도 시행계획

- 아동·청소년 성구매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일선청 사건처리지침 송부 (연중)
 - 아동·청소년 상대 성매매행위 등은 원칙적 구공판하고, 대상 아동·청소년이 16세 미만이거나 재범인 경우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 원칙적 구속수사의 사건처리지침 준수를 지시하여 아동·청소년 상대 성구매자 엄정 대응
- 철저한 범죄수익환수로 범행 동기 차단(연중)
 - 성매매 알선 사범에 대한 철저한 몰수·추징 보전으로 범죄 수익 박탈, 동기 차단
- 예산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성구매자 기소율(%)	33.07% (‘20.01.~’20.10.)	34.0%	검찰통계시스템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법무부 형사기획과	담당자	이갑호 주무관	전화번호	02)2110-3271
------	-----------	-----	---------	------	--------------

□ 과제개요

- (사업목적)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상담소, 보호(지원)시설 등 폭력유형별 지원 인프라 확대로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및 서비스 내실화 도모
- (추진체계) 여성가족부(예산 편성 및 배정) → 시·도, 시·군·구(사업추진 및 예산집행관리)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피해자 상담 및 의료·법률 등 지원)
- (주요내용)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상담소, 보호(지원)시설 등 폭력유형별 지원 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

□ 그간의 추진실적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에 대한 온·오프라인 접근성 제고
 -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충을 통해 서비스 점점 확대
 - ※ (성폭력피해 상담소) '15년 159개소 → '19년 168개소, (해바라기센터) '15년 36개소 → '19년 39개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종사자 확대로 피해자 지원 서비스 내실화('19년)
 - ※ 성폭력피해 상담소(104명),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30명), 해바라기센터 간호인력(39명)

□ 2021년도 시행계획

- 여성폭력 피해자 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피해자 접근성 제고(연중)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일반) 1개소('19년 16개→'20년 17개), 자립지원 시설(일반) 1개소('19년 2개→'20년 3개) 확대
 -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신규설치 1개소를 통한 피해자 지원 강화
 - *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수사 및 법률,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

○ 예산 현황 : 기반영

※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포함되어 집행되고 있음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에 대한 온·오프라인 접근성 제고 지속 추진
-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지속 확대 추진(예정)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담당자	서진희 사무관 장좌영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396 02)2100-6397
------	-------------	-----	--------------------	------	------------------------------

□ 과제개요

- (사업목적)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전반적인 지원서비스의 수준 제고
 -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소진방지 등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적정한 근로환경 제공
- (추진체계) 여성가족부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위탁사업 수행기관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 (주요내용) 종사자의 유형별, 경력별 맞춤형 보수교육 실시 / 종사자 처우개선 및 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

□ 그간의 추진실적

- 여성폭력 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운영('20.10월말 기준 3,114명 수료)
 - * 교육대상 :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1366센터,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이주여성 지원시설 종사자
 - ** 코로나19로 온·오프라인교육 병행('20.10월말 누계 112개 과정 운영)
- 여성폭력 방지시설 종사자 대상 스트레스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소진방지 및 사기진작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대상 스트레스 치유프로그램 운영
 - * 4회, 60명 참여('20년 하반기 운영)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통해 여성폭력 지원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연중)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대상 스트레스 치유프로그램 운영(하반기, 40백만원)
- 예산 현황 : 기 반영(3-3-1-② 과제 예산현황에 포함)
 - ※ 종사자 보수교육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예산으로 추진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수료자 수(명)	3,114 ('20.10월말 기준)	3,610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보수교육 수료자 합계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통해 여성폭력 지원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지속 추진
- 피해자 지원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한 종사자 스트레스 누적, 소진 방지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담당자	서진희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398
			장좌영 주무관		02)2100-6397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김윤경 사무관		02)2100-6425
		이운혁 주무관	02)2100-6426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조 린 서기관	02)2100-6435	
			송혜진 주무관	02)2100-6449	

□ 과제개요

- 공공·민간 구분 없이 지원내용 등에 대한 초기상담 및 사건 발생기관에 조직 문화개선을 위한 컨설팅 위원단을 파견하여 자문 실시

□ 그간의 추진실적

- '20.1월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출범(1.7)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 센터' 설치*
 - * 인권보호본부 내 1팀 체재
- '20.3월 : 종합지원센터 본격 운영(3.24.), 조직문화개선 컨설팅&사건처리 지원단 접수·공모
- '20.12월 : 익명상담 2,817건 접수, 신고사건 접수 118건, 피해 지원기관 연계 1,547건*, 각 부처 및 유관기관 지원 96회
 - * 상담소 819건, 법률 569건, 의료 159건

□ 2021년도 시행계획

- 익명 상담전화(735-7544) 운영
 - 분야별(민간·공공, 기관장 신고), 피해 유형별(성희롱·성폭력·2차 피해) 맞춤형 정보 제공
- 신고 및 지원기관 연계
 - 사건처리 가능한 분야별 신고센터 및 성폭력 상담기관, 법률·의료·노무 지원 기관 연계
-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 사건발생 기관, 기관신청 접수 기관 등에 컨설팅 위원단 파견

○ 사건처리지원단 운영

-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자체 해결이 어려운 사건 발생 기관에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처리지원단 파견

○ 예산 현황 : 비예산(한국여성인권진흥원 출연금 재원으로 추진)

○ 성과지표 : 해당 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점검관리팀	담당자	유재민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162
------	----------------	-----	---------	------	--------------

4-3-1-① 여성폭력 전반에 대한 기본법 시행

□ 과제개요

-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의 통합적 추진체계 마련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19.12.25.)**
 - △여성폭력, 2차 피해 등 정의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신설 △실태조사, 통계체계 구축, 2차 피해 방지 등 시책 규정 등 포함

□ 그간의 추진실적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정, 시행('19.12.25)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에 따른 각종 후속조치를 위한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사업’ 운영('20년 신규, 592백만원)**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4) 및 2020년 시행계획 수립(세부내역 4-3-1-② 참고)
 -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세부내역 4-3-2-① 참고)
 - 여성폭력통계 및 실태조사 사전연구, 2차 피해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2차 피해 방지지침 표준안(국가, 지방자치단체용) 제작을 위한 연구수행(~20.12월)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점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 △여성폭력 실태조사, 통계체계 구축, 업무관계자 2차피해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배포 등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일반회계)	592	(집행중)	1,865	1,273	215.0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	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계속)

□ 기타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담당자	정보희 사무관 김보람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382 02)2100-6383
------	----------------	-----	--------------------	------	------------------------------

□ 과제개요

- 젠더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체계의 범부처 통합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이행점검의 주기적 환류를 통한 정책 이행력 제고
 - 5년 단위 범부처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에 따른 부처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의 체계적인 환류체계 구축

□ 그간의 추진실적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심의·확정('20.2월)
- 2020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20.5월)
 - * 18개 부처 128개 과제, 17개 시·도 시행계획 확정
- 2021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지침 통보('20.10월)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2021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21.3월)
 -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 기준 마련 및 부처, 지자체에 2020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세부내용 제출 요청('21.4월)
 - 2020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 결과 공유('21.10월)
 - 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세부과제 이행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2022년 시행계획 수립 지침 보완 및 통보('21.10월)
- 예산 현황 : 기포함
 - *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에 포함되어 집행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2020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	-	분석·평가 실시	결과보고서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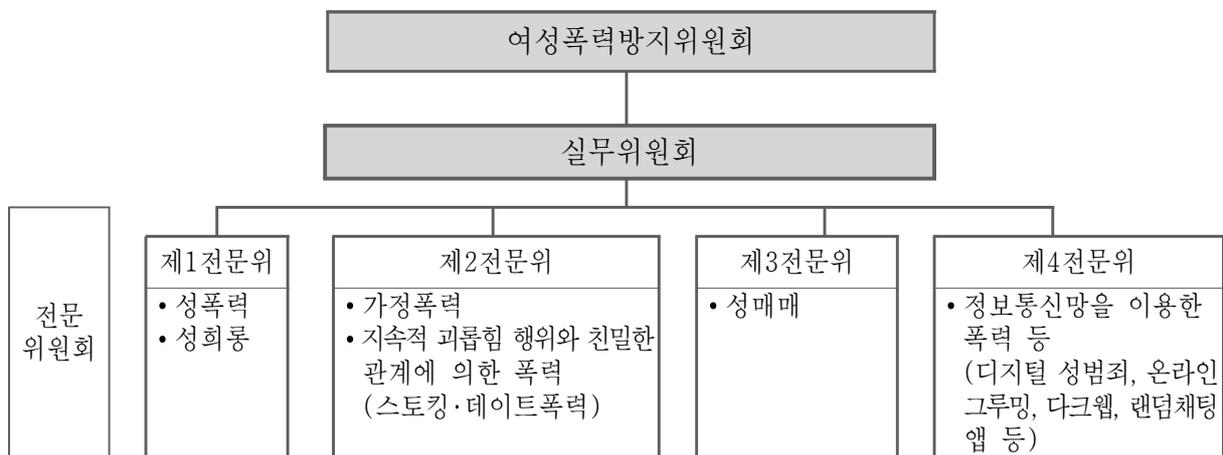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를 통한 세부과제 이행점검
- 분석·평가 결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

□ 기타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담당자	황별이 서기관 조정우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306 02)2100-6307
------	----------------	-----	--------------------	------	------------------------------

□ 과제개요

-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운영
 - 여성가족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민간위원 참여로 민관 거버넌스 구축, 부처 간 연계·협력을 통한 각종 대책 종합검토



□ 그간의 추진실적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및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대검찰청, 경찰청

**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 대표성 여부 및 성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 고려 총 12명(여성 7명, 남성 5명)으로 구성(임기 : 2년)

- (운영) : 여성폭력 방지대책 관련 현안논의 등 필요 시 운영

* 제1차('20.2.20)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안) 및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계획(안)

* 제2차('20.5.21) 20년도 시행계획(안)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부처별 현황 및 이행계획

* 제3차('20.11.6)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전문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 등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산하 폭력유형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 (개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상 여성폭력 정의를 기반으로 4개로 구분, 운영

- ① 성폭력·성희롱, ② 가정폭력 및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③ 성매매,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

- (운영)

구분	일시	안건
제1(성희롱·성폭력), 제4(정보통신망 이용 폭력) 전문위원회	'20.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과제 이행점검 등 ○ 21대 국회 미투 법안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 주요 부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점검 결과 ○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처벌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공유 금지 관련 검토
제2(가정폭력) 전문위원회	'20.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시기,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 방안 ○ 가정폭력 사건 현장 대응력 강화 방안
제3(성매매) 전문위원회	'20.9. 16~29 (서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별 성매매방지 실적 및 추진계획 ○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방안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위원회 운영(연중)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년		2021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일반회계)	592	(집행중)	1,865	1,273	215.0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6회 개최	연간 4회 이상	공문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위원회 운영(연중)

□ 기타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담당자	정보희 사무관 김보람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382 02)2100-6383
------	----------------	-----	--------------------	------	------------------------------

□ 과제개요

- 여성폭력 관련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개발, 종사자 교육, 각종 서비스 연계, 지원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종합적으로 수행

□ 그간의 추진실적

- 특수법인 설립 법적근거(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 제정·공포('18.12.18)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특수법인 전환('19.12.19)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피해자 지원시설 연계망 구축 및 협력

- 피해자 지원시설 네트워크 구축
 - 여성폭력피해 지원기관 간 연계망 활성화
 - 피해자 지원 정책·제도 제안 등을 위한 유관기관 워크숍 실시
 - 전문가 자문 및 전담팀 운영을 통한 위기 개입 및 대응 강화
- 피해자 지원시설 기관역량 강화
 - 지원역량 상향 표준화를 위한 시설별 맞춤형 컨설팅 확대
 - 여성폭력 종합지원 정보 안내 및 지원사례 공유 확산
- 피해자 지원 통계 및 실적관리
 - 폭력피해 유형별 피해자 지원 실적관리

- 여성폭력방지 정책연구 및 홍보

- 여성폭력방지 정책연구
 -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 여성폭력 예방 및 홍보
 -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대국민 참여형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여성폭력 피해 지원에 대한 대국민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홍보물 제작·확산

- 여성폭력방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여성폭력 사이버상담 시스템(24시간) 운영을 통한 피해 상담 접근성 향상
- 해바라기센터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한 해바라기센터 업무효율화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피해자 지원 강화

- 종사자 교육 및 역량강화

- 여성폭력피해자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운영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종사자 보수교육 운영
- 종사자 대리외상 해소 및 소진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여성폭력 방지 종합교육 체계 수립 및 교육내실화를 위한 연구 추진

- 여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 디지털 성범죄 대응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 확대
- 성폭력 등 발생기관 재발방지
 - 피해자 관점의 사건처리지원이 가능하도록 기관의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컨설팅 파견 및 사건처리지원단 운영
- 여성긴급전화1366 중앙센터 운영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문제연구 등

- 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소 운영
 - 일본군‘위안부’ 관련자료 조사 및 교육홍보 등 실시
- 일본군‘위안부’ 문제관련 민간단체 공모사업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기념사업 실시
- 일본군‘위안부’ 문제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 여성인권과 평화 국제 컨퍼런스
 -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아시아 분쟁지역의 전시 성폭력 문제와 함께 학술적으로 조망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일반회계)	10,669	10,669	14,574	3,905	36.60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성폭력 등 재발방지 컨설팅 파견기관 수(개소)	94	200	부처 및 외부 신고센터 이관·연계, 컨설팅 신청기관 대폭 상승으로 도전적 목표치로 선정

※ 성과지표 변경 :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수혜자 만료('20) → 성폭력 등 재발방지 컨설팅 파견기관 수(개소)('21)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담당자	황별이 서기관	전화번호	02)2100-6306
			조정우 주무관		02)2100-6307

□ 과제개요

- (사업목적) 지역사회 단위 가정폭력 등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상담소·보호시설 등 지원시설과 지자체, 경찰 간 연계 지원 및 현장 중심의 정책 제도 개선방안 도출
- (사업대상) 가정폭력 등 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보호시설), 경찰(지방청, 경찰서)
- (주요내용) 가정폭력 등 전반에 대한 사건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가정폭력 등 피해자 지원시설, 지자체, 경찰 대상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 운영 방안 및 정책·제도 개선 방안 도출

□ 그간의 추진실적

- 지자체 및 경찰청, 가정폭력 등 피해자 지원시설 등이 참여, 피해발생 초기 대응 및 피해자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권역별 협업 워크숍 추진('20년 총 17회, 시·도별 각 1회)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기획·사전 조사) 지역사회 내 피해자 지원 전달체계에서 기관의 역할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피해자 지원 협업 방안과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 (협업 워크숍) 여성폭력 피해 유형별 가정폭력 등 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및 경찰 등 대상 협업 활동을 통한 정책·제도 개선 방안 도출

○ 예산 현황 : 기포함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에 포함되어 집행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권역별 협업워크숍 추진	17회	17회	광역시·도별 1회(전국단위)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권역별 협업워크숍 추진을 통한 전국단위 워크숍(각 1회) 지속 추진 등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담당자	최영호 사무관 박윤호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422 02)2100-6423
------	----------------	-----	--------------------	------	------------------------------

4-3-4-① 여성폭력 통계 구축

□ 과제개요

-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12월 시행)」 상 여성폭력 발생·피해·지원 등 여성폭력 통계를 수집·산출하여 공표
 - * △ 여성폭력 통계 범위·목록 분류 및 체계 구성, △ 관련 통계 수집·산출 및 관리, △ 홈페이지 등에 알기 쉬운 형태로 여성폭력통계 정보 제공

□ 그간의 추진실적

- 여성폭력 통계 구축 및 운영 위탁 추진을 통한 ‘여성폭력 통계 지표 체계(안)’ 마련(’20년)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관련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여 공표 가능한 여성폭력 통계 지표체계* 확정 후 작성 지침 통보, 기관별 통계 생산
 - * 여성폭력 발생·피해·지원관련 하여 수집·산출·공표 가능한 여성폭력 통계 범위·목록 분류
- 예산 현황 : 기포함
 - *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에 포함되어 집행되고 있음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여성폭력 통계	목록·체계(안) 마련	작성지침 통보	공문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통계 지표체계에 따라 각 기관으로부터 관련 통계 수집·분석 후 공표(2022년 예정)

□ 기타 사항

- 여성폭력 발생통계의 경우, 신고·수사·재판 단계에서의 정확한 통계 생산·관리가 필요하므로, 관련 부처·기관에서의 협조 필요
 - 특히, 여성폭력 중 개별법이 제정되지 않은 범죄의 경우, 필요 시 정책적으로 관련 통계 생성·관리하여 현안 대응력 제고 필요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담당자	황별이 서기관	전화번호	02)2100-6306
			조정우 주무관		02)2100-6307

□ 과제개요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19.12.25.) 및 “젠더폭력방지 추진기반 구축 및 인식 개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대검찰청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 그간의 추진실적

- '19. 7. 대검찰청·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주최 포럼 개최
 - 전문연구검사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공동 연구진행하여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 모색(범죄분석 개선을 위한 성폭력 관련 통계 재정비) 및 검찰 사건 처리 통계로 본 성폭력 무고 사건의 현황 등의 주제로 연구결과 발표
- '20.5. 디지털·성착취물 관련 성범죄 사범 통계 구축
 - 기존 검찰통계사무규정 내 성폭력사범의 일부로 분류되었던, 디지털·성착취물 관련 성범죄사범을 단일사범으로 분류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 허위영상물반포,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음란물제작·배포 등) 7개 대표죄명으로 구성하여 통계 구축

□ 2021년도 시행계획

- 여성폭력 통계 구축(연중)
 -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 제·개정에 따른 새로운 여성폭력 통계 마련
- 유관기관과의 공동 연구 등 협업시스템 강화(연중)
 - 여성폭력 통계 개선 방안 연구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여성 폭력 통계 개선 방안 공동 연구
- 예산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여성폭력통계 신설(건)	1	1	검찰통계시스템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사항

○ 현재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선 사업 진행으로 별도의 검찰통계시스템 개선 어려움

담당부서	대검찰청 형사기획과	담당자	이갑호 주무관	전화번호	02)2110-3271
------	---------------	-----	---------	------	--------------

4-3-4-① 여성폭력 통계 구축

□ 과제개요

- 법무부 주요업무영역(검찰, 범죄예방, 교정, 출입국관리)의 여성폭력 관련 통계 현황을 파악하여, 양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그간의 추진실적

- 2000년부터 격년 발간
- 2005년, 연구용역 실시(『법무부 여성통계 체계개편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2018년, 통권 제10호 발간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법률용어를 반영하여 통계자료집 명칭을 『법무부 여성통계』에서 『법무부 성인지 통계』로 변경
 - *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성인지 통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 '21.2월 말 통권 제11호 발간 예정
- 여성폭력 관련 항목 발굴 추진

○ 예산 현황 : 해당없음

- * 성인지 통계는 격년 발간사항으로 별도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함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여성폭력 통계항목 개편(회)	-	1회	- '20년에 통계자료를 취합하여 '21년 2월말 발간 예정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2022년, 통권 제12호 발간 예정

담당부서	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담당자	김승권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3994
------	-------------------	-----	---------	------	--------------

4-3-4-① 여성폭력 통계 구축

□ 과제개요

- 경찰청 여성관련 통계 현황을 파악, 여가부 여성폭력 통계 구축사업 관련 부처간 통계 지표 등을 공유하여 여성안전 정책 추진에 기여

□ 그간의 추진실적

- 발생·검거·피의자 통계원표를 취합, 분석하여 경찰청 범죄통계 발표(연 1회)
 - '10~13년 경찰·검찰·형사정책연구원·한남대 등 공동 개선안 연구 추진
 - '15년 경·검 실무 협의체 구성 및 원표개선안 마련 합의
 - '17년 경·검 실무 협의안 완성 후 분류 개선

□ 2021년도 시행계획

- 여가부 등 유관 부처간 협의 체계 강화
 - 여성폭력 통계지표 구축 사업 진행 중 요청사항 검토 및 협의 시 적극 협조
 - 향후 여가부 요청 통계 추출 및 부처간 통계체계 일치를 위해 필요 시 대검찰청·여가부 등 관련 부처 통계 시스템 책임자 간 협의 추진 요청
- 통계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ISP사업 추진
 - 정보화 전략 계획(ISP)에 따라 통계시스템 개선을 위한 전문기관 연구용역 추진·결과 분석 후 경·검 협의 초안 바탕, 여성대상범죄 지표 등 개선 추진
- 예산 현황
 - 해당 없음
- 성과지표
 - 해당 없음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담당자	김지윤 경사	전화번호	02)3150-0904
------	----------------	-----	--------	------	--------------

4-3-4-① 여성폭력 통계 구축

□ 과제개요

- 성폭력 등 여성 관련 범죄통계의 신뢰도 제고
 - 여성 대상 범죄 현황 파악 및 예방 등 정책 수립 기초자료인 범죄통계의 개선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정부부처의 공동 대응 필요
 - 국내 범죄통계 문제점 파악 및 효율적인 통계 구축을 위한 한국범죄분류체계 개발 추진

□ 그간의 추진실적

- 여성 관련 범죄통계 분류체계 개발
 - 유엔마약범죄사무국(UNODC)의 국제범죄분류(이하 ICCS*) 채택 및 이행 권고에 따른 한국범죄분류체계(안) 개발 추진(1단계, '17~'20년)
 -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 성범죄(ICCS 대분류 03)를 포함한 한국범죄분류 개발연구('20)
- 여성 관련 범죄통계 작성기관 협력체계 구축
 - 범죄통계 관련 분류체계 개선, 국제범죄분류와 한국범죄분류체계 간 여성 관련 범죄 연계 타당성 검토, 자료 구축 및 활용을 위한 기관 협업* 실시
 - * '한국범죄분류체계 개발 T/F협의체 운영(성범죄 분야 등)'('20.7., '20.9., '20.11.), '통계청-대한범죄학회 한국범죄분류 공동 세미나'('20.11.),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한국범죄분류체계(안) 기반의 일반분류 제정 연구* 실시
 - * 국제범죄분류 11개 대분류의 범죄유형(대분류03 성범죄 등)과 연계된 국내범죄명의 적합성 검토, 신규 범죄명 추가방안 등 2단계 연구 추진('21~'23년)
- 예산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통계청 통계기준과	담당자	박현정 사무관	전화번호	042)481-2566
------	-----------	-----	---------	------	--------------

4-3-4-② 여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 과제개요

-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12월 시행)」상 여성폭력의 지역별·연령별·직업별 분포, 여성폭력의 발생원인·배경, 여성폭력의 유형·특성·빈도 등에 대해 조사*
* 관계 법률에 따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여성폭력에 관해 3년 주기로 실태조사 실시

□ 그간의 추진실적

- 문항 개발, 표본설계 등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사전연구 추진('20년)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기존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여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예산 현황 : 기포함
※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에 포함되어 집행되고 있음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여성폭력 실태조사	사전연구 실시	본조사 실시	연구보고서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2022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3년 주기 조사 실시

□ 기타 사항

- 여성폭력 실태조사 실시·공표를 위해 통계청과 협조 필요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담당자	황별이 서기관	전화번호	02)2100-6306
			조정우 주무관		02)2100-6307

□ 과제개요

- 기본계획 이행평가 및 정책 추진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

□ 그간의 추진실적

- 여성폭력방지정책 평가지표 신규 개발 및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를 위한 ‘여성폭력방지정책 전략센터’ 운영 예산 확보(150백만원)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 지표 개발

- 예산 현황 : 기포함

※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에 포함되어 집행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분석·평가 지표 개발	-	분석·평가 지표 개발	결과보고서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를 통한 기본계획 과제 이행평가
- 기본계획 과제 이행력 제고, 정책 추진 효과성 등을 고려한 분석·평가 지표 보완·개선

□ 기타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담당자	황별이 서기관	전화번호	02)2100-6306
			조정우 주무관		02)2100-6307